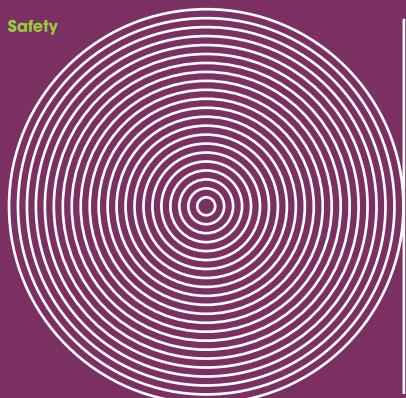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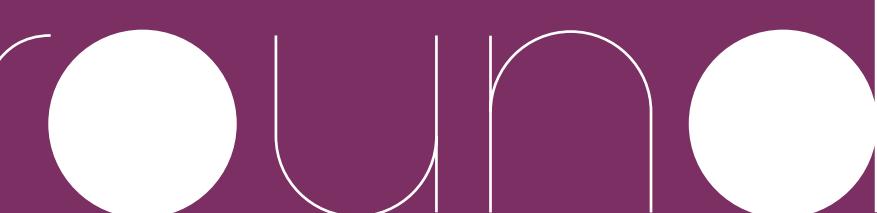
Safety



2016 - 2019

Variety

Happiness



Harmony

Balance



Creative

Culture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지널

Vol.25 - Spring 2017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현황과 전망

건축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자 우리나라 건축정책의 근간이 될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진단과 함께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목표와 추진 방향을 알아보고, 해외 건축정책 사례와 지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a u r i)

건축과 도시공간

Vol.25
Spring 2017

발행
2017년 3월 31일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발행인

김대익

편집책임

성은영

정책이슈 기획

김영현

편집

고효진, 이미영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편집부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기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표지

건축은 이제 '물리적인 터'라는 일차원적 의미를 넘어,
우리를 둘러싼 공간환경 전체로
그 범위와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공간을 누리고,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건축과 건축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곧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근간이 됩니다.



CONTENTS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현황과 전망

시론: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을 향하여	제해성	006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상호·김영현	010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생활, 산업, 문화를 아우르다	엄정희	021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신승수	030
프랑스의 LCAP법 제정과 국가건축전략 수립 -일상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시 건축에 주목하다	임유경	040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방법과 과제	이재훈·송하엽	049

통계자료실

사람들은 왜 한옥에서 살고 싶어 할까?	고영호	058
-----------------------	-----	-----

건축도시동향

해외동향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건축·도시 환경의 미래 프랑스의 '한시적 도시 계획'을 통한 도시재생 독일 함부르크 하렌시티 프로젝트의 명암	백경현 정희원 신희완	064 069 075
국내동향	민간임대주택의 최근 정책 동향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의 개편과 성과	김리숙 이여경	080 084
해외단신	런던,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외		090
국내단신	도시공간의 효율적·창의적 활용을 위한 '입체도로' 도입 외		096

세계의 건축·도시 싱크탱크

세계도시 베이징을 이끄는 싱크탱크, 베이징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조성찬	104
-----------------------------------	-----	-----

장소탐방

자유로운 문화 생산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작은 집들이 모인 아이들 마을 -홍성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Laurent Pereira·최성희 김지혜·이영선	112 128
--	--------------------------------	------------

auri 소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 2017 건설산업정책 공동세미나 개최
- 20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Accomplishments & Tasks of
Basic Plans for Architectural Policy

정책이슈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현황과 전망

1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건축 관련 부문별 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으로 역할하게 된다.

「건축과 도시공간」 2017 봄호에서는 우리나라 건축정책의 근간이 될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함께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해외의 최신 건축정책 사례, 그리고 향후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서울민주주의 도시

A collage of several Korean tourism posters for Seoul, featuring various landmarks and text in Korean.

균형있는 일체도시 서울 건축문화
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

펠르랭 장관의 국가건축전략 발표 장면
(2015.10.20, 파리 벨빌 국립 고등 건축 대학)

시론: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을 향하여
006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성과와 발전 방향
010

시론: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을 향하여 | 지금 우리가 선택하여 만드는 건축과 공간환경은 우리 후대에게 훌륭한 자산을 물려준다는 적극적인 소명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건축정책이 미래기술과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건축 관련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발전 방향 | 건축정책 자체와 기본계획의 실효성이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건축계에 많은 변화와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건축이 국민 삶의 질을 디자인한다는 측면에서 건축정책에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 생활, 산업, 문화를 아우르다 |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되새기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다양한 관계부처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생활·산업·문화를 아우르는 건축도시공간이 구현되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 네덜란드는 1991년 세계 최초로 건축정책을 입안한 이후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는 양질의 공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건축 관련 기반시설과 제도를 유지하고, 통합적인 공간계획으로 품격 있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며, 좋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발주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LCAP법 제정과 국가건축전략 수립 - 일상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시 건축에 주목하다 | 프랑스에서는 국가 차원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로서 건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이 공공의 자산이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모토 아래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건축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방법과 과제 |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 따른 건축적 노력을 인정하면서, 보다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건축적 정책을 유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에 필요하고 건축 및 관련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의 정책적 제안도 진행한다.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생활, 산업,
문화를 아우르다
021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030

프랑스의
LCAP법 제정과
국가건축전략 수립
-일상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시 건축에 주목하다
040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방법과 과제
049

국민이 행복한 건축정책을 향하여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건축의 시작

「건축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건축문화의 진흥과 국민 삶의 질,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기본법」의 제정은, 당시 개발과 토건 시대 건축가치에 대한 종식 선언이나 다름없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동안 건설과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있던 건축은 대부분 사업과 재산가치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나 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물과 이를 둘러싼 공간환경이 국민의 생활터전으로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건축기본법」이 건축의 공공성을 강조함에 따라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 환경 전반의 수준이 사용자인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었고,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정책의 그림은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조직되어 그 내용을 심의하고 원활한 작동을 견인해 왔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이 그 첫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렇게 ‘새로운 건축은 시작’ 되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과 건축 환경의 변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후 5년여 동안 기본계획이 건축계 전반에 미친 영향은 팔목할 만하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해 건축 관계 법령이 정비되고 각종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정책인프라가 강화되었으며,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와 건축기준도 정비되었다.

특히 공간환경과 건축물의 지속가능한 가치 추구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3.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4.6.) 등이 새로 제정되었고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2013.8.), 건축문화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2013.6.)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 등 정책 목표에 따른 체계적 제도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건축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 선도의 다양한 시범사업으로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54건), 도시재생선도사업(13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38건) 등이 적극 추진되었으며 건축서비스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건축정책의 추진으로 저성장 국면과 주택공급 수요의 하락 등으로 인해 침체된 건설시장은 녹색 건축 및 건축서비스 산업, 건축자산, 마을재생 등의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평가사와 마을건축가 등 새로운 업무영역도 개척되었으며 건설산업 중 건축업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건축시장이 점차 다변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건축정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건축과 환경의 질에 대한 인식과 수요에 대한 측면에서 일어났다. 주택의 보유 가치보다는 이용 가치^{**}를 우선하게 되었고, 공간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다. 증가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거보다는 필요와 기호에 맞게 고쳐서 사는 일에 일반적인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다.

최근에는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전시·출판 분야에서도 내집 짓기, 우리 동네 가꾸기를 다룬 프로그램과 서적들이 각광받고 있다. 즉 건축이 주변인의 삶과 사회를 관통하는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건축정책의 효용과 건축문화의 가치

물론 이러한 성과들이 모두 건축정책 기본계획으로부터 기인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하고 선도해 온 건축정책의 방향에 수렴해 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건축과 공간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가하며, 또한 건축과 관련된 사회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 건축정책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즉 건축정책의

* 2009년 55%였던 건축업의 비중이 2013년 61.7%로 상승

** 거주 가치에 대한 선호는 2010년 35.7%에서 2013년 60.8%로 증가

방향에 따라 새로운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고 건축정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어젠다에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좋은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며,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한다.

또한 창조적이고 좋은 디자인이 정부 정책에 의해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제 기반 조성은 건축정책을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다. 클라이언트들은 건축정책에서 제시하는 경쟁 방식과 디자인 기준을 통해 더 합리적인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건축정책을 구체화하는 위탁연구 추진과 디자인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립 등이 가능하다. 대학에서는 건축정책을 기반으로 더 나은 연구와 교육을 장려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국민이 매일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시스템의 철학을 주도하는 건축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난해 공개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의 비전과 목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건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공간의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체계를 개선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며, 건축정책과 건축도시 디자인 체계를 정비해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야말로, 현재의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이 시대에 공유할 수 있는 건축문화일 것이다.

건축정책이 추구하는 비전대로 건축문화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일은 건축물과 건축행위가 삶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삶의 표현이자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드러내는 일인기에 중요하다. 유럽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해 온 네덜란드의 경우 제4차 건축정책부터 문화정책인 벨베데레 정책(Belbedere policy)을 통합시킴으로써 건축이 내포하는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건축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질 좋은 환경은 도시사회의 필수적인 지표로서, 시대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좋은 건물과 장소들은 우리에게 각각의 개별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감·정체성·공동체의식을 주고 일상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장소의 가치는 사회적·경제적 투자를 유발하고 각종 사업을 지속시키는 필수적인 기반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칠레의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Alejandro Aravena)가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았다. 그의 수상작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자립지원형 중설주택^{*}으로, 지역과 주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건축과 건축가가 지역과 주민, 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묵직한 소명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여 만드는 건축과 공간환경은 미래의 건축자산이 되므로 우리 후대에게 훌륭한 자산을 물려준다는 적극적인 소명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건축정책은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미래 삶의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건축정책이 미래 기술과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건축 관련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개성과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손쉽고 안심하고 짓거나 선택할 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이는 중요한 건축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특히 아파트로 대변되는 대량의 주택공급에 치우친 주택 관련 제도에서 소외된, 대표적 서민 주거인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범주를 마련하는 일은 당면 과제이다.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중요한 건축정책과제 중 하나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이 적재적소에 공급되고 관리되도록 국가공공건축의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끝으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에 즈음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건축정책의 운영방향이 ‘국민이 행복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축계가 그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정책환경 마련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 그가 설계한 칠레 이키케(Oquique) 시, 퀸타 먼로이(Quinta Monroy) 지역의 중설주택(half of a good house)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주택으로, 부족한 정부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의 절반만 완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확장이 용이하도록 1층과 2층의 바닥만 설계한 주택이다.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성과와 발전 방향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영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

계획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

건축정책은 197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유럽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핀란드·프랑스·스코틀랜드·영국 등 16개 국가가 건축정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 외 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 등 14개국이 국가 차원에서의 건축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건축 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하고, 2010년 국가 차원의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수립된, 건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건축계에서는 당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계 전문가들의 모든 관심이 모아졌다. 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관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구조 및 환경 등 엔지니어링, 건설, 공공디자인, 조경계획 및 설계 분야 등 각계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TF가 구성되어 20여 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건축 어젠다를 발굴하고, 5년간 실천해야 할 세부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건축정책을 선행한 유럽 주요국과 협동

*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가 전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건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계획 내용은 기본적으로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15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다.

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건축정책을 알리기도 하였다.

「건축기본법」부터 정책계획 수립까지 오랜 기간 기획하여 만들어진 1차 기본계획은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국토, 꽃처럼 아름다워지는 국토’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목표로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 녹색 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과 6대 추진전략, 18개 실천과제, 113개 세부 단위과제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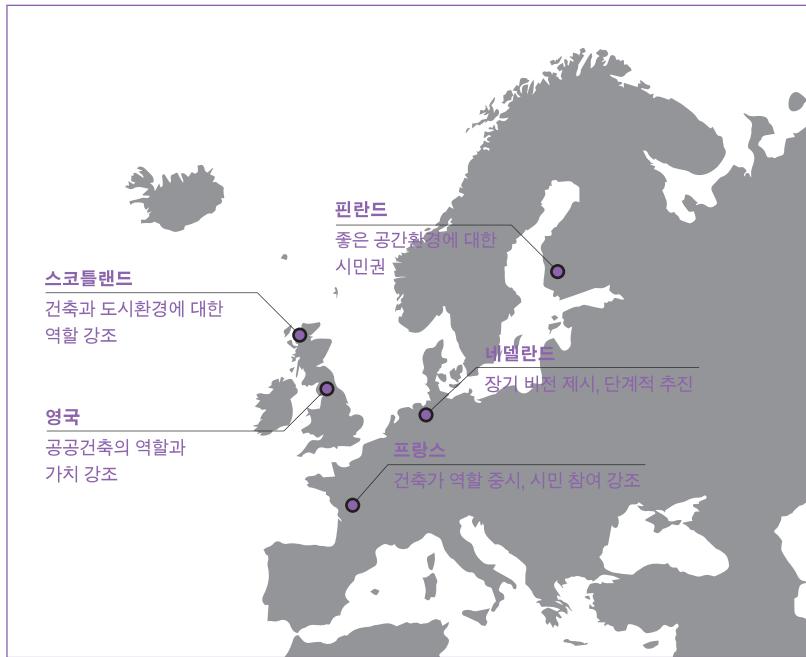
정책목표인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부문에서는 도시경관, SOC 시설의 디자인,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디자인, 도시재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부문은 녹색건축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저감 방안,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계기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부문에서는 한옥 등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 건축문화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4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TF팀의 분과별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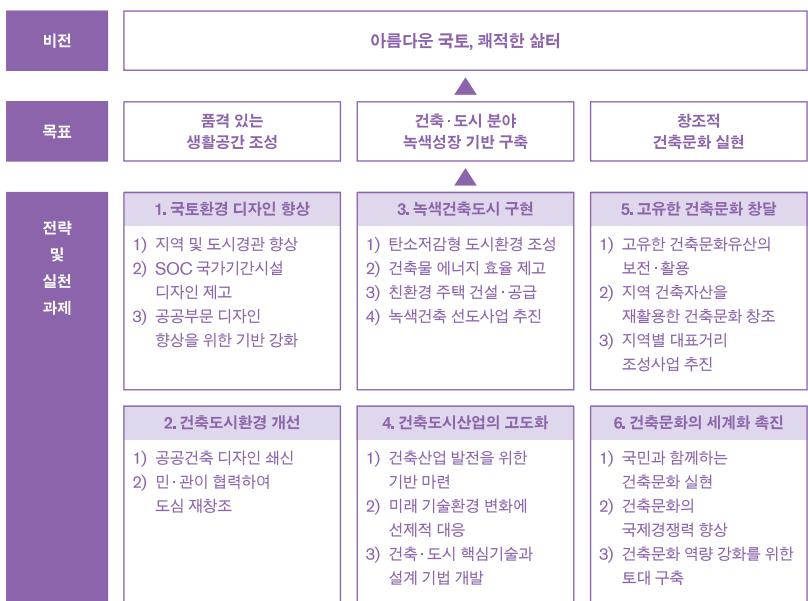


2008년 건축정책 국제 심포지엄



해외 건축정책 동향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자료: 국토해양부(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p.22.

건축정책의 성과와 의미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건축정책’이 도입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건축전문가와 관계자들 대부분이 ‘과연 이 수많은 정책과업들을 계획에 담아 놓으면 실행할 수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건축정책을 선행한 유럽국가에 비해 시작은 늦었으나, 그동안 건축정책에 목말라 온 현실에서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우리 건축계에 주목할 만한 많은 영향을 끼쳤다.

- 정책 수립 과정에서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우선 건축을 ‘민간자산의 건축’보다는 ‘국가자산으로서의 건축’으로 다뤄 「건축기본법」의 근본 취지인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자는, 건축계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건축정책에서 이루어야 할 정책범위와 목표 설정을 위해 많은 건축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으며, 건축계 숙원사업을 해 결하는 ‘건축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한’, ‘건축에 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는 과정 속에서 건축이 국민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삶터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으며,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발굴한 과정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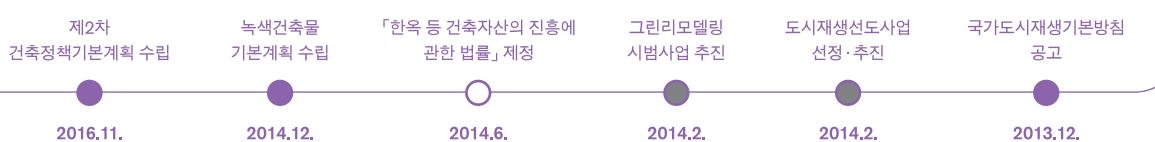
- 「건축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및 소기의 성과 달성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정책 실행수단으로서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①건축정책기본계획(제10조, 제11조)과 지역건축 기본계획(제12조) 수립 ②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제13조) ③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제20조) ④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제21조) ⑤건축디자인 시범사업(제22조) 등이다. 그리고 정책 실행수단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 덕에 국가와 지역별 중장기 건축정책 방향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난 5년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 관련 법령 제정의 근거가 되었다. 정책기반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건축정책 지원기구도 다수 설립·지정되었다.

두 번째, 건축정책 심의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축정책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부처적인 대규모 건축정책을 수립할 수

건축정책 추진 과정 및 주요 성과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제1기와 제2기 위원회에서는 신한옥 활성화 전략 마련, 보금자리주택 조성, 친수공간 조성, 공공건축 품격 향상 등 중요 안건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하였다.

세 번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건축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처럼 향후 건축기금 조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네 번째, 건축디자인 기준이 단순한 업무지침서의 성격을 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기획업무 및 사전검토 제도 운영의 기본 지침으로써 작용되고 있으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 활동사업 등 관련 시범사업 운영의 업무절차이자 사업모델로 작동되고 있다. 건축디자인 기준을 준용한 사업 운영으로 건축발주제도 등 건축 프로세스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 건축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신진 건축가 육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건축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

「건축기본법」 실행 수단에 따른 성과와 의미

「건축기본법」 실행 수단	1차 성과	2차 성과	3차 성과
기본계획 수립 (제10~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16개 광역시·도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관련 법령 제정의 근거 마련· 건축정책 지원 기구 설립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제정·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국가한옥센터 설립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구성 (제10~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운영 (1기~3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정책 심의·조정의 기능· 건축정책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정책을 단일부처 업무가 아닌 범부처 업무로 정책범위 확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진흥원 설립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 행사, 교육, 신진건축사 육성, 전문 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건축기금 조성 근거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기획업무, 사전검토 제도 운영 기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도시재생 활동사업 등 시범사업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프로세스 개선으로 인한 민간전문가 활용 확대· 건축발주제도,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 건축품질 향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신진건축가 육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 건축 및 도시환경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역량 향상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발전 방향

건축정책에 특화된 계획범위 재설정

국내에 처음으로 건축정책이 도입되고, 초기에 ‘건축’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다. 「건축기본법」에서 정책대상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광범위하게 선언한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그동안 ‘건축’ 자체의 범위를 너무 한정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1차 기본계획에서 너무 광범위한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을 포함하게 되었다.

‘건축’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고, 정책적으로 다루지 못하던 부문에 대해 초점을 두어 건축기본계획만의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건축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목적은 특정 시설과 공간에 대한 계획이 아닌 법규, 행정 프로세스, 설계발주 및 계약, 지침 및 기준, 건축기술, 교육 등 정책수단의 개선을 통해 건축 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제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등에서 다루는 정책대상인 주택공급, 도시기반시설 SOC 등은 과감히 건축정책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역 건축정책의 연계 및 역할 구분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차이를 둔다면, 국가 단위에서는 특정한 공간적 범위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제도적 측면이나 행정 프로세스와 기술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지역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간상에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현황 및 공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국가계획의 정책 대상** | 법, 지침 및 기준, 행정 프로세스 개선, 기술 개발, 산업 육성·지원 등 제도적 측면에 초점

- **지역계획의 정책 대상** | 지역 공간에 대한 현황 및 문제 진단, 실질적으로 공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에 초점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책과제를 계획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상당 부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부합성을 위해 사업 추진가능 여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계획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건축서비스산업육성 및 지원, 건축설계 발주 및 계약제도 개선, 건축 분야 R&D 연구개발, 녹색건축 및 첨단건축기술 개발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건축정책이 지역건축기본계획에 여과 없이 수록되는 부분이 있어, 지역 단위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대상 여부를 계획 수립 시 가장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과제** | 국가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 기준에 대해 지역 특성 및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과제
- **지역 차원에서의 과제** |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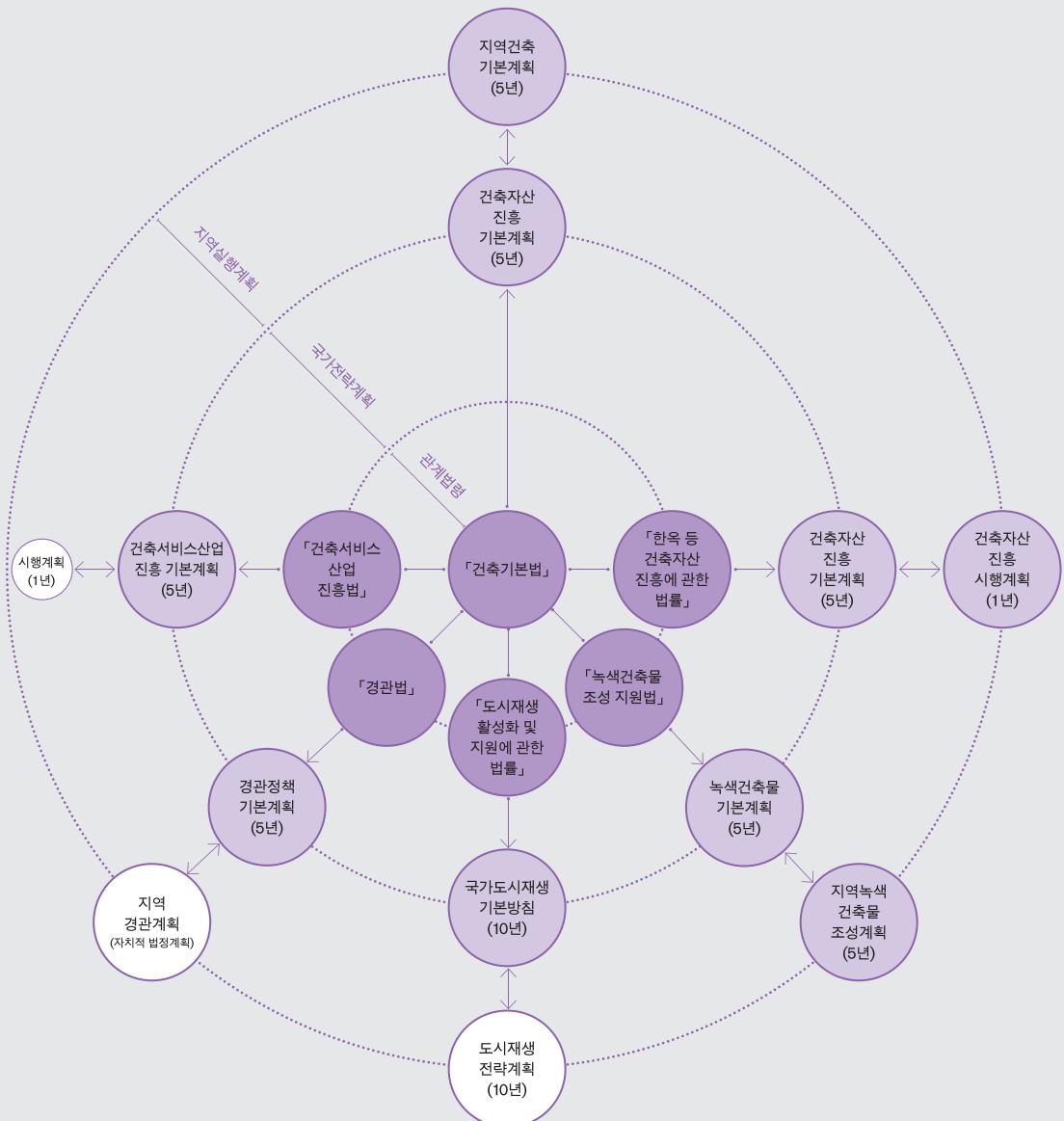
신규 건축 관련 법령 및 계획 간 관계 정립

건축정책이 도입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건축정책 부문별로 세분화된 법령에 의해 부문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 정책 부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녹색건축’,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자산’, ‘경관’에 관한 별도의 부문계획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심지어 세부 부문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므로 상위개념으로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타 분야 계획 체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축 전반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은 상하위 관계의 계획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건축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계획 간의 관계에 대해 대부분이 ‘일부계획과는 동등한 위상이나 일부와는 상하위 관계’로 계획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계획과 동등한 위상의 성격을 지니고, 어떠한 계획과 상하위의 관계로 정립되는지가 중요하다.

건축정책 관련 법령 및 계획 간의 관계

- 법정 의무계획
- 자치적 법정계획(의무X)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동등한 위상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법정계획** |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주택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 등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상하위의 관계에 있는 법정계획** | 「건축기본법」상에서의 지역건축기본계획, 건축정책의 부문으로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계획 등
-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법정계획** | 「국토기본법」에 의한 도종합계획, 수도권 발전계획, 지역개발계획, 「경관법」에 의한 지역경관기본계획, 「주택법」에 의한 시·도 주택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 등
-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상하위의 관계에 있는 법정계획**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해당하는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새롭게 설립되는 정책 지원기구 간 관계 정립

새롭게 제정된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정책지원기구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한옥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녹색건축센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등이 있다. 이 중 법령에 근거하여 하위 지원기구를 둘 수 있는 것은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이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립근거를 둔 것은 ‘녹색건축 전담조직’이 있다. 지역한옥지원센터의 경우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비법정 지원기구로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새롭게 관련 법령들이 제정 및 정비되면서 건축정책을 지원하는 지원기구가 설립되고, 해당 정책 및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면서 지역 단위에서도 별도의 지원기구 설립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는 국가 단위의 정책지원기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모든 사업에 대한 관리·자문·교육DB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기구 운영이 제대로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중앙과 지역 단위의 지원기구의 업무분장 및 역할 분담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중앙부처와 지역 단위로 구분하되, 지원 범위와 방식에 대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구에서 각종

운영지침 및 기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기구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DB구축 및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연계되어 관리 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건축정책 전담 지원기구로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

앞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건축기본법」에서의 ‘건축’은 민간의 사적 자산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자산으로서, 그리고 공공의 장소를 만드는 공공 정책의 의미를 가진다. 하나의 전문 분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국가 이미지와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당초 「건축기본법」을 제정할 당시 ‘건축’이라는 정책 분야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관할하는 부처가 다양하여 특정 단일 부처가 아닌 범부처 성격의 정책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당연직 위원으로 모든 관계부처 장관으로 임명하는 범부처 성격이었다.

그러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되어 있으며, 계획 대부분의 내용이 국토교통부에 한정된 범위에서의 정책 위주로 구성되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건축정책의 계획 추진주체를 국토교통부에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외 건축정책 사례에서도 봐왔듯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건축정책을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범부처 성격의 정책과제가 보다 확대되어야만 한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소속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를 살려 독립된 범부처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내실 있는 건축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계획 실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과 성과점검은 지역건축정책이 초기 의도한 목적과 계획이 실제 시행·집행된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건축정책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의 건축정책 성과는 「건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2년마다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단위의 계획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계획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경쟁력 및 도시 브랜드 지수 등 국민 삶의 질 및 도시환경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와 연계하여 건축정책의 중요성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맺음말

“건축정책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실천될 것인가?”

건축정책 자체에 대해, 그리고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10여 년 전부터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건축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건축정책을 세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법령과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건축을 전담하는 전문연구기관과 조직도 만들어졌다. 건축을 통해 공공부문의 디자인 향상, 경관관리,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건축을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서 육성·지원하는 움직임도 생겼다. 유럽에서 30여 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던 건축정책을 우리나라 국민답게 참으로 빠른 시간에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건축정책이라는 키워드로 10여 년 전 건축계를 뜨겁게 달궜던 것처럼 스쳐 가는 구호나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이 국민 삶의 질을 디자인한다는 측면에서 건축정책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참고문헌

- 1 김영현 외(201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 김영현(2015), “건축정책 변화에 따른 전망”, 「건축」 v.59(1), 대한건축학회.
- 3 김영현(2014), “유럽 건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auri brief」 v.9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생활, 산업, 문화를 아우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필요성

국제화에 따른 경제 개방,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 건축·도시 부문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공간환경 및 건축에 대해 최소 품질 확보가 아닌 품격과 가치 제고를 추구해야 하며, 이것이 국가경쟁력 지표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찍이 선진국에서는 환경과 문화에 있어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룩셈부르크·벨기에·스웨덴·아일랜드·오스트리아·이탈리아·핀란드 등 유럽 13개 국가에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본·호주 등에서도 건축정책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우리나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건축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건축기본법」 제10조를 근거로 최초의 국가 계획인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2010년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건축정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건축과 관련된 산업·경관·환경·에너지·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계획이다. 장기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전략계획이며, 과

제의 종합검토와 효율적 이행을 위해 복수 부처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범 정부계획이기도 하다. 특히 건축 관련 부문별 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건축관련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 경과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이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4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60개 건축 관련 학회·협회·단체 소속 전문가 100여 명이 모여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70여 차례의 민간 합동 회의를 통해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계획(안) 확정 후에는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 조달청,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국가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계획(안)의 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원안대로 가결(2015.5.22.) 하였으며, 제8차 무투회의를 거쳐 공공건축물의 계획적 리뉴얼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2015.7.9). 마지막으로 대통령 보고를 거쳐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공고되었다(2016.11.25.).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최근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는 건축·도시 부문과 관련된 많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국내 고령화율은 2014년 12.7%에서 2050년 37.4%로 급증하여 향후 노인 복지시설 확대와 시설 개선 수요가 증가하며, 출산율 감소로 부동산신축 수요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2020년에는 50%를 차지하는 등 건축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건축시장에서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비중이 10%에서 선진국 수준인 40%로 늘어날 전망이다. 범지구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어젠다가 수립되었으며, 국내의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등 온실가스 증대와 기후 변화를 고려한 국가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주택에 대한 인식의 가치 변화, 가족형태 다양화, 맞벌이 가구 비중의 증가, 단독주택 선호도 증가에 따라 건축 수요가 다양화될 것이다.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레저시설, 한옥 등 수요와 건축물 디자인의 가치도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실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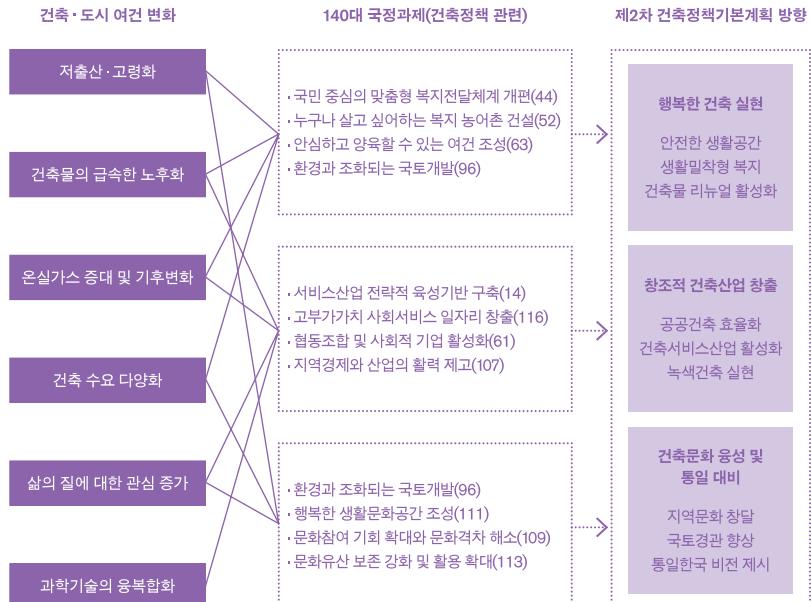
개선 요구, 주거활용 여가활동 및 세컨드 하우스 수요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ICT 기반 첨단기술의 발달과 신소재 기술 융합 발전 등으로 건축물 기능이 확대되고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건축물의 급속한 노후화, 온실가스 증대 및 기후 변화, 건축 수요의 다양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과학 기술의 융복합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계획은 앞서 살펴본 건축·도시 여건 및 정책수요의 변화와 제1차 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건축물 안전, 투자활성화 등 최근 정책이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책수요의 변화와 함께 140대 국정과제 등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 분야에서 나타나는 여건 변화와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는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도록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및 통일 대비’라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계획의 방향을 크게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 대비’의 세 가지로 수립하였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방향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 대비’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목표로 하여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목표와 그에 따른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실천과제



자료: 국토교통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 2015.12., p.12.

행복한 건축 실현

추진전략 1인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건축물 실내안전, 생활안전 증진사업 등 안전한 생활공간 환경 조성과 지역건

축안전센터 설립,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시공기록 보관 및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구축, 소규모 건축물 안전 등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추진전략 2인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은 어린이집 가이드라인 개발과 확충, 학교시설의 정기점검 및 복합 활용 등 어린이·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장애 설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노인복지공간 조성 확대,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계획 수립 및 공공주택과 복지시설의 복합화 내용을 포함하였다.

추진전략 3인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에서는 지역 건축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의 주민 참여, 건축 코디네이터 지원, 지역업체 역량 강화, 농어촌 건축 리모델링 지원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현황관리 체계 구축, 활용모델 개발 등 건축물 유휴공간 재생 및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추진전략 1인 ‘공공건축 효율화’에서는 사전기획 업무 강화, 성과관리체계 및 총괄조정체계 구축 등 공공건축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확대, 공공건축 업무 지원체계 강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등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담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의 성능과 주변 여건 등의 리뉴얼 진단 및 연차별 계획 수립, 리뉴얼 이행 지원 추진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 2인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는 기술력과 창의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적정한 설계보상비 책정, 건축 엔지니어링 계약체계 개선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건축사 업무범위의 다양화, 건축 엔지니어링 책임 강화 등 민간 건축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 실무 중심의 교육 자격제도 개선, 마을 단위의 산업 육성과 ‘글로벌 표준’ 제정, 개발도상국의 건축시장 개척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추진전략 3인 ‘녹색건축 실현’에서는 패시브 주택 의무화, 에너지소비 총량제 확대 시행 등 국민체감형 기준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등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선진

화하는 내용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향상을 이끌어내는 한편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인력 육성, 관련 부처간 협업 및 정보체계 강화, 홍보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도 포함하였다.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추진전략 1인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에서는 건축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과 한옥문화의 브랜드화, 건축문화 프로그램 개발, 관련 관광산업 육성, 도시 건축박물관 건립 등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가치 발굴과 보전·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 2인 ‘국토경관 향상’에서는 국토경관 인식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 국가상징 경관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민공감을 형성하고, 관리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행정기반 구축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진전략 3인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에서는 남북통일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북한 건축자산 실태조사와 세계문화유산 등재협력 등의 공동 연구, DMZ와 미래도시의 공동 개발 추진계획으로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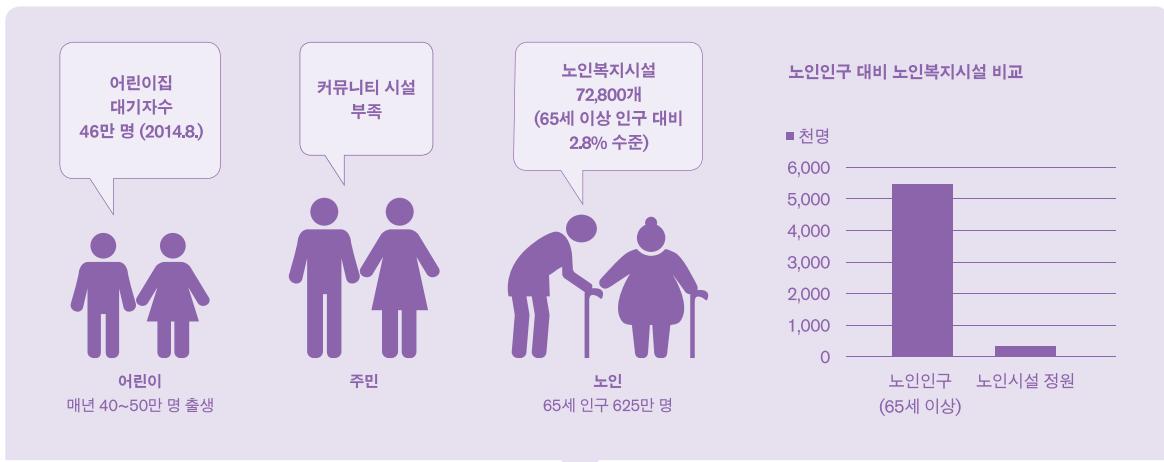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의한 기대 효과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노력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 증가와 생활안전사고, 지하주차장 및 공원 등의 범죄발생 증가에 대응한 다양한 기초조사 및 제도 개선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2017년부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조성 확대 사업 등을 통해 도보 10분 내에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복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건축정책은 포용하는 정책 범위가 넓어 정량적으로 기대 효과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 삶의 질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도보 10분 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유지 활용한 복지시설 제공
- 학교시설 복합화
- 의료, 안전, 단체급식 시설 확충
- 무장애 설계
- 편리하고 다양한 공간서비스 제공

유·후공간과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등 기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공간에 대해서는 리뉴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건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재생을 통한 연간 2조 2,000억 원의 투자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성능과 높은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공공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최대 1조 4,0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단위사업체당 생산성은 OECD 평균인 연간 369만 달러보다 낮은 232만 달러에 그치는 등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발주제도와 민간시장 거래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녹색건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신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에너지의 녹색건축 성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공공건축 효율화

공공건축물 노후도 증가

- 준공 후 30년 이상 공공건축물
21,000동(2015년) → 46,000동(2025년)
- 리뉴얼계획은 468동에 불과



건축물 성능 미비

학교 내진율
26.4%



에너지성능
취약



낮은 건축물 디자인 경쟁력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디자인
- 접근성 부족
- 노인 및 장애인 고려 부족



좋은 공공건축, 연간 최대 1조 4천 억 예산절감 효과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지역 공공건축가 육성
- 기준 및 매뉴얼 개발
- 공공건축물 리뉴얼 체계 개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리하고
오래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창의적 디자인
창출이 어려운
설계단가



가격 위주의
빌주제도

2.32백 만 달러/1년(우리나라)
3.69백 만 달러/1년(OECD 평균)
*빈스 리포트(영)



단위사업체당
생산성 부족

ENR지 '세계 150대 설계사'에
우리나라 업체는 1개
*'세계 250대 건설사'에 우리나라 업체는 1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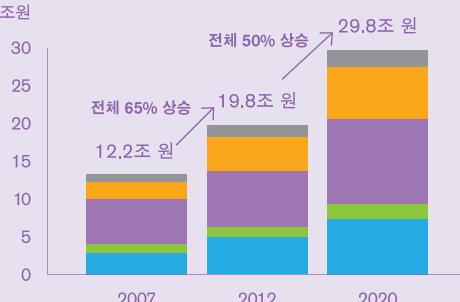


국가경쟁력
부족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 빌주제도 개선
- 민간시장 거래환경 개선
- 창조적 인력양성
- 국제 경쟁력 강화

조원



연도	전체 65% 상승	전체 50% 상승	2007	2012	2020		
	12.2조 원	19.8조 원	3.5	6.5	8.8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을 앞두고

건축자산과 관련하여서는 기준 건축자산의 관리체계를 보완한 건축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과 한옥 건축 확산을 위한 한옥문화 브랜드화, 건축 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함께 한국의 건축 브랜드를 구축하도록 한다.

한편 국토경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경관에 대해 아름답다고 답변한 국민이 60%였던 것에 반해 도시경관은 아름답지 않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경관사업에의 주민 참여 활성화, 경관 자원 발굴, 공무원 및 전문가의 역량강화 및 행정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 이미지와도 높은 연관성을 지닌 경관의 품격을 제고한다. 또한 2014년 3월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 3원칙을 토대로 북한건축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동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미래의 통일한국 건축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한 생활공간, 녹색성장, 건축문화 분야의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추진을 통해 국토환경디자인과 건축 도시환경의 수준 향상, 녹색 건축·도시 구현과 건축·도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고유 건축문화의 중요성 제고와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의 토대가 되었다. 이제는 세계 건축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다양한 관계 부처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생활·산업·문화를 아우르는 건축·도시공간이 구현되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국토해양부(2009),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 국토해양부(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p.22.
- 3 국토교통부(2016),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p.12.
- 4 국토교통부(2016), 「건축정책 국회보고서(2010-2015)」.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변화 양상과 시사점

신승수
(주)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 소장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역사

네덜란드 중앙정부는 1991년 세계 최초로 건축정책을 입안한 이후 사반세기 동안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건축정책을 개선해 오고 있다. 그 주요한 방향성이란 양질의 공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건축 관련 기반시설과 제도를 유지하는 것, 통합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품격 있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좋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발주방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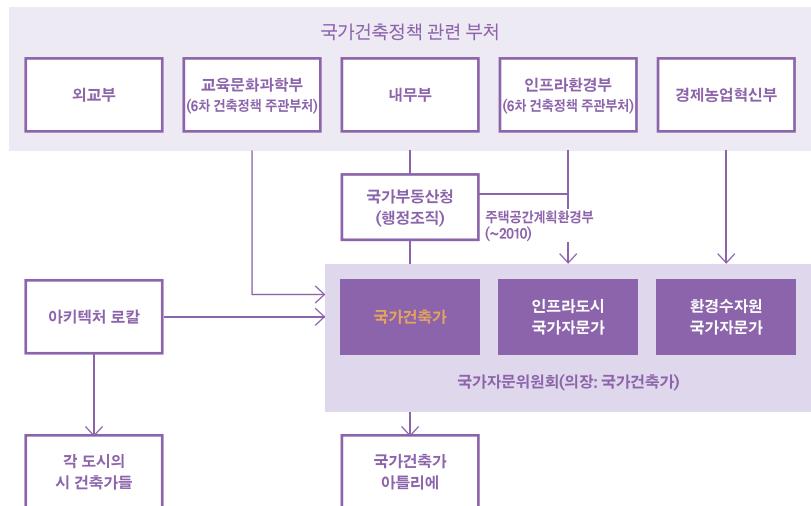
이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4년 단위의 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경우 내무부 소속의 국가건축가(Rijksbouwmeester)*와 국가건축가 아틀리에, 그리고 내무부·인프라환경부·경제농업혁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자문위원회(College van Rijksadviseurs)가, 중앙정부와 지역의 연결고리로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조직인 ‘아키텍처 로카얼(Architectuur Lokaal)’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2017년 현재 국가건축가는 국가부동산청 사업의 자문 및 프로젝트 커미셔너 역할을 비롯하여 국가 건축정책 목표 설정과 세부 활동 기획, 건축 및 공간환경 전반에 관한 정부부처 간의 코디네이션, 국가자문위원회 의장 역할, 국가건축가 아틀리에 운영·감독, 시 건축가들 및 건축·문화유산 관련 기관들과 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본래 국가건축가는 주택공간계획환경부의 국가건설청 소속이었으나, 2010년 주택공간계획환경부가 폐쇄되고 인프라환경부와 내무부로 분리되면서부터 내무부의 국가건설청 소속으로 편입되었으며, 2014년 국가건설청이 국가부동산청으로 통폐합되면서부터 내무부의 국가부동산청 소속으로 활동한다.

단계별로 그 외연을 넓혀 온 네덜란드 건축정책은 건축을 중심으로 인테리어·문화유적·조경·도시·기반시설 등 공간환경 전체로 그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경제·사회·문화·생태학적 가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디자인의 가치를 다룸으로써 그 내용적 범위 또한 생활공간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건축의 품질을 문화적 가치, 실용적 가치, 그리고 미래적 가치가 복합된 종합적인 가치로 규정하고 출발한 건축정책은 초기 성립기인 1990년대(1·2차 건축정책)에는 주로 ‘네덜란드 건축관(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NAI)’, ‘네덜란드 건축기금(Netherlands Architecture Fund)’, ‘베를라헤 인스티튜트(Berlage Institute)’, ‘아키텍처 로칼’, ‘유로팡(Europen)’과 같은 기관들을 설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어 2000년대에는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한 다양한 유형의 모델 프로젝트(3·4차 건축정책)를 중심으로 실행과 피드백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 왔다. 역량 있는 건축 전문가들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정합성을 증진시키는 디자인 발주 시스템, 협업 디자이너와 국가건축가 아틀리에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디자인을 통한 연구’(Research by Design) 프로세스의 확립, 공공 프로젝트와 관계된 여러 부처들을 대표해서 프로젝트에 관한 자문과 조율을 담당하는 국가

제6차 네덜란드 건축정책 관련 부처 및 조직



자문위원회의 설립 등이 바로 이 기간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부터는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모니터링해 온 이전 1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와 프로토콜로 정립하여 국가의 모든 공공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전파·확산하는 한편, 지방과 지역 전역에 디자인의 품질과 지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그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건축을 비롯한 공간 디자인 분야를 ‘디자인 산업(건축·패션을 포함한 디자인, 뉴미디어와 게임 등)’에 편입시키는 한편, 단순한 품질 고양을 넘어서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핵심적인 창조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건축을 경제·사회·생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자산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비전을 담는 전략계획이 제5차 건축정책이었으며, 그 실행계획으로 만들어진 제6차 건축정책에서부터는 이전의 모델 프로젝트를 대신하여 10개의 ‘시급한 디자인 과업(Urgent design tasks)’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과업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와 부처가 협업하는 프로그램들이 모색되었다. 아울러 단일 분야의 펀드에 의존하는 기준의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이 단행되었다.

이 같은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간략한 변화양상을 차수별로 정리하여 그 특징적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건축정책: 건축을 위한 공간 (Space for Architecture, 1991~1996)

1991년 보건복지문화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 Cultural Affairs : WVC)와 주택공간계획환경부(Housing, Spatial Planning & the Environment: VRON)가 공동으로 입안하였으며, 두 부처의 공동정책 수립을 통해서 사회적 정책과 공간 정책의 결합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초 네덜란드의 통합적 정책 모색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 1차 정책은 말 그대로 ‘건축을 위한 공간’, 즉 건축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1차 정책을 통해서 ‘네덜란드 건축관’과 ‘네덜란드 건축기금’이 설립되었으며, 지역건축센터의 형성과 지원 등 건축문화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기관 및 인프라가 조성되었다.*

* 조임식(2006),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공간 창출의 문화”, 「C3 KOREA 건축과환경」 10월호 참조.

제2차 건축정책: 공간의 전축 (Architecture of Space, 1997~2000)

2차 건축정책은 교육문화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OCW)와 주택공간계획환경부 외에 농수산업부(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 Fisheries: LNV)와 교통수자원관리부(Transport, Public Works & Water Management: V&W)가 참여하여 총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입안하였으며, 건축정책 범위를 도시개발·조경·기반 시설 등 공간환경 전체로 확장시켰다.

제3차 건축정책: 네덜란드 만들기 (Shaping the Netherlands, 2001~2004)

3차 건축정책은 주택공간계획환경부, 교육문화과학부, 농수산업부, 교통수자원관리부,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EZ)가 정책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건축은 모든 이들과 관련된 일”이라는 기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의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10개의 대형 모델 프로젝트(10 large model projects)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공공 프로젝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농수산업부, 교통수자원관리부, 교육문화과학부에서 임명한 전문가들과 국가건축가로 구성되는 국가자문위원회(College van Rijksadviseurs)이 2004년 설립되었다.

제4차 건축정책: 공간계획과 문화 (Spacial planning and Culture, 2005~2008)

4차 건축정책은 주택공간계획환경부, 교육문화과학부, 농수산업부, 교통수자원관리부, 경제부 외에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와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실행계획안(Space and Culture Action Programme)으로서 경제·사회·문화·생태적 가치가 통합된 총체적인 생활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보존 및 고고학적 유산 서비스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문화정책인 벨베데레 정책(Belbedere policy, 1999)과 건축정책을 긴밀하게 연계시킴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과 사용을 통한 문화향유가 접목된 ‘개발을 통한 보존’ 전략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3차 건축정책에서 선정한 10개의 대형 모델 프로젝트를 재

편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하여 13개의 모델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도시 공간계획에서 문화적 요소를 성공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 디자인 기초조사를 벌이고 커미셔너를 지정하는 한편 통합적인 디자인 조율과 합리적인 발주방식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제5차 건축정책: 공간계획과 문화 (A Culture of Design, 2009~2012)

5차 건축정책은 교육문화과학부, 주택공간계획환경부, 농업자연식품질부, 교통수자원관리부, 주택커뮤니티통합부(Housing, Communities and Integration)가 공동으로 입안하였으며, ‘건축과 공간 디자인의 비전’이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이 건축을 비롯한 공간 디자인 분야의 문화적 가치와 역할을 담은 전략계획이다. 디자인을 통해서 복합적인 조건 속의 여러 과업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기회창출을 촉구한 5차 정책은 현재의 공간문제와 관련된 과제를 ▲도시지역에서는 고밀복합화 ▲농어촌 지역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복합용도개발 ▲준도시지역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공간계획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공간개발의 핵심적 요소인 사회통합, 지속가능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핵심 목표로서 ‘정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기회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확립’, ‘도시 계획과 지역 디자인 지위의 강화’, ‘폐용된 가치 있는 건물이나 지역의 재설계 및 재개발 촉진’을 제시하였다.

제6차 건축정책: 디자인 역량의 강화 (Building on the strength of Design, 2013~2016)

6차 건축정책은 교육문화과학부, 인프라환경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 I&M)^{*}, 내무부(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BZK), 경제농업혁신부(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EAA&I)^{**}, 국방부가 참여한 정책문건으로서, 5차 건축정책에 대한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6차 정책은 2012년에 입안한 체계적인 협업과 가치평가가 강조된 문화정책 ‘More than quality’와 연계하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 입안에 참여한 앞의 5개 부처 외에 외교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구성된, 6개 부처 상호간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차 정책에 따라 ‘기반시설, 공간계획 및 교통에 관한 다년간 계획’(MIRT)과 ‘문화유산 및 공간계획 실행 프로그램을 위한 비전’에서 디자인 우선원칙에 기초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국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디자인 항목을 기입하는 등 디자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발주 프로세스를 공간계획과 관계된 여러 부처에 확대·정착시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전의 모델 프로젝트를 대신하여 10개의 ‘시급한 디자인 과업’을 선정하였으며, 이의 실행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역으로 모델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6차 건축정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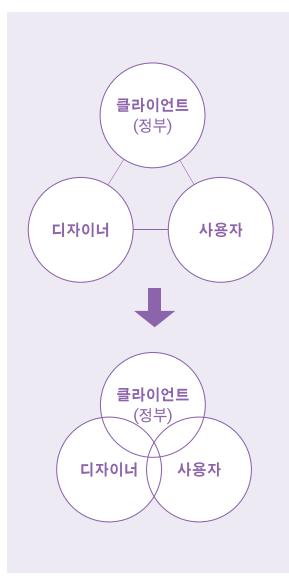
2012년 9월 입안된 제6차 건축정책은 “건축과 공간 디자인이 공간계획의 바람직한 시스템과 국내외적·문화적 인지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기능적이고 매력적이며, 혁신적인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의 해법을 개발하여 물리적 환경의 복합적 도전에 맞설 수 있을 것이며, 공공적·경제적·문화적 영역에 걸쳐서 사회에 커다란 가치를 갖는 분야”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금번 실행 계획은 이러한 도전들과 역할 및 프로세스가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보다 복합적으로 변해 가는 시기에 공표되었다”라며 “일련의 정책적 수단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분명하게 대처하고, 특히 시급한 디자인 과업 및 역할과 프로세스에 발생하는 급진적인 변화들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정책입안의 배경 설명을 요약하면, 건축과 공간 디자인 분야가 매우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에 위치해 있는 위기상황이며, 이를 사회적·경제적·생태적 부가가치를 생산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까지의 대규모 모델 프로젝트를 대신해 ‘시급한 디자인 과업’이라는 역할 규정과 행동지침이 정책문건에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6차 건축정책은 과거와 같은 ‘단일기능적인 건물과 지구’, ‘대규모 지역 개발’, ‘기능의 대규모 변화’ 대신에 ‘충진 및 삽입 개발(in-fill development and embedding)’, ‘레노베이션, 재구획, 재개발’,

* 2010년에 주택공간계획환경부와 교통수자원관리부가 통합하여 만들어진 부처다.

** 2010년에 경제부와 농업자연식품품질부가 통합하여 만들어진 부처로, 2012년부터는 다시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로 명명하고 있다.

*** Action Agenda 2013–2016: Building on the Strength of Design.



자료 : 「Action Agenda 2013~2016: Building on the Strength of Design」

‘공간 활성화’ 등처럼 활용도가 떨어진 기존의 공간들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과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디자인 과업들로 ‘재개발’, ‘재구획’, ‘학교 교육환경’, ‘인구감소 및 경제위축에 대한 대응’, ‘보건복지’, ‘사무공간’, ‘기반시설 및 공간개발’, ‘농어촌 개발’, ‘물 관리’, ‘에너지 전환’ 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선정된 열 가지 과업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처 간 협조와 함께 지방과 지역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 프로젝트를 기획 및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서 자산 관리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7월부로 국가건축정책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건축가 조직은 이전의 국가건설청(Rijksgebouwendienst: RBD) 소속으로부터 국가부동산청(Rijksvastgoedbedrijf: RVB)으로 개편되었다.* 이로써 도시 기반시설을 비롯한 모든 공간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디자인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자금조달 및 운영·관리 등과 같은 매니지먼트 측면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6차 건축정책은 “오늘날의 디자인 환경에서는 과거처럼 ‘클라이언트(정부)’, ‘디자이너’, ‘사용자’ 사이의 역할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뿐더러 서로의 역할이 겹치고 협업하는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디자이너들이 자산 개발까지도 포함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디자인계의 역할 및 상황변화에 대해서 기술한 후 여러 실행계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기초문화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부분이다. 제1차 건축정책이 건축 진흥을 위해서 네덜란드 건축관과 네덜란드 건축기금을 우선적으로 구축했다면, 제6차 건축정책에서는 건축 및 공간 디자인을 포함한 창조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창조산업 지원시설과 창조산업기금을 구축한다는 것이 정책상의 가장 큰 변화이자 특징이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에 네덜란드 건축관(NAi)이 프레msela 디자인·패션 연구소(Premsla,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Design and

* 국가부동산청은 국가건설청과 국가부동산개발청(Rijksvastgoed- en ontwikkelingsbedrijf: RVOB)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다. 국가소유의 8만 1,000ha의 토지와 1,330만m²의 건축물을 관리·운영한다.

네덜란드 제6차 건축정책 부처 간 협업 내용

국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서의 과제

	교육문화과학부	인프라환경부	내무부	경제농업혁신부	국방부	외교부
훌륭한 발주						
기반시설, 공간계획 및 교통에 관한 다년간 계획(MIRT)		◆	◆	◆		
정부 부동산 포트폴리오 계획		◆	◆		◆	
문화유산과 공간계획 실행 프로그램 비전 계획	◆	◆	◆	◆		
훌륭한 프로젝트						
'프로젝트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한 디자인 아이얼로그	◆	◆	◆	◆		
공정한 자문과 지식 교류						
국가자문위원회	◆	◆	◆	◆		
지방과 지역의 디자인 역량과 품질 강화						
기초 문화기반시설						
건축, 디자인, e-문화 진흥기금	◆					
창조산업 지원시설	◆					
디자인 혁신 과제						
보건복지 및 학교 건설 프로그램	◆					
도시와 지역 프로그램		◆	◆			
도시 변화 프로그램		◆	◆			
지방 및 지역 디자인 아이얼로그 프로그램		◆				
역할과 프로세스 혁신						
발주 및 계획 법안 프로그램		◆				
디자인 섹터 국제화 프로그램	◆			◆		◆
혁신적 형식의 발주 프로그램	◆	◆	◆			
국가발주상(Golden Pyramid)	◆	◆	◆			
학교건축상	◆					
학교건축 프로그램	◆		◆			
교육, 연구, 정부 간 연계						
디자인과 행정학 창설		◆				
디자인 과정 네트워크 프로그램		◆				

자료: 「Action Agenda 2013-2016: Building on the Strength of Design」

Fashion)와 가상 플랫폼 e-문화 지식연구소(Virtueel Platform, the e-culture knowledge institute)와 통폐합되어 ‘더 뉴 인스티튜트(The New Institute)’라는 이름의 창조산업 지원시설로 재탄생하게 되었고, 창조산업기금(Stimuleringsfonds Creative Industrie)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발주 및 계획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 교류 프로그램들이 포함되는 ‘역할과 프로세스의 혁신’ 항목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발주상(Golden Pyramid)과 학교건축상 등을 확대하고 홍보강화를 통해서 활성화할 것 등이 실행계획에 담겨 있다. 지방과 지역정부, 중앙정부, 학교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업 및 교류 프로그램들도 마련해 놓았다. 나아가 이 모든 과업들과 프로그램들을 ‘부처별’로 관리·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간’의 협업으로 관리·운영한다는 것이 6차 건축정책이 갖는 특별한 점이라고 하겠다.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시사점

네덜란드 건축정책은 차수별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되어 왔다. 선례가 없는 건축정책을 약 25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그 내용적 범위와 대상 또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관계된 부처 및 민관의 협업 파트너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단계적 계획에는 장기적 비전이 반드시 담겨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네덜란드 정부는 먼저 관련 제도와 기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전문가(건축가)가 기획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다시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발주부터 평가에 이르는 디자인 프로세스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조직(국가건축가 아틀리에, 국가자문단 등)을 정립해 나갔다.

이와 함께 관계된 파트너들의 협업 시스템(여러 부처 간 공동 입안, 여러 학제 간 통합 계획, 아키텍처 로컬 및 지역 건축센터를 통한 지역 단위의 협업체계 조직)도 건축정책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홍보매체, 기금, 포상제도, 연구 및 교육기관, 시민단체, 일선의 건축가 등이 긴밀한 공조를 이룬다. 즉 규제하기보다는 유도하는 방식, 상향식 피드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차 건축정책이 말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과제’가 바로 전문가, 민, 관 사이의 새로운 협업적 관계 정립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최근 국내에서도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통합설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예컨대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는 건축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도시, 조경, 경관 혹은 토목 프로젝트인가? 규정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문화재와 관계된 프로젝트이자 교통에 대한 이슈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주변 건물과의 연계를 고려한다면 민간 파트너들과의 협조가 절대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통합 디자인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도 네덜란드 국가자문단과 같은 조율기관, 그리고 국가건축가 아틀리에 같은 기획기관의 존재가 점점 더 절실히 전망이다.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그러나 연속적으로 입안되고 관리되는 건축정책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건축 인프라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Interministerial Platform on Architectural Policy Document Project Group et.al(2001), *Shaping the Netherlands: Architectural Policy 2001-2004*(Summary).
- 2 Marc. A. Visser(2006), *Constructing the Netherlands*, THOTH Publishers, the Netherlands.
- 3 European Forum for Architectural Policies(2011), *Survey on Architectural Policies in Europe Final Report*, 2011.
- 4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2011), *Summary National Policy Strategy for Infrastructure and Spatial Planning: Making the Netherlands competitive, accessible, liveable and safe*.
- 5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Ministry of Economics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Ministry of Defense(2012), *Action Agenda 2013-2016: Building on the Strength of Design*.
- 6 조임식·김광현(2009), “건축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건축정책의 해외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243, 대한건축학회.
- 7 김영현(2014), “네덜란드 제4차 건축정책(2005~2008)”, 「건축도시정책동향」 v.1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프랑스의 LCAP법 제정과 국가건축전략 수립

임유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일상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시 건축에 주목하다

들어가며

2015년 10월 20일, 플뢰르 펠르랭(F. Pellerin) 당시 문화통신부 장관*은 국립고등파리벨빌건축대학에서 ‘국가건축전략(Stratégie Nationale pour L’architecture)’을 발표하였다. 펠르랭 장관이 같은 해 7월 8일에 발의한 ‘예술 창작의 자유, 건축과 문화유산법(projet de loi LCAP, 이하 LCAP 법)’은 2016년 6월 29일에는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7월 7일에 공포되었다. 1977년 ‘건축에 관한 법(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이하 건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건축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만들어서 국가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가 아니다. 건축이 국민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환경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인 ‘국민이 행복한 건축’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프랑스의 건축 관련 법률 제정 동향과 국가건축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 2016년 2월 11일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은 오드레 아줄래(A. Azoulay)로 교체되었다.

국가 건축정책의 시작, 1977년 건축법 제정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피해 복구와 도시 정비, 증가하는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한 공동주택 건설과 신도시 개발로 프랑스 건설업은 ‘영광스러운 30년(Trente Glorieuse)’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황을 맞았으나, 익명적인 건축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도시환경과 건축의 질은 오히려 낮아지고 건축가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건축가^{*}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건축·도시환경 조성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977년 건축법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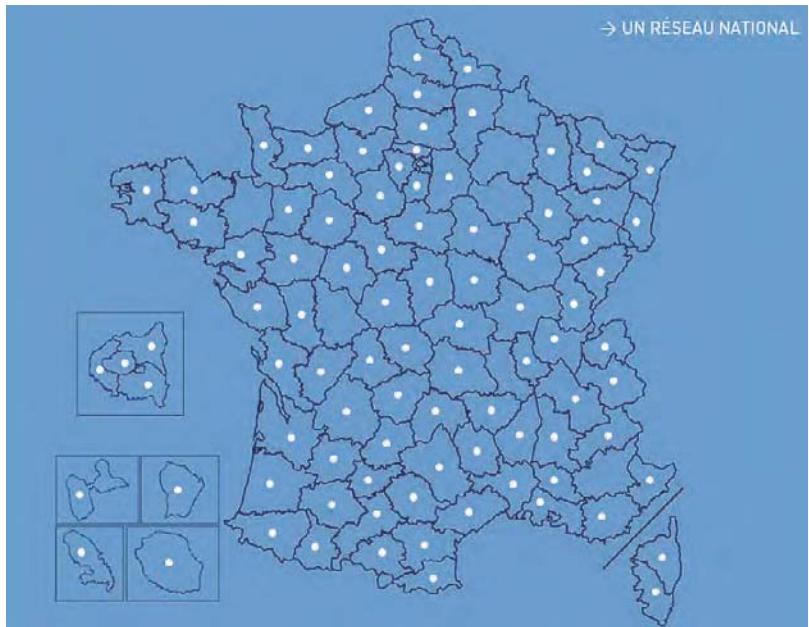
1977년에 제정된 건축법 제1조는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건축 설계, 건물의 품질, 주변환경과 조화, 자연·도시환경 및 역사문화 고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로 시작한다. 건축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임을 천명한 것이며,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법은 건축가의 개입, 건축·도시·환경위원회, 건축가 업무 수행, 건축전문조직, 도시계획 법전 (code de l'urbanisme) 관련 수정·보완사항, 기타 조치 등 6개 장(titre)으로 구성되었다.

건축법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제외하고 건축 허가 대상인 모

1977년 건축법의 장 구성

장	제목	
titre I	건축가의 개입	de l'intervention des architectes
titre II	건축·도시·환경위원회	des conseils d'architecture, d'urbanisme et de l'environnement
titre III	건축가 업무 수행	de l'exercice de la profession d'architecte
titre IV	건축 전문 조직	de l'organisation de la profession d'architecte
titre V	도시계획 법전 관련 수정·보완사항	dispositions modifiant et complétant le code de l'urbanisme
titre VI	기타 조치	dispositions diverses et transitoires

* 프랑스 건축 법제에서 ‘architecte’는 일반적으로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지만 일상용어에서 ‘architecte’는 건축 설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이 글에서는 원문의 ‘architecte’를 자격 유무 구분 없이 ‘건축가’로 통일하였다.



프랑스 건축·도시·환경위원회(CAUE) 현황: 92개 CAUE, 11개의 지역 연합, 1개 전국 연합, 1300명의 전문가(2014년 기준)
자료: 프랑스 전국 CAUE연합 홈페이지(www.fncaue.com)

든 건축물 설계에 의무적으로 건축가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도 (département)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축·도시·환경위원회(CAUE)* 를 설치하여 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도시·환경위원회는 좋은 품질의 건축물을 짓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주기관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2014년 기준으로 프랑스 92개 도에 건축·도시·환경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11개의 지역 연합(Unions Régionales), 1개 전국 연합(fédération nationale)이 구성되어 위원회 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 건축에 대한 의회 보고서

1977년 이후 프랑스의 건축 관련 제도는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2013년부터 문화통신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이 국민의 일상생활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정책에서 건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2014년에 파트릭 블

로슈(Patrick Bloche)는 건축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건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 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36개 조치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이후 LCAP법 제정의 근간이 되었다.

보고서의 첫 번째 주장은 건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의 일상환경을 조성하는 데 건축가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건축가 없는 건축이 양산되고 결과적으로 환경의 질이 낮아졌다고 비판한다. 이에 건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건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창의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건축가가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간소화하고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도시재생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 등 시대 요구에 건축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혁신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LCAP법 제정

LCAP법은 문화통신부에서 발의하여 제정한 법률로 예술 전반, 건축과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등 시대적 요구가 변화하면서 건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예술의 창의성을 확보하고(affirmer et garantir la liberté de création), 문화유산 보존 방식을 새롭게 바꾸며(moderniser la protection du patrimoine), 건축을 진흥하는(promouvoir l'architecture) 것이다.*^{**}

법안 중 건축 관련 조항은 앞서 언급한 블로슈의 보고서와 대학 교육에 대한 펠테스와 뒤포르의 보고서(rapport de Vincent Feltesse et de Jean-Pierre Duport)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법안에서 제안하는 31개 대표적 조치 중 마지막 5개(mesure 27~31)에 해당한다.

27번째 조치는 현대의 건축자산을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20세기 이후에 지어진 좋은 건축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28번째 조치는 택지개발(lotissement) 시 건축가의 참여를 의무

* Conseil d'Architecture, d'Urbanisme et de l'Environnement

** 이 글에서는 LCAP법 중 건축 관련 사항만 다룬다.

화하자는 것이다. 건축물에 대한 고려가 없이 획지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도시환경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29번째 조치는 건축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면적 기준을 낮춰서 소규모 일상 건축에 건축가가 참여하는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입안자는 이러한 조치가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0번째 조치는 ‘실험적 건축을 위한 특별허가제도(*le permis d’expérimenter*)’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의 도시관리계획과 건축물 규제는 대부분 주변 맥락과 도시 경관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도시경관을 획일화하고 건축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하였다. 예술 창작의 자유를 지향하는 LCAP 법안에서는 일부 프로젝트에 한하여 실험적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31번째 조치는 오스만 시대 건축물과 국가 건축물 일부에 건축가 이름을 명기했던 방식을 현대의 일반 건축물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건물에 새겨진 건축가의 훌륭한 성과를 알아보고 평가할 수 있으며, 건축가는 자신의 설계에 보다 책임 있게 임할 것이다.

2015년 7월 문화통신부는 법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했으며, 이후 의회와 상원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2016년 7월 7일에 공포되었다. 최종 공포된 법안에는 건축가 개입 면적 기준을 150m²로 하향하고,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건축가가 관여할 경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것, 일정 규모 이상의 획지개발에 건축가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건축물에 건축가 이름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건축사등록원 (*l'Ordre des architectes*), 건축학술원(*l'Académie d'architecture*), 프랑스 건축사회(*La Sociétéfrançaise des architectes*), 건축협회(*le Syndicat de l'architecture*) 등 프랑스 대부분의 건축단체는 법률에 포함된 새로운 조치들을 환영한다는 입장은 밝혔다.

2015년 국가건축전략 수립

2015년 7월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국가건축전략 수립을 위한 보고서 (*rapport*)를 발간하였으며, 이후 펠르郎 장관은 10월 20일 국립고등파리 벨빌건축대학 베르나르 위에(Bernard Huet) 강당에서 여섯 가지 전략 방향(axes stratégiques)과 30개 조치(measures)를 담은 ‘국가건축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국가건축전략 보고서

국가건축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펠르랭 장관은 “건축은 도시다”, “도시는 개별 오브제인 건축보다 훨씬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국립고등파리벨빌건축대학의 전 학장이자 교수였던 베르나르 위에(Bernard Huet)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이루는 요소로서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건축전략의 여섯 가지 전략방향과 그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략 방향은 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일반 대중뿐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민간·공공 주체 모두가 건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건축을 기념하고 알리는 국가 연중행사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건축의 날’을 제정하며, 교육자들이 건축 형태와 공간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홍보물을 발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건축 그랑프리(Grand Prix national de l’architecture)’ 수여 방식을 보다 확대하여 그랑프리 수여 시 국내외 전시회를 개최하고 건축·문화유산박물관(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에서 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건축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일반 대중뿐 아니라, 건축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선출직 의원을 대상으로 건축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두 번째 방향은 LCAP 법안의 27·31번째 조치에 따른 것으로, 20세기 이후 현대 건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행위를 장려하자는 것이다. 전통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연도 100년 이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등록 제도를 만들고, 기존 건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축가의 책임감을 높이고 건축가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건물에 건축가의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건축가의 도덕적 권한과 의무를 명시한 안내서를 배포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방향은 건축의 교육과 실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그와 동시에 연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립고등건축대학(ENSA)의 법적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에서 건축대학의 학문적·경제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건축 연구 및 교육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건축가 자격에 대한 국가 평가제도를 만드는 한편 건축대학 협력 체계를 만들고 실무자 양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건축 회사에 100

명의 박사급 인재를 배치하여 건축 분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연구와 연계하여 새로운 강좌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는 건축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건축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부(DRAC)의 건축 분야 역할을 강화하고 건축·도시·환경위원회(CAUE)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구역을 만드는 택지개발 사업에 건축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건축가가 개입해야 하는 최소 바닥면적 기준을 기존의 170m²에서 150m²로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한도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건축가가 개입할 경우 허가 절차를 완화하여 소규모 일상생활공간 조성에 건축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하였다.

다섯 번째 방향은 건축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건축 분야의 변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우선 경제부와 협력하여 건축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공공 부문 관계자들에게 설계 공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유럽 기준 이상의 공공공사에서는 설계 공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신생 사무소가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BIM 기반을 마련하고 건축사등록원(l'ordre des architectes)과 협업하여 건축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프랑스 건축을 국제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국가건축전략 관련 추진 일정

2014.10	국가건축전략 수립 계획 발표
2015.2	추진단 구성
2015.7	추진단의 제안사항 제출
2015.9~10	LCAP법안 의회에서 첫 논의
2015.10.20	국가건축전략 세부 조치 발표
2015년 말~2016년	단기 조치 시행, 중기 조치 지속
2016.	의회와 상원에서 LCAP법안 심의, 의결
2016. 7. 7	LCAP법 공포
2016. 10. 14 - 16	'국가 건축의 날' 첫 번째 행사

마지막 방향은 LCAP 법안의 30번째 조치에 따른 것으로, 실험적 건축을 허용하고 그 문화적 가치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좋은 품질의 건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오며

2016년 2월 11일에 올랑드 정부 개각 시, LCAP법 제정과 국가건축전략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펠르랭 장관이 하차하고 아줄래 장관이 문화 통신부의 새로운 수장이 되었다. 아줄래 장관은 2016년 9월 6일 공식 논평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일상 건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면서 국가가 앞장서서 건축 진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6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첫 번째 ‘국가 건축의 날(les journées nationales de l’architecture)’ 행사가 열렸다. 프랑스 전역에서 건축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 전시회와 교육 아틀리에가 열렸고, 건축물 답사와 도시 산책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펠르랭 장관의 국가건축전략 발표 장면(2015.10.20, 파리 벨빌 국립 고등건축대학)

자료: 프랑스 문화통신부 홈페이지 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2016년 10월 개최된

국가 건축의 날 행사 포스터

자료: 프랑스 문화통신부

홈페이지 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라고 선언한 1977년 건축법 제정 이후 40년, 프랑스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분야로 다시 건축에 주목하고 있다. 제1회 ‘국가 건축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문화통신부는 “건축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L'architecture est l'affaire de tous).”라는 표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2016년 LCAP법과 ‘국가건축전략’에서는 건축이 환경, 주거, 지역, 도시, 여가, 일, 산업, 경제 등 사회의 모든 분야와 긴밀하게 연관되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분야로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축정책을 추진하는 프랑스의 시도는 우리나라 건축정책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 건축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그로 인해 건축이 보다 발전하고 국민 행복이 커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Assemblée nationale(2014), Rapport d'information sur la création architecturale, n° 2070.
- 2 Assemblée nationale(2015), “projet de loi relatif à la liberté de la création, à l'architecture et au patrimoine”, n° 2954.
- 3 République française(2015), “projet de loi relatif à la liberté de la création, à l'architecture et au patrimoine, étude d'impact”, Nor:MCCB1511777L/Bleue-1.
- 4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2015), Stratégie nationale pour l'architecture.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방법과 과제

이재훈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들어가며

2007년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자체 단위의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건축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나 국민, 지자체가 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부표 없이 떠다니는 나룻배 같은 건축행정을 방향과 목적을 갖고 나아가는 나침반을 갖춘 선박의 항해 레벨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국토 개발’이라는 모토 아래 건축보다는 건설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2000년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라는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축의 목표 수립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정책 수립은 필수적이었다. 건축이 국가의 정책 관리대상이 된 이후로 의식주적인 차원 이상의 ‘건축의 가치’를 국민이 영위할 발판을 만들었다.

제1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상을 국토에서 서울시로 바꾼 것과 같았고, 건축기본계획이 개념으로 제시되어 실천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서는 지난 5년 동안의 서울시 제1차 건축기본계획에 따른 건축적 노력을 인정하면서, 보다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건축적 정책을 유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시에 절실하게 필요하며 건축 및 관련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의 정책적 제안도 동시에 진행한다.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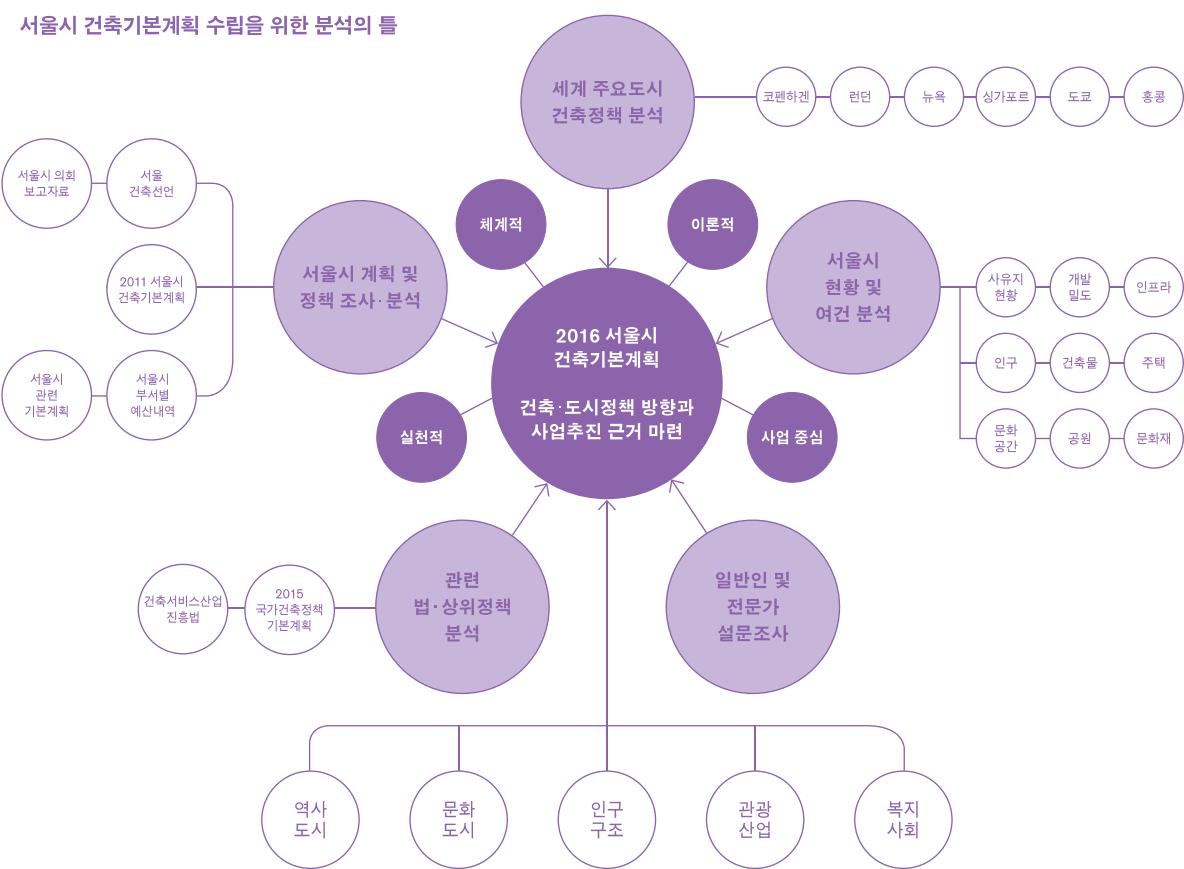
필자는 연구책임자로서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기본 전제가 되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제1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내용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수립 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중간평가가 시행되어 다음 단계의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할 평가 자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건축기본계획은 수립에 대한 의무만 지정되어 있을 뿐 수립 후 실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건축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011년 수립된 제1차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분석하고, 제시된 과제들을 ‘폐기할 과제’, ‘유지할 과제’, ‘보완 강화할 과제’로 분류할 수 있도록 과제별로 그동안 추진된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에 보고된 서울시 건축 관련 부서의 활동보고 내역과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준비 중일 당시(2015년 10월-2016년 8월)에는,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를 참고로 국가의 건축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서울시의 건축기본계획은 서울의 현황과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대상으로서의 건축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이는 자칫 추상적일 수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건축기본계획은 실행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적용 수단이 겸비된 계획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건축기본계획은 서울 지역을 근간으로 지역의 물리적 여건과 함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시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기본 통계를 분석하였다. 2010년 이후 1인가구의 증가나 노인가구의 증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통계상으로는 5년마다 통계가 발표되므로 2010년의 데이터가 이번에 반영되고, 2015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의 틀



자료: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보고서(2016)

년의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다. 건물에 대해서는 빙집이나 노후화된 건축물의 통계를 찾아보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각 구의 인구배분 및 연령대의 상황을 유추하여 지역 간 건축정책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도 고려할 수 있었다.

기초적인 데이터에 의해 일반적 추세를 예상하는 부분도 있으나, 서울시민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주요한 이슈가 나타났다. 우선 전문가와 서울시민은 모두 서울시의 도시적 특징을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보았다. 또 도시생활의 질과 관련해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의견의 비율은 시민들이 전문가보다 높았다. 미래의 도시상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안전한 도시공간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으나, 전문가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의 형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자료: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보고서(2016)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서울의 미래 변화로 노인인구 증가와 복지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서울의 산업구조가 생산과 서비스산업을 거쳐 관광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서울시 건축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도출이 현재 서울시의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였다.

셋째, 벤치마킹을 위해 세계 각국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중앙기관의 일반적인 건축정책이 아니라 세계 각 도시의 지역적 성격을 반영한 건축기본계획으로, 런던·뉴욕·싱가포르·홍콩·암스테르담·도쿄 등 대도시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도시에서는 도시 전체의 기본계획에 건축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도시계획과 설계에 있어 건축이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건축 분야 내에서 도시문제를 다룸으로써 생활 공간 중심의 디자인 가이드가 체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자연환경이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였다. 이를 도시의 분석은 대개 문현을 통해 이뤄졌으나 홍콩은 현지조사도 함께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직적 인 마천루가 즐비한 도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보행

교통 네트워크, 공공건물의 낮은 사용빈도를 높이려는 노력, 역사적 건물의 재활용, 유휴지의 친환경적 개발 등 다양한 선진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건축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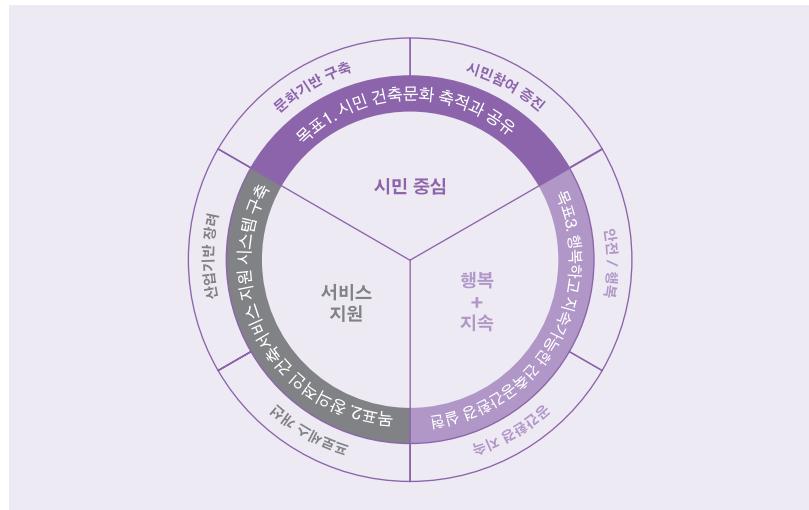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

제1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의 다양한 내용들은 실제 건축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서울시 건축도시 발전을 위한 사업 아이템을 도출하여 활용하였으며, 근간이 되는 제도를 정착시켜 총괄건축가제도나 공공건축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리 잡도록 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린 결과,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 건축도시 행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실천적 전략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좀 더 중점적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는 크게 주요한 축으로 ▲건축의 일반적 지침이 될 수 있는 안전과 건강, 편의성 증진을 위한 행복한 도시구축을 위한 과제 ▲서울시의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건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 ▲이러한 건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적 체계도



자료 :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보고서

축 프로세스의 선진화에 관련한 건축인과 건축사무실 지원 방안, 건축설계 발주방식 등에 대한 제안 및 녹색건축 지원 과제 등을 제시하려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과제 리스트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이들의 의미를 제고할 수 있는 성과가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는 한편 건축기본계획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하려고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도적 제안의 실천결과에 대한 예시적 표현을 모색하였다.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시된 실천사업은 다음과 같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도시공간의 생활적 편의증진 차원에서 보행자 중심의 10분 거리 생활권 형성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가로블록의 저층부 상가연속성 부여나 공공 공유공간의 적절한 설치와 마을 활성화에 관련한 사업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로주택 등의 실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유공간 등을 통한 공공영역의 확대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생활의 콘텐츠에 걸맞은 활성화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하공간의 연속성 있는 개발을 위한 사업

지하도나 지하철 역사 등 지하공간의 입체공간 개발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들 사업들이 가로공간의 입체적 연속성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간으로 개발됨으로써 가로연속성이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하공간 개발의 주체와 프로세스를 분석한 후 사업 초기부터 건축가가 참여하여 건축디자인이 중요시되는 가로공간의 연속이라는 목표 아래 수직적 공간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려 한다. 현재 4대문 안의 지하공간은 부분부분 연결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용도가 미흡한 상황으로, 가로환경의 연속이라는 측면과 건축디자인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 사료된다.

근대 건축문화자산 발굴과 활용을 위한 사업

서울시의 경우 6·25전쟁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도시로 거주민 대부분이 타지 출신이다. 따라서 도시에 대한 정주성이 약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는 데는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적 자산을 찾아내고, 이를 도시공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시골에 가면 남아 있는 조그만 사당이 그 마을의 정신적 가치를 높여 주고, 현대에는 ‘도시 패밀리온’ 같은 조형물이 도시의 정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처럼 말이다. 작지만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역사보존물들이 도시생활의 이정표로 시민들의 정체성을 높여줄 수 있다.

시민의 건축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

한 도시의 건축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의 건축문화활동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축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맡을 건축문화진흥원과 같은 행사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축민원을 해결하고, 시민건축교육과 시민 건축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사업 아이디어로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업을 통해 시 건축 행정의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도시발전의 구조적 개선을 모색하려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건축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지원 방안

건축기본계획에는 많은 개념적인 내용이 담기고, 목적지향성을 갖는 주제하거나 절차지향적인 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사업화가 가능한 목적성의 주제는 시범사업이나 예산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절차적 개선의 주제는 조례에 포함되거나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구조의 틀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건축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기본계획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실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포함시켜 관련된 건축 활동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하게끔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매우 실효성이 높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과연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또한 조례에 포함시킬 내용이 많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은 모두 의회의 논의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처음의 조건대로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도 문제점이다. 결국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작업이다.

둘째는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이 공청회와 의회 보고를 통해 승인되기는 하지만 조례에 포함되지는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방법이다. 이것은 공통의 기준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개별의 사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추진주체가 생겨 사업으로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적 절차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행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임의성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시행되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실천성이 의문시되는 방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기본계획 내용들의 현실에 맞춘 적용력이 미흡할 경우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것을 볼 때, 기본계획의 내용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사업을 운영하는 행정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그동안 지자체는 도시의 건조환경을 형성하는 사업을 토목공사·건축공사·조경공사 등 항목별로 다른 사업으로 여기며, 공간의 관리주체 부서의 주도 아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원의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는 공원녹지과가 주도하는 등 용역업체와 부서의 전문성이 정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되기 일쑤였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디자인의 부재로 이어지곤 해서, 지자체의 공공재산인 공공건물과 그 영역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창의적이며 지속적인 공간 형성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상이 빈번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 이후 모두를 위한 복지를 추구하는 현시대에,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이제 만들기보다는 가꾸는 도시로 전환 중이다. 보다 디자인이 중요시되며 가꾸는 도시공간이라는 큰 틀에서 하나의 사업은 토목·조경·건축 등 각론의 불협화음으로 여기지 않고, 건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하부조직들도 보다 협력적인 태도로 서로 일원화되는 모습으로 진보해야 한다.

건축기본계획이 좋은 제안을 많이 담고 있음에도 사장되는 이유는 건축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과 공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축기본계획의 대상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을 이루는 부분을 포함한다. 도시공간의 뜻에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도시를 경험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

는 도시공간 전부를 말할 것이며, 건축기본계획에서 다루는 대상 역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축기본계획과 더불어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등 여타의 계획에서 충분히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계획의 차원에서도 도시 건조환경을 두부모 자르듯이 정확히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도 현실일 것이다. 이런 각론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특별건축구역 등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사업적 방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시의 건조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건축기본계획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다른 어떤 계획보다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일 것이다. 건축디자인에서 구사되는 디자인 중심적인 방법론을 건축기본계획에서 도시공간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안에 적용하여, 이들의 사업발주 방식을 디자인 사업발주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에 앞서 국가적 행정체계상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위해 전문가·공무원·시민의 합의와 결단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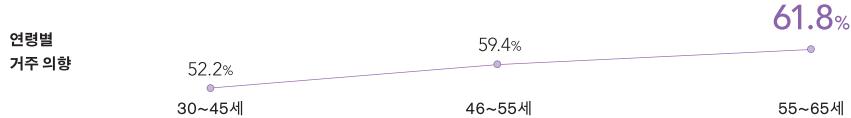
참고문헌

- 1 서울시(2016),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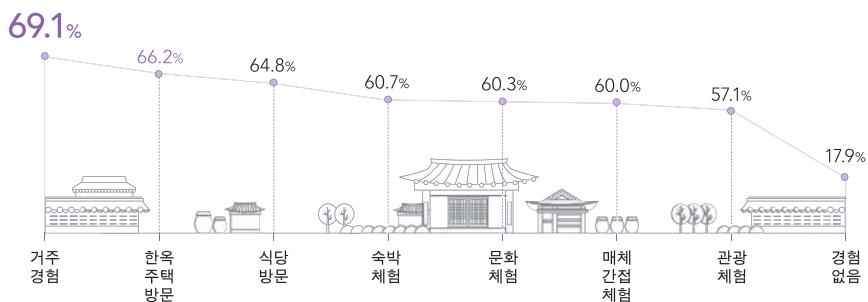
사람들은 왜 한옥에서 살고 싶어 할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한 수요 특성을 파악하고자 2016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대면 면접조사를 수행했으며, 통계자료실에서는 전체 조사 결과를 간추려 소개한다.

Q 한옥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한옥 경험에 따른 거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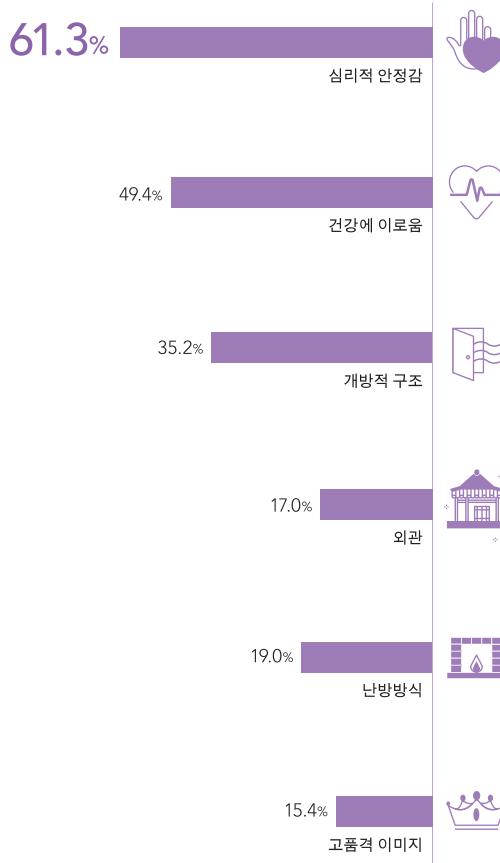


A 56.7%가 거주 의향 있다고 응답

응답자의 56.7%가 향후 한옥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56~65세'의 응답자의 한옥 거주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옥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한옥 거주 의향(69.1%)은 높게 나타난 반면 한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응답자의 한옥 거주 의향(17.9%)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직간접적인 한옥 경험 여부와 한옥 거주 의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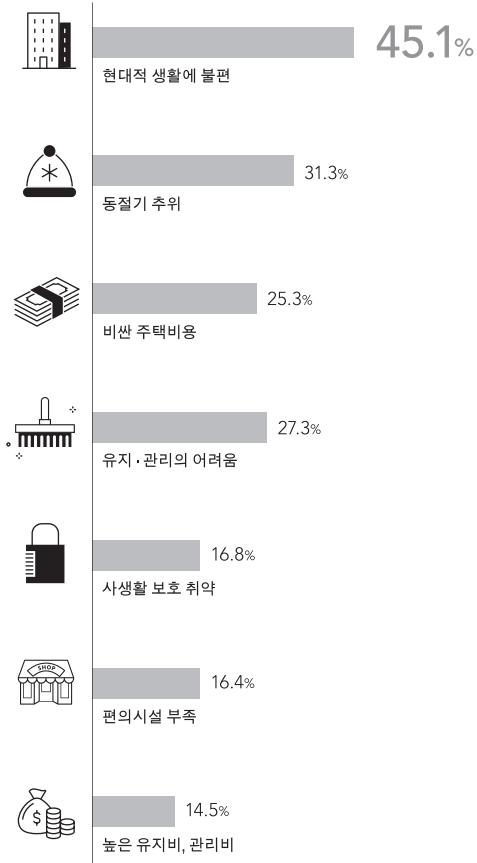
❶ 한옥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한옥 거주 의향자 857명*, 1순위·2순위 복수응답 기준)



❷ 한옥에서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한옥 비거주 의향자 304명, 1순위·2순위 복수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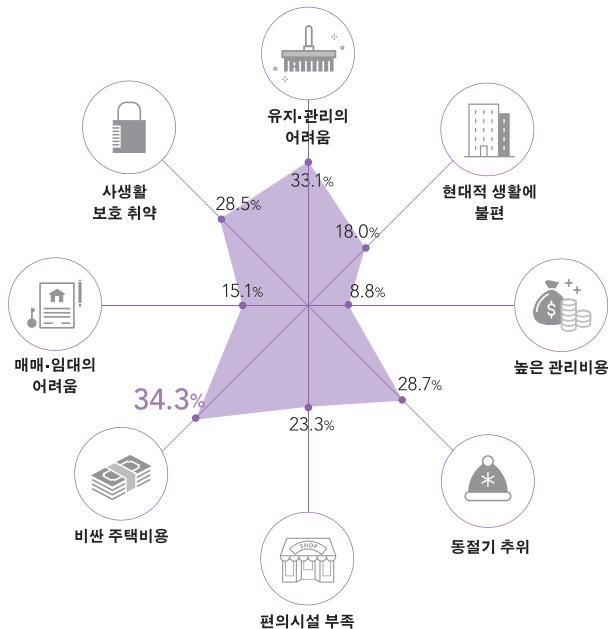
A 한옥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

한옥 거주 의향의 이유로는 '심리적 안정감'(61.3%)을 주고 '건강에 이로울 것으로 예상'(49.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옥의 '개방적 구조'에 대한 호감(35.2%)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다음으로 많았다.

* 한옥 거주 의향자 사례 수는 문제점 개선 시 거주 의향자도 합한 수치임

A 생활의 불편함과 동절기 추위가 예상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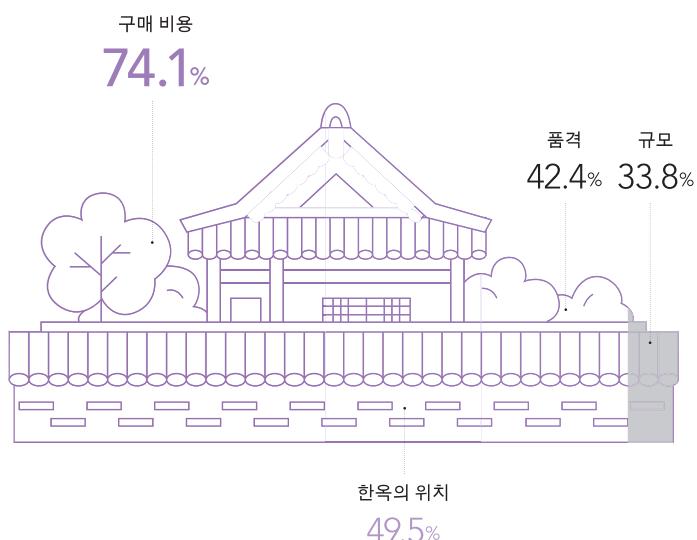
'현대적 생활을 영위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45.1%), '겨울에 추울 것으로 예상'(31.3%)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가의 주택비용'(25.3%)과 '유지·관리의 어려움'(27.3%) 또한 한옥 비거주 의향의 이유로 조사되었다.



❶ 한옥에 거주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한옥 거주 의향자 857명, 1순위·2순위 복수응답 기준)

❷ 비싼 주택비용과 동절기 추위 문제가 가장 우려됨

한옥 거주 의향자들도 한옥 시 '동절기의 추위'(28.7%)와 '고가의 주택비용'(34.3%), '사생활 보호 및 방범에 취약함'(28.5%), '유지·관리의 어려움'(33.1%)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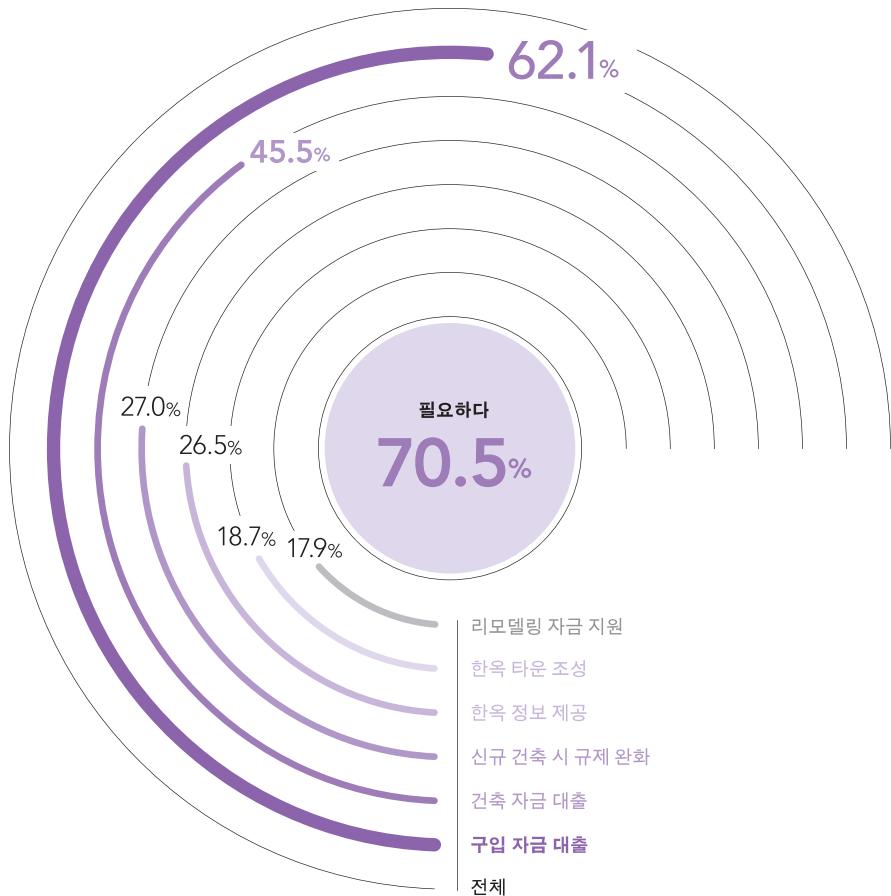
❶ 한옥을 구매한다면,
가장 많이 고려할 사항은?
(한옥 거주 의향자 857명, 1순위·2순위 복수응답 기준)

❷ 가장 많이 고려할 사항은 '구매 비용'

'구매 비용'(74.1%)을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자재·부재의 품질 등 한옥의 품격 또는 평형이나 규모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한옥 거주 의향자에게도 가장 큰 고려 사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옥 지원 정책은?

(한옥 거주 의향자 857명, 1순위·2순위 복수응답 기준)



Ⓐ 한옥 구매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 정책 필요

한옥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5%로, 응답자의 3명 중 2명은 한옥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었다.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62.1%로 가장 많았고 ‘주택 건축 자금 대출 지원’(45.5%), ‘한옥 신규 건축 시 규제 완화’(27%)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과 도시공간

—

Vol. 25

Spring 2017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2

최근 유럽에서는 건축·도시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이후 건축·도시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내용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프랑스에서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시적 도시계획'의 개념과 국내에 던지는 시사점을 짚어보며, 엘베 필 하모니 콘서트 흘 완공과 함께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평가 또한 알아본다.

국내동향에서는 주거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인 가운데, 민간 임대주택 정책의 최근 동향과 새롭게 도입된 주거서비스 제도를 살펴본다. 또 전면 개편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와 평가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한다.

아르세날 페빌리온에서 열린 한시적 도시계획 대회 광경



완공된 하펜시티 강변 산책로의 모습



버펄로 시의 주차장



해외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건축·도시

환경의 미래

064

프랑스의

'한시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재생

069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명암

075

국내

민간임대주택의

최근 정책 동향

080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의 개편과

성과

084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건축·도시환경의 미래 | 브렉시트와 영국의 건축·도시 환경에 대한 역학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미래에 있을 국제적 정치·경제 지형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 환경은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한시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재생 | 한시적 도시계획 개념은 도시에서 공간과 시간의 긴밀한 연관관계에 대한 자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개발과 성장 위주에서 재생으로 도시적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도시공간과 시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명암 | 함부르크 시의 새로운 랜드 마크가 될 엘베 필하모니 콘서트홀 완공을 앞두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자연스럽게 엘베 필하모니 콘서트홀이 위치한 함부르크 하펜시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다시금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최근 정책 동향 | 3년차를 맞이하는 뉴스테이는 꾸준한 제도 개선으로 처음보다 다듬어지고 세련된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뉴스테이가 임대주택의 새로운 지평을 연 만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의 개편과 성과 |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는 처음 시행된 1999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평가의 취지와 평가지표의 정합성 부족, 평가지표의 잣은 변경, 불분명한 평가방식 등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2016년 국토교통부는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건축·도시 환경의 미래

백경현
런던대학교 도시계획
박사과정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산업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인 유럽연합 탈퇴 과정이 시작되면 부동산과 건설 환경 뿐만 아니라 건축·도시 문화, 정책,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되며 그 변화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실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세계 건축교육의 중심이었던 런던 유수의 대학들은 이민법의 변화로 인재를 다른 유럽국가에 뺏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관련 상담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몇몇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법 역시 유럽연합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전체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유럽연합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기반·지역기반 개발 계획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주택 개발자들의 투자가 줄고 있어 새로운 주택건설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브렉시트와 영국의 건축·도시 환경에 대한 역학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미래에 있을 국제적 정치·경제 지형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 환경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건설 분야의 변화

영국왕립건축학회(RIBA)의 회장인 제인 두칸(Jane Ducan)과 최고경영자 앤린 밸런스(Alan Vallance)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결정됨과 동시에 정부와 만나 영국 건축 분야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RIBA는 관련 변화 증거들을 영국의회에 제출하는 등 빨르게 대처를 하였다.

RIBA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5%의 영국 건축가들이 브렉시트가 건축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85%가 더 큰

국제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해결책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여러 건축디자인 회사들이 런던 오피스를 닫거나, 프로젝트가 취소되자 관련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으며 대형 건축회사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 공인조달공급연구소(Chartered Institute of Procurement and Supply)의 보고에 의하면 브렉시트 이후 건설산업 활동이 급격하게 줄었다. 2009년 이후 가장 급격한 감소세이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영국의 부동산 가치는 우려하였던 것만큼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지만, 파운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의 자산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국제 시장의 영향을 받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미국의 뉴욕 다음으로 큰 시장인 런던은 그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기관인 그린 스트리트 어드バイ저스(Green Street Advisors)는 런던 오피스 빌딩의 가치가 20% 가까이 하락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전반적인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영국 주요 주택 건설사들의 가치 하락이다. 이들은 브렉시트 이후 최근 7년 중 최악의 실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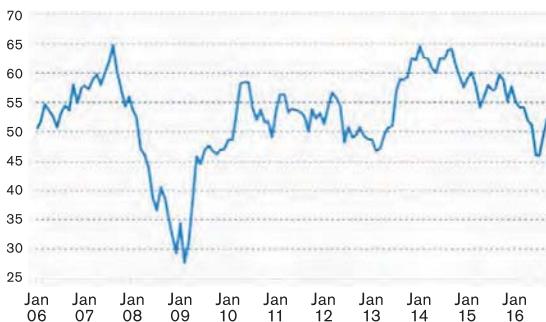
보이고 있으며 브리티시 랜드(British Land), 퍼시 몬(Persimmon), 테일러 윌페이(Taylor Wimpey), 배럿 개발(Barratt Development), 베클리 그룹(Berkeley Group) 등 대형 개발사들이 주가는 20% 이상 급락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국 건축기사협회(Federation of Master Builders)에 따르면 건설자재의 4분의 1 을 수입하는 영국에서 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15%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력의 공급도 문제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RIBA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이 아닌 회원들 중 40%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떠날 것이라고 답하였다. 영국은 건축을 포함한 여러 창조산업의 외국인 비율이 60% 수준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중에서도 건축 디자인 분야는 유럽 출신 인력의 비율이 약 50%로, 유럽 인력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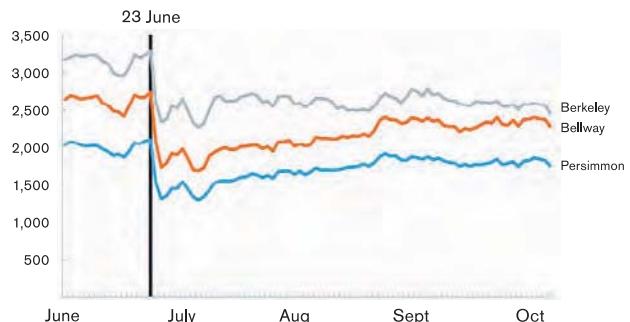
* 아일랜드 건축회사 오마호니 파이크(O'Mahony Pike)는 런던 오피스를 닫았고, 런던 기반의 건축회사 그림쇼(Grimshaw), 메이크(Make), 세퍼드 로슨(Sheppard Robson) 등은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관련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또 영국에서 가장 큰 건축회사인 BDP는 런던 오피스 고용을 멈춘 상태다.

건설산업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자료: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kingdom/construction-pmi>

영국 주택 건설사들(주요 3사)의 주가 추이



자료: Rhodes, Christopher and Wendy Wilson(2016), "Brexit: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market and construction industry", London: House of Commons Library.

건설 분야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예상된다. 영국 건축기사협회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 변화 할 이민정책과 이에 따른 노동자 공급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영국 건설노동자의 12%는 외국인이며, 그중 대다수는 폴란드·슬로바키아·루마니아 등 유럽연합국가 출신이다. 이들의 이탈로 인해 영국 건설산업 분야는 노동자 부족 현상을 겪게 되어 건설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건축문화 교육에 있어 영국의 위상이 크게 하락하는 데까지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건축 건설 관련 회사들이 일부 기능이나 본사를 유럽연합국가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 회사뿐만 아니라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 회사들도 유럽연합 펀딩과 유럽의 다른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더 나아가 런던 디자인박물관(Design Museum)의 데얀 수디크(Deyan Sudjic)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기반 건축가들이 유럽의 건축 콤피티션이나 초청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기반을 유럽연합국가로 옮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로펌 크레포비(Crefovi)의 앤ABELL 가우버티(Annabelle Gauberti)는 “법적으로 브렉시트에 의한 사업 제한에서 벗어나려면 유럽으로 본사를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충고하고 있어 유수의 영국 기반 건축회사들이 다른 유럽연합국가로 이동할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건축교육의 중심으로서 영국의 위상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 영국인들과 동일하게 저렴한 학비를 냈던 유럽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과 같은 학비를 지불하게 됨에 따라, 인재들

* AL_A의 아만다 레베테(Amanda Levete)는 파리에 새로운 오피스를 열고 일부 기능을 파리로 옮기려 하고 있다.

을 다른 유럽국가나 미국에 빼앗겨 건축·도시를 포함한 교육 전반에 걸친 대학들의 위기가 올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건축·건설 경기 침체보다 미래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RIBA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국을 더욱 매력적인 건축시장으로 만들 것을 강조하며, 2017년 1월에 정부와 함께 ‘Global by design’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이 계획은 네 가지 중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1 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무역협정을 맺는다.
- 2 교육·연구·혁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3 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한 영국의 경쟁력 위기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 4 건설 표준 기준과 낮은 규제준수비용을 유지한다.

영국 건축회사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때 여러 영국 건축회사들이 사업방향을 다양화하고 외국 지사를 열었으므로, 이번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국 건축기사협회는 이와 더불어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내 인력을 개발하는 장기 계획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계획·도시개발 분야의 변화

영국 도시계획 분야에서 브렉시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도시 개발에 대한 환경영평가와 정책이다.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유럽연합 지시서(EU Directives)가 있다. 환경영향평가 지시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rective, 2011),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지시서(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Directive, 2001), 해비타트 지시서(Habitats Directive, 1992)가 그것이다. 이는 디벨로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요구되는 사항들을 정리한 것으로, 개발허가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다. 개발 허가를 담당하는 자는 지시서에 맞게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유럽경제구역에서도 탈퇴한다면 위에 언급된 지시서의 영향력도 사라진다. 영국은 관련 법규를 남겨 다른 국내 법규에 귀속시키거나 아니면 새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도시계획 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와 도시계획 적용가이드(National Planning Practice Guidance)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관련 기관이 관련 환경법규에 영향력이 커져 직접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영국 연립정부의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 2011)는 여려 지방분권형 자구책을 마련해 두었다. 즉 유럽연합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스스로 자산관리, 투자, 소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역시 도시개발 부분이다. 유럽연합의 탈퇴는 유럽연합 기반시설 프로젝트 펀딩(EU Infrastructure Project Funding)의 손실을 의미한다.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이 이러한 프로젝트 펀딩을 담당하는데, 이는 28개 유럽연합 국가의 소유이다. 1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영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더불어 가장 큰 지분을 가진 국가이다. 주로 기반시설(infrastructure),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 재생에너지, 교육 등 공공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유럽투자은행은 2015년 기준 영국에 56억

유럽투자은행의 분야별 영국 투자 비율(2011~2015)

에너지(energy)	28%
교통(transport)	25%
상하수, 폐기물 처리 및 도시개발 (water, sewerage, solid waste, urban development)	25%
산업, 서비스, 농업 (industry, services, agriculture)	7%
교육, 건강(education, health)	11%
중소 규모 프로젝트 (small and medium-scale projects)	4%

자료: 유럽투자은행

파운드(약 8조 원)를 투자하였다. 지난 10년 동안의 투자액은 무려 420억 파운드(약 60조 원)에 달한다. 유럽연합 탈퇴는 이러한 전반적 투자의 동결을 의미한다. 물론 즉각적 동결보다는 점차적인 계획에 의한 감소를 의미할 것이다.

기반시설과 공공지원주택의 투자 동결이 영국의 건축과 도시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에 투자된 펀딩의 비율을 보면, 건축과 도시 산업에 관련된 교통·도시 개발 분야에 50%의 투자가 집중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영국 북부를 활성화 하려는 ‘노던 파워하우스(Northern Powerhouse)’이다. 이것은 영국 고속철 개발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인 ‘하이스피드 2(High Speed 2)’가 완료되어 고속철도망이 영국 북부와 연결되었을 때 가능한 프로젝트다. 유럽연합 기반시설 프로젝트 펀딩을 받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지연된다면 노던 파워하우스 계획 자체가 늦춰지는 위기를 맞게 된다.

전망과 시사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아직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영국 건축·건설·도시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과 노력도 있지만 부동산가격 하락, 건설경기 침체, 유럽연합 펀딩 중단, 인재들의 이탈 등이 우려된다. 일부는 실제 현실로 나타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RIBA, 영국건축사협회, 주요 건설사 등이 정부의 협력·보조 아래 빨 빠른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외국 시장 개발, 교육 연구 지원, 국가 기반 시설 투자, 건설재료 공급 확보, 재료의 국산화 진행 등 장단기 계획을 철저히 세워 대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국제 경제위기의 교훈으로 여러 건축 회사들이 사업의 다양화, 국제화를 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지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정부·협회와 주요 건설사들의 협력 및 다양화·국제화 대책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사례이다.

참고문헌

- 영국왕립건축학회(2017), “Global By Design”, 런던: 영국왕립건축학회.
- Rhodes, Christopher and Wendy Wilson(2016), “Brexit: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market and construction industry”, London: House of Commons Library.

프랑스의 ‘한시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재생

정희원
프랑스 건축사,
도시계획가

지난 2016년 11월, 아르세날 패빌리온(Pavillon de l'arsenal)*에서는 ‘한시적 도시계획(Urbanisme Temporaire)’을 주제로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잠재적 참여 주체들과의 네트워킹을 주선하는 대대적인 만남의 장이 열렸다. 파리 시의 도시계획 국장인 장 루이 미시카(Jean-Louis Missika)는 다음과 같은 말로 행사를 시작하였다.

“도시계획은 우선 공간의 개발을 지칭하지만 시간적인 계획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이란 사실상 공간과 시간을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한시적 도시계획은 변화하는 도시민의 삶에 맞게 도시의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며 유예된 도시 공간을 활용하고 새로운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것,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시적 도시계획의 철학과 방법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사례 소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시적 도시계획과 도시의 고원

한시적 도시계획 개념은 도시에서 공간과 시간의 긴밀한 연관관계에 대한 자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개발과 성장 위주에서 재생으로 도시적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도시공간과 시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도 기능적 도시계획 모델의 한계를 경험하고 도시민이 누리는 삶의 방식에 좀 더 부합하는 모델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한시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광범위한 의미의 한시적 도시계획은 시간성과 긴밀히 연관을 가지면서 수행하는 도시공간 계획 전반을 지칭하며, 여름철 도심 강변

* 파리 시의 대표적 건축·도시 커뮤니케이션 공간



아르세날 패빌리온에서 열린 한시적 도시계획 대회 광경
자료: <https://pbs.twimg.com/media/CyBD9qfXcAAJnAZ.jpg>

을 해변으로 바꿔 휴식처로 사용하는 축제적 장치에서부터 영구적 구축물이 자리 잡기 이전의 임시적인 대지나 건물 사용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을 지칭한다. 최근 프랑스에서 이슈가 되고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분야는 공지나 공실의 ‘한시적 점유(occupation temporaire)’이다.

도시 공간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포화 상태로 풀가동되는 듯하지만 사실 변화를 기다리며 유예된 공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도시의 고원(Plateau Urbain)’ 창립자이자 부동산 분석가였던 시몽 레네(Simon Laisney)는 파리를 비롯한 일 드 프랑스 지역에서 상당 수의 업무 공간이 노후 시설 개선이나, 새 도시계획 사업을 기다리면서 공실로 남겨지는 현실을 발견한다. 이렇게 숨겨진 공간 자원을 도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지난 2013년 도시의 고원을 설립하였다. 빈 건물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례는 주로 무단 점거(squat) 등의 형태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대부분 건물주의 갈등으로 인해 제도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

다. 이에 한시적 점유의 순기능을 부각시키고 저비용의 합법적 대여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한시적 점유의 제도적 정착을 유도하고 대중화하는 것이 도시의 고원이 표방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한시적 점유는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될 때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선 건물주는 무단 점거를 막기 위해 들여야 하는 관리비용을 절약하고 사용 공백기 동안 건물이 급속하게 노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예술가나 젊은 창업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에게 비록 1~2년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저렴한 값에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그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시적으로나마 유입되면 인근 도시 조직 역시 새로운 활기를 얻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물주에게도 이후의 건물 대여나 분양에 있어 상업적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한시적 점유로 인하여 건물주와 공간 수요자, 지역 주민 등 도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 공간의 교환 가치를 넘어서 사용 가치를 복원하며,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을 통해 도시의 순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에의 권리’를 복원하는 것이 도시의 고원이 표방하는 이상이다. 도시계획가·건축가·부동산 전문가와 지리학자 등 다양한 구성원 프로필을 특징으로 하며, 창설 초기에는 주로 구성원의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소규모 프로젝트를 확보하였다. 주로 비어 있는 상업 공간에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여간 예술가의 전시와 퍼포먼스를 실현하며 경험과 입지를 다지면서 차츰 프로젝트 규모와 성격을 다양화하게 된다. 마침내 한시적 도시계획을 대대적인 담론의 장으로 이끈 결정적 계기는 2015년 중반부터

시작된 ‘그랑 부아장(Les Grands Voisins)’ 프로젝트이다.

그랑 부아장 프로젝트

파리 14구에 3.5ha에 걸쳐 자리한 생 뱅상 드 폴(Saint Vincent de Paul) 병원은 그간 드러난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지난 2011년 병원의 영구적인 폐쇄가 결정되었고, 2012년부터 병원 시설은 점진적으로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부지의 새로운 활용 방안이 확립되기 이전에 내려진 결정이었기에, 기존의 병원은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른 공사가 시작될 시점인 2017년 말까지 5년가량의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다. 하여 이 기간 중 병원을 소외 계층의 긴급 구호 주거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오로르(Aurore)에 대여하기로 구청장과 우선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구호주거시설이 들어서지만 병원의 규모가 워낙 커서 여전히 빈 공간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인 오로르는 마침내 도시의 고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2015년 5월부터 도시의 고원의 코디네이션하에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문이 열리면서 ‘큰 이웃들’을 의미하는 ‘그랑 부아장’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얻게 된다.

2016년 현재 유럽 최대 규모의 한시적 점유 사례로 손꼽히는 그랑 부아장은 1만 2,000m²가 구호숙소와 외국인 노동자 숙소(600여 명 거주)로 사용되고 있고, 6,600m²는 140여 개 비영리 민간단체와 스타트업이나 예술가들(1,000여 명)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유토피아적 공동체라고 여겨질 만큼 입주한 각종 단체 간 교류는 물론 거주민과 단체 간 연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와 정원 가꾸기, 방범 등 부지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은 구호숙소 거주민들의 재활을 위한 일자리로 값지게 이용되고 있다. 새로운 도시생태계의 순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구청에서는 ‘Yes We Camp’



그랑 부아장 구성도

자료: Plateau Urbain



2015년(상)과 2016년(하)의 생 뱅상 드 폴 병원 전경

자료: Plateau Urbain

라는 건축 공동체*에 식당이나 쉼터·텃밭·문화공간 등 병원 내 공용 공간 조성을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입주자 간 교류가 촉진되는 한편 그랑 부아장은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일반인도 찾는 명소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 350여 명에 달하는 등 병원 인근은 이전보다 더 큰 활기를 띠는 동네가 되었다. 2017년 하반기로 예정된 영구 이전을 몇 개월 남기지 않은 그랑 부아장 구성원들은 한시적 점유를 통해 촉발한 장소성을 이후에 들어설 친환경 마을(eco-quartier) 프로그램 구성에 밀그림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다.

한시적 점유의 경영 모델과 개발 전략

가능성의 바다에 실험적인 생각으로 뛰어들어 현실적인 사업 모델을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도시의 고원은 창업 초기의 현실적 관문을 갖 통과한 도시개발 분야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창업자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아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세입자에게 낮은 월세로 활동기반을 마련할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도시의 고원은 세입자에게서 수익을 얻는 모델이 아니라 일시적 점유의 이점을 인식한 건물주(주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발업체)들로부터 받는 회원비로 운영된다.

건물주로부터 한시적 점유 공간을 확보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일주일가량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를 통해 최대한 다양한 프로필을 가지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체들을 선정한다. 이어 선정된 입주 예정자들의 현장 답사가 이루어지고, 최종 세입자들이 들어오기까지 모두 한

* 건축 공동체(collectif d'architectes)는 주로 적은 예산으로 유연하게 도시 공간에 개입하여 공간이 가지는 사용적인 잠재력을 발현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축가 그룹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시적 점유 사례

자료: Plateau Urbain

달이 안 되는 시간이 소요된다. 전체 임대 기간이 길어야 2년이기 때문에 초기의 행정적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주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2016년 11월부터는 인터넷 플랫폼을 론칭하여 다수의 건물주와 입주 희망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종의 한시적 점유에 어비엔비(Airbnb)라고 할 수 있는데, 주최 측인 도시의 고원이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유경제 모델과는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고 개발 담당자 폴 시트롱(Paul Citron)은 강조한다.

그랑 부아장의 예가 입지나 규모에 있어서 한시적 점유 모델로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한시적 도시계획이 가지는 잠재력은 실제로 아주 크다. 일 드 프랑스 지역에만 140ha에 달하는 유휴 산업시설, 300만m²에 달하는 노후 업무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플랫폼 론칭 한 달 만에 이미 1,500여 개인과 단체가 가입하였고, 총 9만m²에 달하는 공간 수요가 집계되어 한시적 점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고원은 2016년 11월 이후 3개월 남짓한 기간에 파리와 인근 도시에서 크고 작은 5개(총 5,700m²)의 새로운 한시적 점유 프로젝트를 발주하였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점유 자체를 영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과 영속적인 것의 대립을 뛰어넘고, 한시적 점유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부여하는 데에 있다고 도시의 고원은 강조한다.

한편 그랑 부아장의 예처럼, 한시적 점유를 통해 부지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프로그램적인 밀그림을 그려 이후의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랑파리 회사가 주최하여 파리와 일 드 프랑스 지역 60여 개의 부지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 말 전격적으로 발주된 ‘메트로폴의 발명(Inventons la métropôle)*’ 공모전 최종 참여 팀 구성과 선정에 있어서도 한시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었다.**

물론 도시의 고원이 제안하는 한시적 점유 모델은 사용자층의 구성이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젊은 기업과 예술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한시적 점유가 젠트리피케이션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아직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시적 도시계획이 보여준 가능성과 밀그림을 영구적 도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 <http://www.inventonslametropoledugrandparis.fr/>

** 실제로 도시의 고원을 비롯한 다수의 한시적 도시계획 관련 주체들이 절반이 넘는 부지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한시적 점유를 제도화하고 그로부터 부지의 밀그림을 그린다는 전략의 표현이다.

한시적 도시계획 Meet-Up에서 소개된 한시적 점유 사례

위치	운영 기관	소유주	임대 기간	점유 면적	임대료	거주민과 사용자	
그랑부아장 (Les Grands Voisins)	파리 14구	Aurore, Yes We Camp, Plateau Urbain	EPFIF, 파리 시	2년	건축 면적 21,000 m ² , 대지 면적 3.5ha	거주민 : 0€ 대지 관리 운영 담당 사용자 : 월 17€/m ²	140여 개 민간단체, 6개 구호 주거 센터, 이민자 주거 센터, 식당, 중고 물품 가게
원더(Le Wonder)	생투엥 (Saint Ouen)	Le Wonder	Habitat	3년	3,500 m ²	0€ 대지 관리 운영	예술가 60여 명
Le Pavillon du Dr. Pierre	낭테르 (Nanterre)	Soukmachines	SEMNA	10개월	건축 면적 2,000 m ² , 대지 면적 4,000 m ²	월 6€/m ²	예술가 50여 명, 12차례 이벤트 개최
L'Openbach	파리 13구	LaboL.I.C	Leichemont	12개월	530 m ²	월 12.5€/m ²	30여 명의 거주민(민간단체, 장인, 예술가, 스타트업)
Le Welcome City Lab	파리 12구	Le Welcome City Lab	Gecina	2년 6개월	3,600 m ²		40여 개 관광 산업 스타트업

자료: Ignès Edel-Garcia (2016), “L’urbanisme temporaire, nouveau mot d’ordre de l’aménagement?”, *Traits Urbains*, n°86, pp.39~43.

시사점

신도시와 뉴타운 위주의 개발 중심에서 재생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 패러다임이 전환기를 맞은 이후 과도기적 문제들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뉴타운의 경우 잇따른 개발 계획의 좌초와 지역으로 인해 관련 도심 일대가 활기를 잃고, 지역 경제 침체와 치안 악화 등을 초래한다. 개발 위주의 도시 계획이 고밀도의 마스터플랜을 통해 변화의 동력을 형성화한다면, 도시재생을 이끄는 새로운 변화의 동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도시의 자원을 재발견하고 적극 활용하여 그 잠재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고원의 예처럼, 흩어져 있는 도시의 자원을 한데 모으고 가시성을 부여함으로써 각각의 사례가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어 큰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도시의 고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plateau-urbain.com/> (검색일: 2017. 3. 7.)
- 한시적 도시 계획 대회(Meet-Up) 발제 영상, <http://www.pavillon-arsenal.com/fr/conferences-debats/cycles-en-cours/horscycle/10507-meet-up-urbanisme-temporaire.html> (검색일: 2017. 3. 7.)
- 그랑 부아장 공식 홈페이지, HYPERLIN++K "<https://lesgrandsvoisins.org/>" "<https://lesgrandsvoisins.org/>" (검색일: 2017. 3. 7.)
- 그랑 부아장 소개 영상, <http://www.pavillon-arsenal.com/fr/arsenal-tv/documentaires/paris-solidaire/10519-les-grands-voisins.html> (검색일: 2017. 3. 7.)
- 메트로폴의 발명 벌주 공식 홈페이지, <http://www.inventonsla-metropoledegrandparis.fr/> (검색일: 2017. 3. 7.)
- Jérôme Badie(2016), "Urbain de jouvence", http://www.libération.fr/france/2016/11/22/urbain-de-jouvence_1530245 (검색일: 2017. 3. 7.)
- Laurence Albert(2016), "Saint-Vincent-de Paul invente la ville éphémère", https://www.lesechos.fr/14/09/2016/LesEchos/22276-351-ECH_saint-vincent--de-paul-invente-la-ville-ephemere.htm#xJYxV0jjxi2xjzbO.99 (검색일: 2017. 3. 7.)

- Ignès Edel-Garcia(2016), "L'urbanisme temporaire, nouveau mot d'ordre de l'aménagement?", *Traits Urbains*, n°86, pp.39~43.
- Henri Lefebvre(1968), *Le droit à la ville*, Anthropos, Paris.
- Henri Lefebvre(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Anthropos, Paris.
- 도시의 고원 개발 담당자 Paul Citron 인터뷰 내용(tous mes remerciements) (2017.2.23.)

다시 주목받는 함부르크 하펜시티 프로젝트

함부르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엘베 필하모니 콘서트홀 완공을 앞두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사비 등 여러 이유로 비판에 시달려 왔지만, 근사하게 완공된 건물 앞에선 모두가 찬사를 보냈다. 자연스럽게 엘베 필하모니 콘서트홀이 위치한 함부르크 하펜시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다시금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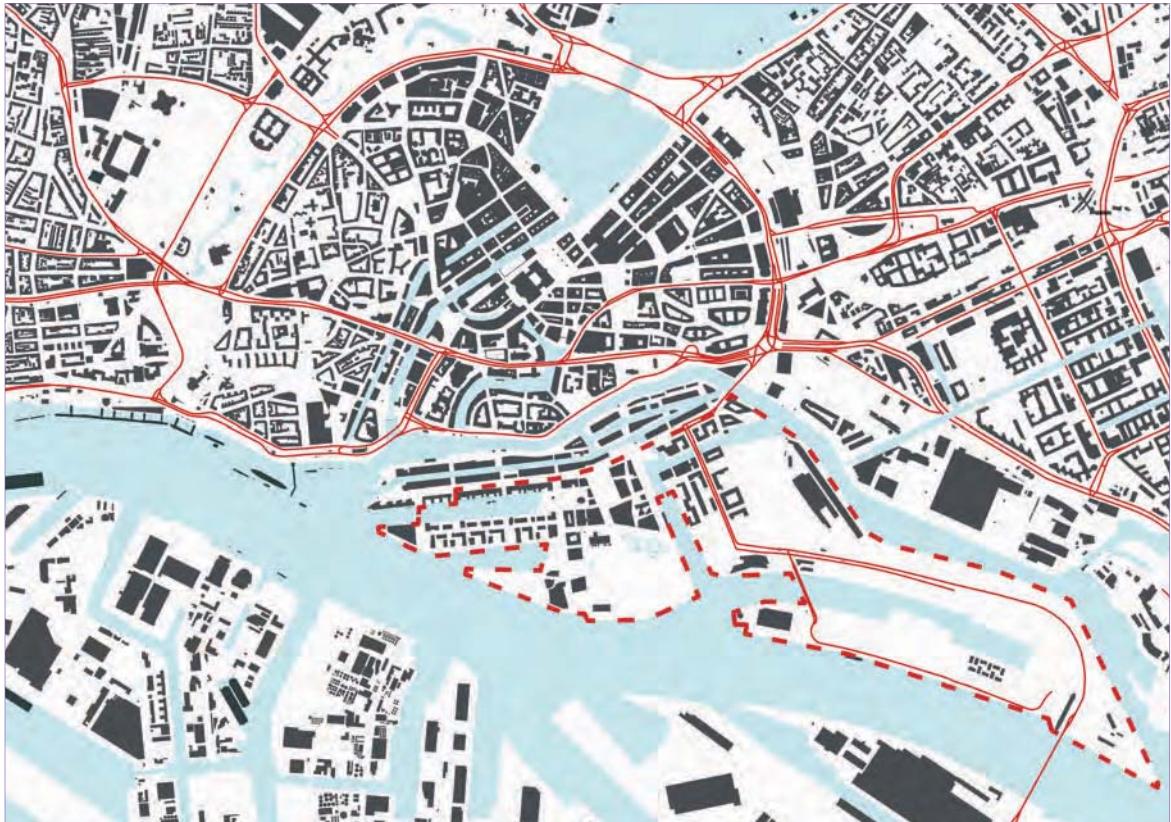
함부르크는 독일 내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에서 막강한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오랜 세월 항구 도시로서의 명성과 기능을 이어오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1997년 본격적으로 계획과 개발에 들어간 하펜시티는 현재 총 프로젝트의 50% 이상이 완공되었고, 그간 두 번의 마스터플랜 수정과 수많은 건축·조경 공모전을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뿐 아니라 다양성을 높여 갔다.

하펜시티가 건설되고 있는 장소는 19세기 중반까지 구도심의 성곽 밖에 위치한 두 섬(Grosser Grassbroock과 Baaken-Wärder)이었다. 이 섬에는 19세기 후반이 돼서야 산업화의 물결이 도달하였다. 도시의 팽창으로 철로가 건설되었으며, 창고와 물류 단지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현재 하펜시티에 접해 있는 슈파이셔 슈타트(Speicherstadt)는 그 당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2015년 유네스코 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폭격의 주요 대상지였던 함부르크는 폐허에서 국제 무역과 언론의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도심에 인접하였던 과거 산업·항구 시설은 점차 엘베 강 건너편으로 이전되었다. 이와 함께 하펜시티가 위치할 지역의 산업시설 역시 점점 쇠퇴하였고,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 도로 건설로 물리적 단절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명암

신희완
베를린 공과대학교 도시디자인
석사과정



함부르크 구도심과 주요 도로 및 하펜시티의 위치도 (점선 부분은 하펜시티 프로젝트 대상지, 실선 부분은 함부르크 시내 주요 도로)

하펜시티 프로젝트 계획 수립 과정

하펜시티와 잊고 있던 땅을 이용하려는 구상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시작되었다. 북유럽과 유럽 대륙,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경계에서 있는 지리적 강점 덕분에 통일 이후 도시 경제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개발이 필요하였다. 바로 그때 구도심에 인접해 있지만 오랜 세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두 섬이 프로젝트 대상지로 떠올랐다.*

1995년 시 정부는 항구 및 택지개발회사(Gesellschaft für Hafen- und Standortentwicklung: GHS)를 설립하여, 대상지 내 민간 건물을 모두 사들였고, 동시에 기존의 시설을 엘베 강 건너편으로 옮기

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추후 거주민과의 법적 분쟁이나 건물 소유주와의 부동산거래 문제 그리고 시민단체와 충돌하는 경우가 잦은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그러한 장애물 없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첫 구상안은 1996년 당시 함부르크 시장이었던 헨ning 포세라우(Henning Vorscherau)의 비밀스러운 요청으로 건축가이자 교수인 볼크вин 마르크(Volkwin Marg)가 맡았다.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1997년 5월 포세라우 시장은 ‘하펜

* Dzioomba(2009), p.117

** HafenCity Hamburg GmbH(2016)

시티 비전 '이라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같은 해 8월 계획 개발 승인이 난다. 하펜시티 비전의 가장 큰 목표는 당시 부족하였던 함부르크의 주택 지역과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사무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도시개발에 소셜 믹스가 가능한 '모두를 위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1999년 하펜시티 국제 공모전과 2000년 마스터플랜

하펜시티 비전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었다. 바로 1999년에 개최된 국제 공모전을 위한 연구였다. 수많은 투자자와 개발업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 하펜시티 국제 공모전에서 네덜란드의 케이스 크리스티안서(Kees Christiaanse)와 독일의 ASTOC 팀이 당선되었다.

도시개발에 있어 빠른 사회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마스터플랜이 유효하지 않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고정된 원칙과 개발 중 수정이 가능한 규칙을 바탕으로 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 총 8개 구역으로 분할된 계획안은 구역마다 특성에 맞춰 다른 기능과 도시 구조를 가지도록 계획되었다.*

당선작은 1년간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고, 2000년에 GHS의 승인과 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 21세기 유럽형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동시에 함부르크의 항구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운다는 목표로 최종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초기에 사들인 땅의 가치에 비해 2000년 당시 땅값이 치솟는 바람에 계획안이 좀 더 고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8개로 나뉘었던 구역이 총 18개의 구역으로 세분화되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GHS 회장 자리에는 함부르크 노동경제청의 회장(2002), 올레 폰 보

이스트(Ole von Beust) 전 함부르크 시장(2003) 그리고 미하엘 프라이탁(Michael Freytag, 2004)이 거쳐 갔다. 미하엘 프라이탁은 GHS 회장직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함부르크 도시개발 환경청 장관을 지냈다. 거쳐 간 회장들의 경력만 보더라도,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많은 권력의 힘이 모아졌음을 알 수 있다.

GHS는 2004년 하펜시티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HafenCity Hamburg GmbH: HCH)로 이름을 바꾸고, 동시에 국제 투자자 입찰을 시작하였다. 매력적인 계획안임에도 여전히 도심 고속도로로 단절된 하펜시티 지역은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하기에 매력적인 곳은 아니었다. 2006년 말 HCH는 함부르크 도시개발 환경청이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B-Plan을 다른 프로젝트의 B-Plan에 앞서 우선적으로 수정하는 특별 지위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계획 과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밀어주기'에도 불구하고 2007~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건설 및 투자 시장이 침체되었고, 엘친 데 델친 격으로 하펜시티의 랜드마크 이자 주요 건축 프로젝트였던 엘베 필하모니 콘서트홀의 공사비용이 2008년 말에 이미 2억 900만 유로에서 3억 2,300만 유로로 치솟았다. 게다가 2009년에는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게 되었다.****

그 외에 18개의 구역 중 첫 두 공사 구역이었던 암산트토어카이(Am Sandtorkai) 구역과 달만카이(Dalmannkai) 구역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 공사 시작 8년 만에 하펜시티는 사람이 살고 일하는 장소가 되었고, 1.7km에 달하는 강변 산책로가 조성됨

* <http://www.kcap.eu/en/projects/v/hafencity/>

** HCH(2013)

*** Dziomba(2009), pp.125~126

**** <http://www.hafencity.com/en/overview/hafencity-development-facts-and-figures.html>

에 따라 사람들이 수변 공간을 더 자유롭게 항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마스터플랜 수정안과 현재

약 10년간의 계획과 개발 끝에 마스터플랜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의 경제위기 뒤에 닥친 재정 문제였다. 또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지가 개발 대상지로 지정되어 실제 개발구역이 123ha에서 128ha로 증가한 데다, 총 연면적이 150만m²에서 232만m²로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게다가 첫 마스터플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홍수방지 계획이 새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었다.* 하펜시티 비전보다 밀도가 높아졌던 2000년 마스터플랜보다도 훨씬 고밀화된 마스터플랜을 통해 투자

가로부터 더 많은 자본을 끌어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마스터플랜 수정이 불가피해진 또 다른 이유는 당시 함부르크 시가 2024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야망**을 품고 있었고, 따라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업무·거주 용도의 개발에서 최근에는 다양한 교육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는 등 점점 더 사람이 살아가는 지역의 구

* HafenCity Hamburg GmbH(2016)

** <http://fairspielen.de/ein-stadtteil-fuer-olympia/>

*** 함부르크 시의 올림픽 유치는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과 주민투표를 통해 무산되었다.



완공된 하펜시티 강변 산책로의 모습

◎ 김희원

색을 갖추고 있다. 2015년에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일부 수정하였다. 지난해에는 하펜시티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로세 공원이 개장하였고, 엘베 필하모니 콘서트홀이 완공되었으며 전체 프로젝트의 50% 이상이 진행된 상태이다.

평가

21세기 유럽형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표방한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전형적인 20세기 관 주도의 도시개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젝트 시작부터가 시장의 비밀스러운 목표였고, 이는 정상적인 민주사회에 공공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프로젝트 시작 전에 땅을 미리 매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두 번의 경제위기와 엘베 필하모니 콘서트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좌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비밀스럽게 준비된 채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계획 및 개발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단지 축제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와 행사는 도시개발 역시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HCH와 함부르크 시는 하펜시티 개발 구역을 공공에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이에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도시개발의 현장을 구경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다.

유연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한 하펜시티는 '건축 동물원'이라는 비판 아닌 비판을 받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 가득하다. 하지만 초기에 정치권에서 요구하였던 소셜 믹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고급주택 단지와 오피스 단지로 개발되었다는 점은, 겉모습만 다양할 뿐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게다가 하펜시티가 개발되는 동안 함부르크 시의 주택난이 더욱 악화되었는데도, 시 정부가 100% 땅을 소유한 하펜시티 프

로젝트가 그 문제를 전혀 완화시켜 주지 못하였다는 것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비판받을 문제다.

참고문헌

- Dziomba, M.(2009), *Städtebauliche Großprojekte der urbanen Renaissance*, Berlin [u.a.]: LIT.
- HafenCity Hamburg GmbH(2016), HafenCity Hamburg, <http://www.hafencity.com/> (Accessed 13 Jun. 2016.)
- Ges. für Hafen- und Standortentwicklung(GHS)(2000), HafenCity Hamburg - Der Masterplan. Hamburg: Ges. für Hafen- und Standortentwicklung.
- Ges. für Hafen- und Standortentwicklung(GHS)(2003), Städtebaulicher Wettbewerb - das Ergebnis. Hamburg: GHS.
- HafenCity Hamburg(HCH)(2013), Themen Quartiere Projekte. Hamburg: HafenCity.
- Tiedemann, A.(2012), Bei Touristen kommt die HafenCity gutan, <http://www.abendblatt.de/hamburg/article107727213/Bei-Touristen-kommt-die-HafenCity-gut-an.html> (Accessed 13 Jun. 2016.)

민간임대주택의 최근 정책 동향

김리숙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사무관

뉴스테이 정책 추진배경

저금리가 계속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거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계약만료 후 급격한 임대료 상승, 짧은 계약기간, 임대기간 중 퇴거 요구 등 비자발적 이주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재고를 꾸준히 확충하였으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하여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꾸준히 확충^{*}하되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던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고자 2015년 1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여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뉴스테이 정책을 도입하였다.

뉴스테이는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 8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주택품질뿐 아니라 보육·교육, 청소, 카셰어링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금·세제·택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5.12. 시행)하여 임차인에게 꼭

*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인 55만 1,000호(2013~2017)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짧은 충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도 확대(2013~2017, 15만 호)

필요한 규제, 즉 임대의무기간(8년)과 임대료상승제한(연 5%)만을 유지하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담보권 제한’에 관한 규제는 폐지하였다.

해외의 민간임대주택 지원정책 사례

이미 해외에서는 정부 주도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정책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쳐 왔다. 일본은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정부가 건설비의 6분의 1을 보조하고, 개량의 경우 공용 부문 건설비의 3분의 2를 지원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자금 저리 융자, 우량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등 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땅을 임대주택으로 개발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30~70%까지 면제해 주기도 한다. 이 외에도 리츠(J-REITS) 제도를 도입하여 자본시장의 풍부한 자금이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배당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낮추어 리츠 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2013년 뒤플로법에 따라 임대주택 투자금액의 약 18%까지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9년간 소득세를 감면^{*}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책은행에서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공사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사업자금의 100%까지 대출을 해 준다.

영국은 임대주택 거래세인 등록세율을 감면^{**}하는 등의 세제지원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투자자에 대한 채무보증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감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2013년 예산 중 일부를 이용하여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투자자에게 연간 10억 파운드의 건설기금(Build to Rent Fund)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주도의 건설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과 독일에서는 개발비용을 세액

공제 등으로 감면하여 상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투자유인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정책 도입과 연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뉴스테이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 15만 호, 영업인가 8만 5,000호, 입주자 모집 4만 호를 목표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2년 동안 부지 확보 8만 9,000호, 영업인가 4만 3,000호, 입주자 모집 1만 8,000호의 성과를 거두었다.

뉴스테이 사업은 대표적으로 촉진지구사업^{***}, 민간제안사업^{****}, LH 공모사업^{*****}, 정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방식 외에도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큰 토지를 리츠가 매입하여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민간임대주택 공급주체로 끌어들이는 협동조

*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새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주택구입 투자비(부대비용 포함)의 약 18%까지 과표를 공제하고, 이를 통해 연간 최대 6,000유로의 임대소득세를 감면

** 영국은 대규모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자에게는 과세표준의 5%인 등록세율을 1%로 감면하고, 등록세는 구입한 전체 자산을 기초로 책정되지 않고 개별 자산의 평균 가치를 평가하여 책정(분리과세)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를 운영

*** 면적(도로, 공원 등을 제외한 유상면적 기준)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하기 위해 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하는 사업

**** 민간이 보유한 부지 중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뉴스테이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 LH 보유부지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임대사업자와 기금이 공동출자하는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사업

뉴스테이 공급물량 목표 및 실적

구분	공급목표 (2015~ 2017)	공급실적			2017년 계획
		합계	2015년	2016년	
사업지 확보	15만 호	8.9만 호	2.4만 호	6.5만 호	6.1만 호
영업인가	8.5만 호	4.3만 호	1.4만 호	2.9만 호	4.2만 호
입주자 모집	4만 호	1.8만 호	0.6만 호	1.2만 호	2.2만 호

합형 뉴스테이, 금융환경 변화로 활용가치가 낮아진 도심지역의 은행지점을 활용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도심형 뉴스테이 등 전통적인 아파트 단지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뉴스테이가 공급되고 있다.

한편 뉴스테이 사업에는 다양한 민간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LH 보유부지를 대상으로 7차례 사업자 공모를 한 결과 총 72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업계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건설사뿐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FI), 임대관리업체(PM)도 출자에 참여하는 등 참여주체도 다변화되고 있다.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의 뉴스테이에 대한 호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첫 입주자를 모집하였던 인천 도화의 경우 5.5: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첫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며 2015년 평균 청약경쟁률 4.4:1, 2016년 평균 청약경쟁률 4.7:1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테라스형으로 공급한 동탄2의 경우 평균 청약경쟁률 26.4:1을 기록하였다.

입주예정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뉴스테이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6년 뉴스테이 인식조사 결과*, 대상자의 49.8%가 뉴스테이를 알고 있으며 45.4%가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도 대비 인지도는 21.6%p, 호감도는 10.3%p나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뉴스테이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공급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급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검토 중인 사업도 5만 호에 달하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뉴스테이가 공급될 예정이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분양주택 수준의 우수한 주택품질과 돌봄·가사·생활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주거서비스를 사전에 계획하고 실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6년 10월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는 단지 계획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의 비용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주거서비스가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기간 중 임차인에게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꾸준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인증기준 관리나 인증기관 지정 등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인증제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주거서비스 계획서를 통해 예비인증을 받은 뉴스테이 단지는 입주 1년 후에 본인증을 받게 된다. 본인증은 계획이행 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년마다 인증을 갱신하게 된다.

뉴스테이 사업자는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보육시설, 카셰어링, 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 한국갤럽, 수도권과 광역시 1,000명을 대상으로 뉴스테이 인식조사, 2016.11.

**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으로 3개 촉진지구 지정 및 약 2,000호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추진 검토 중

*** 부산시 '부산형 뉴스테이'로 2만 호 공급 추진(부산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10대 추진시책, 2016.9.8.)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단지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현재까지 용인삼가·서울개봉·서울남부교정 등 5개 단지가 예비인증을 받았고, 단지별 특성에 맞춰 보육·카셰어링·청소·임대료카드납부·건강증진시설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로 뉴스테이 입주희망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주거서비스 계획을 확인하고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입주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 40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단지 내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6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서비스 강화 추진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2·대구금호·충북혁신 등 4개 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뉴스테이 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과제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획(2015~2017, 3년간)하였던 부지 확보 15만 호, 영업인가 8만 5,000호, 입주자 모집 4만 호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에는 부지확보 6만 1,000호, 영업인가 4만 2,000호, 입주자 모집 2만 2,000호를 목표를 삼고 있다. 또한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예산도 2조 1,000억 원^{*}을 확보하였다.

2017년부터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광역지자체별로 1개 단지 이상 공급하는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사업이 기업과 재무적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폭넓게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브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를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제안 사업방식에서도 변화를 주었다. 그동안은 제안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마다 선착순으로 심사하여 기금출자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업타당성이 높은 우수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추가하여 우수한 사업장을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뉴스테이 임대기간 중 주거서비스를 평가하는 본인증 운영기준도 마련하고, 주거서비스 인증 단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입주자들의 생활편의와 적정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뉴스테이와 다양한 시설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 허용 시설물을 확대하고,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행위 제한 및 특혜시비 해소를 위해 뉴스테이 사업 특성에 맞는 기부채납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3년차를 맞이하는 뉴스테이는 꾸준한 제도 개선으로 조금 더 세련된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뉴스테이가 임대주택의 새로운 지평을 연 만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 * 2017년 주택도시기금예산: 출자 1조 1,700억 원(전년 대비 63% 상승), 융자 9,275억 원(전년 대비 118% 상승)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2015),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 장경석(2016),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한국주택학회 정책세미나(2016.7.7.)
- 서수정·염철호·여혜진(2016),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의 개편과 성과

이여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개편 배경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는 「건축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의 주요 목적은 건축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자체 건축행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최초로 시행된 1999년 이후 매년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의 취지와 평가지표의 정합성 부족, 평가지표의 잣은 변경, 불분명한 평가방식 등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2016년 국토교통부는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최근 3년간 지자체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지표 변동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특성	민원 중심	규제 폐지 + 정책이행도	규제 폐지 + 정책이행도
주요 평가 지표	지역별 민원처리 건수 민원 감축률 민원만족도 제고 노력 등	지역건축규제 정비 실적 건축협정 준비 건축민원위원회 준비 등	지역건축규제 정비 실적 건축심의모니터링 평가 우수 행정사례 등

자료: 국토교통부(2016), 2016년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계획, p.1.

2016년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개편 방향

기존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방식, 수상 부문까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개편을 진행하였다.

첫째,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의 대상을 일부 지자체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특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그룹을 4개로 구분하였다. 평가그룹은 지자체 단위 및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광역지자체,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지자체,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기초지자체, 인구 10만 명 미만의 기초지자체 총 4개 평가그룹으로 나누었다.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의 개편 방향 및 내용

구분	개편 방향	개편 전·후 지표 비교	
		기준	개편
평가대상	평가대상의 확대 및 평가그룹 구분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1~2곳 (총 34개 또는 51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전체 평가 (총 243개)
		광역지자체 평가에 기초지자체 1~2곳의 평가를 반영	4개 평가그룹으로 구분 · 평가그룹 A(광역) : 17개 · 평가그룹 B(인구 50만 이상 기초) : 23개 · 평가그룹 C(인구 10만~50만 기초) : 109개 · 평가그룹 D(인구 10만 미만 기초) : 94개
평가지표	건축행정 전반을 고려하고 지자체 단위에 따른 평가지표 차별화, 매년 일관된 평가지표 적용	국토교통부 중점 정책에 따라 매년 지표 변경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동일한 지표 적용	건축물 생애주기와 연계된 건축행정 전반을 평가, 매년 일관된 지표 적용 평가그룹별 지표 차별화
			외부전문가와 국토교통부 합동평가 (2016년 : 중앙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평가방식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와 합동평가	국토교통부 자체 평가	
수상 부문	평가그룹별 포상, 건축행정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축면의 포상 강화	단일 분야 (광역지자체에만 포상)	일반 부문과 특별 부문으로 구분 · 일반 부문: 평가그룹별 포상 · 특별 부문: 지자체 자체 노력 사례에 대한 포상

자료: 이여경(2016), 2016년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설명회 발표자료, p.10.

둘째,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규제 정비 등 특정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건축행정 전반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차별화하였다. 또한 성과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일관된 지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자체 평가에서 외부 전문가와 국토교통부의 합동 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였다.

넷째, 지자체의 건축행정 개선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특별 부문을 신설하였다.

개편된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의 주요 내용

일반 부문

일반 부문에서는 건축물 생애주기와 연계된 건축행정 업무 및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성 확보 현황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물 생애주기별로 ①허가 단계의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②시공·철거 단계의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③유지·관리 단계의 유지·관리 적절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④운영 단계의 건축행정 전문성과 ⑤건축행정 개선을 위한 자체 개선노력도 등 모두 다섯 가지의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러한 평가항목에 따라 총 11개 세부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지자체 건축행정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적용하는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였다.

한편 각 지표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산식 및 점수부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평가대상의 경우 당해연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내용은 지표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산식과 점수 부여 기준은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였으며,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 지자체에서도 평가결과에 대한 자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편된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광역지자체(평가그룹 A)	기초지자체(평가그룹 B, C, D)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1. 건축심의기준 적합 여부(5점) 2. 건축심의결과 공개실적(5점)	1. 건축심의기준 적합 여부(5점) 2. 건축허가처리기간 준수 여부(10점)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3. 방치건축물 관리실적(10점) 4.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적(5점)	3. 안전사고 발생비율(10점) 4. 척공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10점)
유지·관리 적절성	-	5. 유지·관리 점검 이행실적(10점) 6. 위반 건축물 관리실적(10점)
건축행정 전문성	5. 전문인력 비율(10점) 1) 부서 총 인원 대비 건축직 공무원 수 2) 건축직 공무원 수 대비 전문자격 보유자 비율 3) 건축행정 관련 전문교육 이수 실적 6. 건축민원 감축률(5점)	7. 전문인력 비율(10점) 1) 부서 총 인원 대비 건축직 공무원 수 2) 건축직 공무원 수 대비 전문자격 보유자 비율 3) 건축행정 관련 전문교육 이수 실적 8. 1인당 업무부담률(5점) 9. 건축민원 감축률(5점)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7. 건축정책 이행도(10점) 1) 건축규제 모니터링 협조 실적 2)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관련 조례 개정 실적 8. 지자체 자체 노력도(15점) 9. 관찰 기초지자체 관리 노력도(15점)	10. 건축정책 이행도(10점) 1) 건축규제 모니터링 협조 실적 2)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관련 조례 개정 실적 11. 지자체 자체 노력도(15점)
총점	80점	100점
감점	제출기간 미준수 : 최대 2점 감점 자료 충실통 : 최대 3점 감점	제출기간 미준수 : 최대 2점 감점 자료 충실통 : 최대 3점 감점
가점	방치건축물 공사재개 및 철거 실적 : 최대 2점 가점	-

자료: 국토교통부(2016), 2016년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계획, p.4.

특별 부문

특별 부문은 건축행정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 정책 및 제도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특별 부문의 경우에는 응모한 지자체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맡는다. 특별 부문의 주제는 원칙적으로 매년 변경되도록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현장밀착형 건축행정 추진 사례’라는 주제로 공모하였다. 아울러 특별 부문의 평가는 아이디어 참신성(40점), 추진의지 및 노력도(25점), 개선효과(25점), 증빙자료 충실성(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사례를 선정하였다.

2016년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결과

일반 부문

2016년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를 진행한 결과, 각 지표별로 지자체 건축행정의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평가그룹 A에 속하는 광역지자체 17곳에 대한 평가 결과, 건축행정절차·합리성 부문에서 건축심의기준을 절차나 내용이 적합하게 개정한 적합한 지자체는 3곳뿐이었으며, 심의결과를 기한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자체 역시 7곳밖에 없었다.

또한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부문에서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으나,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건축행정절차 합리성 부문 사례)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방식										
건축행정절차 합리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심의 신청 및 위원회 개최가 완료된 심의 건 평가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적합한 지자체 심의기준의 개정 여부 및 내용적·절차적 적합성 평가 평가산식 해당 없음 점수 부여 기준 심의기준 개정 여부 및 적합성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절대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th><th>점수</th></tr> </thead> <tbody> <tr> <td>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심의기준 개정 + 적합</td><td>배점 점수(5점)의 100%</td></tr> <tr> <td>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심의기준 개정 + 절차적 또는 내용적으로 부적합</td><td>배점 점수(5점)의 50%</td></tr> <tr> <td>심의기준 미개정 또는 미제정</td><td>배점 점수(5점)의 0%</td></tr> </tbody> </table>	기준	점수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심의기준 개정 + 적합	배점 점수(5점)의 100%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심의기준 개정 + 절차적 또는 내용적으로 부적합	배점 점수(5점)의 50%	심의기준 미개정 또는 미제정	배점 점수(5점)의 0%		
기준	점수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심의기준 개정 + 적합	배점 점수(5점)의 100%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심의기준 개정 + 절차적 또는 내용적으로 부적합	배점 점수(5점)의 50%										
심의기준 미개정 또는 미제정	배점 점수(5점)의 0%										
건축심의결과 공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심의 신청 및 위원회 개최가 완료된 심의 건 평가내용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한 심의 개최 후 10일 이내 심의 주요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여부 점검 평가산식 $\frac{10\text{일 이내 심의결과 공개 건수}}{\text{총 심의 건수}}$ 점수 부여 기준 심의의결 결과를 1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지 여부로 구분(절대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th><th>점수</th></tr> </thead> <tbody> <tr> <td>10일 이내 모든 심의결과 공개 (산식 적용결과: 1)</td><td>배점 점수(5점)의 100%</td></tr> <tr> <td>10일 이내 과반 이상의 심의결과 공개 (산식 적용결과: 0.5 이상)</td><td>배점 점수(5점)의 70%</td></tr> <tr> <td>10일 이내 과반 미만의 심의결과 공개 (산식 적용결과: 0.5 미만)</td><td>배점 점수(5점)의 30%</td></tr> <tr> <td>미공개 (산식 적용결과: 0)</td><td>배점 점수(5점)의 0%</td></tr> </tbody> </table>	기준	점수	10일 이내 모든 심의결과 공개 (산식 적용결과: 1)	배점 점수(5점)의 100%	10일 이내 과반 이상의 심의결과 공개 (산식 적용결과: 0.5 이상)	배점 점수(5점)의 70%	10일 이내 과반 미만의 심의결과 공개 (산식 적용결과: 0.5 미만)	배점 점수(5점)의 30%	미공개 (산식 적용결과: 0)	배점 점수(5점)의 0%
기준	점수										
10일 이내 모든 심의결과 공개 (산식 적용결과: 1)	배점 점수(5점)의 100%										
10일 이내 과반 이상의 심의결과 공개 (산식 적용결과: 0.5 이상)	배점 점수(5점)의 70%										
10일 이내 과반 미만의 심의결과 공개 (산식 적용결과: 0.5 미만)	배점 점수(5점)의 30%										
미공개 (산식 적용결과: 0)	배점 점수(5점)의 0%										
건축허가처리기간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200m² 미만의 단독주택 신축 건(2016년 1~10월 사이 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완료된 건에 한함) 평가내용 건축허가·신고 처리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 정도 점검 평가산식 $\frac{\langle \text{건축허가 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rangle}{\text{법적 처리기간 이내 처리 건수}} \times \text{보정계수} \times \text{배점점수}(10점)$ <p>* 법적 처리기간 내 처리 여부 판단 기준 허가는 7일 이내, 신고는 5일 이내</p> <p>* 실제 허가 신고 처리일 = (신청일부터 처리완료일까지의 총 소요일) - [(신청자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보완일) + (건축심의 놓지 신지 전용 등 기타 절차 소요기간)]</p> <p>* 총 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보정계수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th><th>보정계수</th></tr> </thead> <tbody> <tr> <td>총 허가 건수 기준으로 상위 30%</td><td>1</td></tr> <tr> <td>총 허가 건수 기준으로 중위 40%</td><td>0.9</td></tr> <tr> <td>총 허가 건수 기준으로 하위 30%</td><td>0.8</td></tr> </tbody> </table>	기준	보정계수	총 허가 건수 기준으로 상위 30%	1	총 허가 건수 기준으로 중위 40%	0.9	총 허가 건수 기준으로 하위 30%	0.8		
기준	보정계수										
총 허가 건수 기준으로 상위 30%	1										
총 허가 건수 기준으로 중위 40%	0.9										
총 허가 건수 기준으로 하위 30%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수 부여 기준 산식 적용에 따라 도출된 점수(절대평가) * 다만 법적 기준을 초과한 허가 건이 있을 경우 건당 1점씩 감점 										

자료: 국토교통부(2016),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계획, 별첨자료

특별 부문 수상 지자체 및 우수사례

구분	평가 그룹	지자체	우수 사례
특별부문	광역지자체	충청남도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추진
	인구 50만 명 이상	용인시(경기)	종이도서(출력물) 없는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인구 50만~10만 명	의왕시(경기)	건축협정을 통한 노후건축물 재건축 문제 해결
	인구 10만 명 미만	옹진군(인천)	맞춤형 건축신고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 운영

자료: 국토교통부(2017), “세종시, 성남시, 강동구, 임실군,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선정”, 2월 22일자 보도자료.

건축행정 전문성 부문에서는 담당부서 내 전문자격 보유자 수는 대부분 10% 미만으로 상당히 극소수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의 건축직 공무원 비율은 7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부문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평가그룹 A에 속하는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경상북도·인천광역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 건축심의 관련 지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처리기간 단축, 복합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 건축행정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평가그룹 B에 속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 23곳의 평가 결과는 ▲심의결과에 대한 공개 실적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이행실적 ▲위반건축물 관리실적 ▲전문인력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율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율 ▲건축직 공무원 비율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그룹 C와 D의 평가 결과도 평가그룹 B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별 부문

특별 부문에서는 평가그룹별로 충청남도와 경기 용인시, 경기 의왕시, 인천 옹진군의 사례가 최종 선정되었다.

그중 충청남도의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는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시의 ‘종이도서 없는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정책은 건축심의 시에 심의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현장밀착형 건축행정 사례에 걸맞다는 평을 들었다.

의왕시의 ‘건축협정을 통한 노후건축물 재건축 문제 해결’ 사례는 최초로 건축협정 제도를 시행하여 준공함으로써 선도적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추진의지와 노력도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옹진군의 ‘맞춤형 건축신고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는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을 제외한 건축신고 건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건축신고(증축) 도면의 작성을 지원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창신성 및 개선효과가 우수하다는 평을 들었다.

2016년 평가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이번 건축행정 전실화 평가에 대한 전면 개편은 20년 이상 시행해 온 건실화 평가의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최초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전국의 건축행정 여건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중점정책의 이행 정도나 특정 업무의 성과에 한정한 기존 평가와 달리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쳐 연관되는 건축행정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국토교통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건축행정 개선을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건축행정의 전문성에 대해 접점을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의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건축행정에서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 그룹별로 우수한 지자체에는 장관상을 시상하였으며,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정조치를 요청하면서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개편된 건축행정 현실화 평가지표는 2016년 평가에서 나타난 '제출자료의 충실패 미흡'과 '상대평가 방식의 불합리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완작업을 거친 후 향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표별로 성과추이를 모니터링한다.

이번에 개편된 건축행정 현실화 평가가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건축행정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되고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2016), 2016년 건축행정 현실화 평가계획
- 이여경(2016), 2016년 건축행정 현실화 평가 설명회 발표자료

런던,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김건
웨스트민스터대학교 도시재생
박사과정

런던 시의 크라우드펀딩 도시재생정책

2016년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담(World Government Summit)에서는 런던 시의 크라우드펀딩 프로그램(Mayor's Civic Crowdfunding Program: MCCP)을 올해의 가장 혁신적인 도시정책 중 하나로 공식 선정하였다.

2014년 런던에서 시행된 이 도시재생 프로그램은 유럽에서는 최초로 시정부의 정책에 크라우드펀딩 요소를 공식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기록되면서, 런던 시에서는 매년 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존 공공기관의 사업에서는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얻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개발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서 개발이익이 지역민들에게 환원되지 못한 도시재생 사례들이 많았다. 이러한 정책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런던 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개발 과정에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생각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지자체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런던 시의 많은 유휴공간들이 커뮤니티 공원, 야외 시장, 영화관 등 공공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변화하는 런던의 유휴공간

2016년 기준으로 MCCP를 통해 200만 파운드(약 29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런던 시내의 유휴공간에서 총 57개의 시민 주도형 재생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어 완료되었다. 그리고 런던 시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2017년 사업 공모를 하고 있다.

런던 시의 MCCP 운영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런던 시의 도시재생과(Regeneration Unit)와 크라우드펀드로 지역 개발 경험이 있는 스페이는 하이브(Spacehive)가 함께 런던 시 도시재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민들은 주변 유휴공간의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온라인 플랫폼에 제안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선정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총 예산의 75% 이하 기준으로 런던 시가 후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아이디어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온라인 모금을 통해 충당되는데, 모금액 총액이 예상 소요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들이 실제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조성된 기금은 2016년 기준으로 총 200만 파운드 정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런던 시의 후원금(80만 파운드)보다 시민들의 온라인 모금액(120만 파운드)이 예상금액을 초과 달성하면서 시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실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온라인 모금을 통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런던 크라우드펀딩 도시재생 프로그램 모델의 구조도



프로젝트화되기 시작하면서, 런던 시의 도시재생과에서는 'Future Cities Catapult'과 같은 산학연계 도시연구기관과 함께 이 사업들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내용들을 공유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오프라인 플랫폼' 또한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 지역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역상인·주부·학생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여 선순환의 유휴공간 개선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MCCC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다.

실제로 Peckham Coal Line 프로젝트의 경우 런던 시내에 버려진 철도 부지를 커뮤니티 공원으로 개선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철길에 의해 물리적으로 단절된 지역성을 회복해 보고자 몇몇 주민들이 2015년 MCCC에 응모하여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Peckham Coal Line의 경우 온라인의 플랫폼에서 시작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의 내용이 공유되고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프라인 플랫폼을 해당 자자체(Southwark Council)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Arup)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여 기존에 계획한 커뮤니티 공원의 환경과 시설들이 좀 더 많은 주민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이렇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MCCC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은 시민들이 주변 유휴공간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제공해 주었다.

런던 시는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을 단순히 일회성 계획을 제안하는 단편적인 수단을 넘어 런던 시의 공식적 도시개발계획(London Plan) 안에서도 함께 맞물려 작동하는 전략으로 향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런던 시의 역할도 과거에도시개발을 주도하는 결재자 또는 승인자 역할에서 시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조력자, 진행자의 역할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다.

미국 교통부, ‘사람 중심’으로 교통혼잡 측정 기준 개선

<http://t4america.org/2017/01/12/usdot-rewrites-congestion-rule-in-response-to-overwhelming-criticism/>

<http://t4america.org/2016/04/12/will-pending-federal-transportation-rule-double-down-on-outdated-view-of-congestion/>

<http://usa.streetsblog.org/2017/01/12/transportation-agencies-will-finally-measure-movement-of-people-not-just-cars/>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가 시 교통국이 활용할 새로운 교통혼잡 측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기준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끈 ‘Transportation for America’^{*}는 “교통혼잡을 측정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해 왔다. 정확한 측정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교통 지연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측정 기준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은 자동차와 운전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었다. 이전 기준에서 볼 때 가장 많은 차가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가장 성공적으로 조성된 도로라고 평가하였다. 자동차 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40인승 버스와 운전자 한 명이 타고 있는 SUV 차량을 동일하게 1대로 계산하게 된다.

개선된 기준에서는 차량의 이동 자체시간이 아닌 사람의 이동 자체시간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같은 대중교통 전용 도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아니라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자동차 외에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한 성과 측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주 교통청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보행 편의를 높이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목표도 세워야 한다. 더불어 DOT는 주 교통청이 보행량과 자전거 이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합리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연합체로, 미국 전역에서 선출된 사업가·시민 대표로 구성된다.



기존 교통혼잡 측정 기준의 문제를 지적하는 *Transportation for America*의 홍보 게시물
자료: <http://t4america.org/2017/01/12/usdot-rewrites-congestion-rule-in-response-to-overwhelming-criticism/>

일본 국토교통성,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

http://www.mlit.go.jp/report/press/toshi07_hh_000104.html

일본 국토교통성이 도시 녹지공간의 적극적인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도시녹지법 등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성은 도시공원과 녹지가 경관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자연재해 시 피난처 역할을 하고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도시의 녹색공간을 보전·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녹지 조성과 관리에 있어 민간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 재생·활성화 :

도시공원법,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도시공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도시공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간사업자가 공공 환원형 수익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신설된다. 카페·레스토랑 같은 수익시설의 민간 설치·관리자를 공모로 선정하게 되며, 허가 기한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건폐율도 완화해 줄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는 공원의 확장·정비 등의 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다. 공원 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시설 설치·관리 허가에 대한 기한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공원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된다.

녹지·광장 조성 활성화 : 도시녹지법 개정

기초자치체장의 허가를 통해 민간이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때 민간사업자는 재산세 경감, 설치·정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녹지 관리를 위한 주체의 지정권자를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고, 지정 대상에 마을만들기 회사 등을 추가하여 민간주체의 녹지 설치와 관리를 위한 가능성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카페테라스와 정비된 공원 공간

자료:国土交通省(2017)
“都市緑地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を閣議決定”,
2월 10일자 보도자료,

도시농지 보전·활용 :

생산녹지법, 도시계획법, 건축기본법 개정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생산녹지지구'의 지정 면적요건(500m²)을 지자체 조례로 최대 300m²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여, 도시농지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 생산녹지지구에 적용되는 세제특례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녹지지구 내에서 농산물 직판장과 레스토랑 운영도 가능해지며, 새로운 용도지역 유형으로 '전원주거지역'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규제와 농지 개발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버 택시의 이동 데이터 제공하는 '우버 무브먼트' 공개

<https://movement.uber.com/cities>

<https://www.wired.com/2017/01/uber-movement-traffic-data-tool/>

<http://citiscope.org/story/2017/uber-shares-mobility-data-urban-planners>

<https://techcrunch.com/2017/01/08/uber-debuts-movement-a-new-website-offering-access-to-its-traffic-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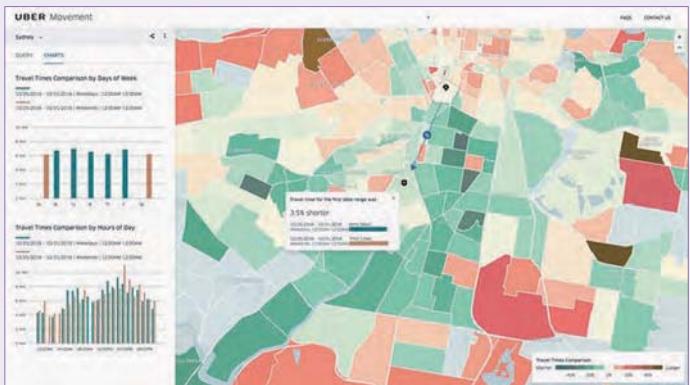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차량예약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 기업 우버(Uber)가 우버 택시의 이동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우버 무브먼트(Uber Movement)'를 개시하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우버 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도시 약 20억 건의 이동 데이터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 무브먼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우선 마닐라, 시드니, 워싱턴 D.C. 등 세 도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곧 10여 개의 다른 도시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신청한 기관에만 서비스를 공개하고 있지만, 곧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버 측은 도시계획가와 연구자, 도시 및 교통 관련 정책 입안자 등이 교통 흐름과 이동 패턴에 대해 오랜 시간 축적되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우버 무브먼트를 통해 얻음으로써, 도시와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곧 일반 대중도 우버 무브먼트를 통해 이동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원하는 두 지점을 선택하여 특정 일시의 그 구간 이동시간을 찾아볼 수 있다. 같은 구간의 시간대별·날짜별 이동시간을 모아 보거나, 주간·월간 이동시간을 분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휴일이나 행사, 러시아워, 도로통제 등이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찾아볼 수 있다. 우버 무브먼트를 해당 정보를 차트와 같은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하며, 원 데이터를 다운 받을 수도 있다.

우버 사의 프로젝트 매니저 조던 길버슨(Jordan Gilbertson)은 "도시의 교통 환경과 인프라가 개선될 때 우버 또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 만족도와 사용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우버 무브먼트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개선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우버 무브먼트 활용 화면

자료: <https://www.wired.com/2017/01/uber-movement-traffic-data-tool/>

버펄로, 부설주차장 면적 기준 폐지

<http://www.buffalogreencode.com/>
<http://buffalonews.com/2016/12/27/city-code-21st-century/>
<http://www.citylab.com/housing/2017/01/buffalo-is-first-to-remove-minimum-parking-requirements-citywide/512177/>
<https://www.strongtowns.org/journal/2017/1/17/new-zoning-code-in-buffalo-removes-parking-requirements>



버펄로 도심의 주차장 분포

자료: <http://www.citylab.com/housing/2017/01/buffalo-is-first-to-remove-minimum-parking-requirements-citywide/512177/>

뉴욕 버펄로(Buffalo) 시가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면적 기준(Parking Minimums)을 폐지한다. 버펄로 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조닝코드(zoning code) '버펄로 그린 코드(Buffalo Green Code)'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다른 도시들도 부설주차장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곳들이 있으나 이는 도시 내 특정 구역에 한한 것으로, 도시 전역에서 기준을 폐지한 사례는 버펄로가 최초이다.

다른 미국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버펄로 또한 자동차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한 조닝코드를 따르고 있었다. 이는 자동차 수가 급증하던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자리 잡은, 통상적인 조닝코드였다. 특히 1950년대에는 버펄로의 인구가 급감하게 되는데, 당시 교외로부터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설주차장 면적 기준을 조닝코드에 포함하여 시행하게 된다.

새로운 조닝코드는 '어떻게 자동차로 쉽게 건물에 접근할 수 있을지' 보다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보행친화성(Walkability)의 향상, 대중교통 등 다른 접근 수단을 늘리는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캠퍼스의 대니얼 헤스(Daniel B. Hess) 교수에 따르면 버펄로 도심 토지 면적의 약 28%가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주차 공간의 평균 이용률은 63%에 그치고 있다.

시는 면적 기준 폐지를 통해 이러한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설주차장 면적 기준이 폐지되는 대신 5,000제곱피트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체 교통수단 활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필요한 주차 규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자동차 외에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도 고려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규모가 같은 건물이라도 지하철역 주변에 위치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의 주차장 확보 면적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버펄로 시의 주차장

자료: <http://buffalonews.com/2016/12/27/city-code-21st-century/>

도시공간의 효율적·창의적 활용을 위한 '입체도로' 도입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2017.2.15.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7년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체도로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국·공유지로서 공공의 영역으로 여겼던 도로 공간의 민간 개발이 허용된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더불어 도로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이 신설되며,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 안전 관련 지침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 |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인근 사유지 연계 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하여 보행중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체도로를 통한 기반시설 확보 규제 완화, 입체도로 활용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 협소한 부지로 주차 공간의 확보와 보행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입체도로제도를 도입해 주차장 통합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발할 때에는 4m 이상(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도 가로주택정비구역에 포함하고,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건축 응·복합 사례



도로-건물 일체화



건물옥상 간이휴게소

자료: 국토교통부(2017), "도로의 변신! 입체도로의 시대
도래...도로 상·하부 활용", 2월 16일자 보도자료,

응·복합을 통한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조성, 건축 간 연결 활성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창의적인 건축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입체 건축 경진대회 등도 열어 창의적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축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 | 지하도로 상부공간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용도가 제한되어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용도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 지하, 상공 공간을 활용한 환승시설 구축 | 도로 공간의 환승 거점을 활용하여 환승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시설 등을 허용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속 도로 나들목과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체계도 구축한다.

보행자·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2017.2.14.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2017.2.13.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도로·철도·항공·해양 부문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특히 도로 부문에 있어 2021년까지 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 확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점차 하향하며, 특히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 및 보도 설치 확대, 보행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보행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0)'을 확정·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더불어 행복한 교통 복지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세부 계획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버스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등의 기준 적합 설치율 82%로 향상
교통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지블록 등 유도·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기준 적합 설치율 73%로 향상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까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 42% 달성 2021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100% 달성 교통시설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 실시
연구개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농어촌 지역,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완료 및 상용화 시·군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 연계 방안 연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2017.1.20.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문화영향평가 참여자 간담회 및 문화컨설팅’을 지난 1월 열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2013)상의 법정평가로,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또는 계획에 대해 문화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벌였으며, 간담회 겸 컨설팅을 통해 해당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행사에는 직접 문화영향평기를 수행한 개별 평가기관과 도시재생사업 담당 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문화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데 문화영향평가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화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경북 안동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제주시 총 5개 지역에 대한 문화영향평가가 2016년 이루어짐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2017.2.2.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음압격리병실의 구비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300개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300개 병상당 1개, 추가 100개 병상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 300개 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300개 병상당 1개 구비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기존에 입원실 면적 기준만 명시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입원실당 최대 병상 개수, 병상 간 거리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병·의원 입원실당 병상은 최대 4개, 요양병원은 최대 6개까지 허용된다.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까지 1m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다. 입원실 면적 기준도 1인실은 6.3m²에서 10m²,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m²에서 6.3m²로 넓어진다.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을 기존 10m²에서 15m²로 더욱 강화하였다. 병상 간 거리는 신·증축할 경우 2m,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까지 1.5m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한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 씻기 시설을 구비하고,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확보하되 그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로 하도록 하였다.

도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017.1.9.

국토교통부는 도시 시설물의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재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하였으며,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SOC 성능 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제명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으로 변경된다.

‘3종 시설물’ 신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가 시설물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교통부(「시설물안전법」)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대형·중형 규모의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재난법」에서는 소형 시설물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구분에 ‘3종 시설물’을 신설하고,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이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하게 된다. 또한 대형 중형 시설물뿐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성능평가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유지·관리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사용성 등을 추가하여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성수·문래·종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17.2.6.

서울 성수동, 문래동, 종로 등 3곳이 국내 1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다. 50인 이상의 소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을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장이 최종 지정(3년 지정)하게 된다.

성수동은 420여 개 업체가 집적된 50년 전통의 수제화 디자인·제조·유통 메카다. 종로는 550개의 주얼리 업체가 디자인과 제조 및 도 소매 유통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문래동은 국내 최고 속련도의 기술이 집적된 기계금속 밸리로 1,350여 개 업체가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해당 세 지역을 3년간 집중 지원해 활력 넘치고 혁신적인 도시 제조업의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들 3개 지역에는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총 83억 원이 투입돼 소상공인 공동 인프라가 구축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제공되는데, 공동 제품 전시 판매장, 3D프린터 등 첨단장비를 갖춘 시제품 제작소, 온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공간 등이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된다. ‘소공인특화자금’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판로 개척 및 R&D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받을 수 있다. 3개 지역에 있는 총 2,320개* 소공인 업체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은 이번 집적지구 지정을 계기로 기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보다 넓은 개념의 광역형 센터를 공동 운영해 도시형 제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현장전문가 양성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 문래 1,350개, 종로 550개, 성수 420개



문래동 철공소 거리

©서울시

녹색건축·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부산시 도시재생과
2017.1.16.

광주시
2017.1.17.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7.2.1.

부산시, 도시재생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포함 추진

부산시는 도시재생 사업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복지·보건·고용 등 종합적인 생활서비스 공간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세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또 60만 호 단독주택지 통합관리 방안에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으로 LED 보급 및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추진하고, 서부산권 도시재생 특화 마을 조성 시 마을의 폐·공ガ를 활용한 태양광 온실 및 태양광 주차장 조성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역 광장 일원 청조지식플랫폼 건축공사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을 위한 도시재생과 클린에너지 연계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시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에는 클린에너지 비율을 10%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탄소은행제' 대상 확대 운영

광주시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은행제를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단지로 확대해 시행한다. 탄소은행제는 참여 세대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현재 사용량*과 기준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적립한 탄소포인트에 따라 현금·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탄소은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탄소은행 가입 대상을 아파트 단지로 확대해 관내 150가구 이상 아파트 712곳에 대해 150가구 이상, 500가구 이상 등 2개 부문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량, 탄소은행 참여도, LED등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해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은행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 다이어트'에 융자 지원

서울시가 단열창호, 단열재, 창유리필름, LED조명 등 주택·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융자지원 금액은 총 150억 원으로 사업 금액의 100% 한도에서 주택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건물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1.45%의 고정금리로 최대 8년까지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융자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문절차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정보 제공, 정책 개발 목적으로 공간정보 지도 제작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2017.2.3.

대구시 자연재난과
2017.2.8.

인천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후지도' 제작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별 온실가스 실태조사와 기후영향인자 분석 등을 통해 건강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후지도' 제작을 통한 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도시는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적 환경을 창조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도시 형태로, 최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후지도 제작을 통한 건강도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지역별 실태조사 ▲에너지 사용량 조사 ▲폭염 및 여름일수 등 기상인자를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지 대표지점 10곳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청량산·계양산 내 쉼터 각 2곳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조사·분석하고, 여기에 온도 및 폭염일수 등 기후관련 요소를 통합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기후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대구시, 침수예상지역 정보 담은 '재해정보지도' 제작

대구시가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대피 경로, 안전대피소, 응급의료기관, 공공기관, 재난상황 전파체계 등이 수록된 재해정보지도를 옮해 말까지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재해정보지도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토대로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게 된다. 침수흔적도는 과거 침수 발생 내역을 전수 조사해 침수 시기, 침수 범위 등을 지형도와 지적도에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침수예상도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 70mm 이상의 폭우가 발생할 경우 내수침수 시나리오별 수치 계산을 분석하는 과학적 기법을 적용해 침수예상 지역 등을 예측해 작성한 지도이다.

시는 이러한 기반자료와 재해정보지도 정보를 자연재해 사전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광주시

2017.1.2.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2017.1.5.

광주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 시행

광주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예방하고 동식물의 위해를 방지하고 자시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2017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제2종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 계획 관리지역 ▲제3종 주거지역 ▲제4종 상업·공업지역 총 4종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1월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정된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다만 기준에 설치한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 안에 개선하도록 하였다. 시는 빛 방사량을 줄이기 위해 측면 배광이 넓은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거나 후사광을 차단하는 차광장치 설치, 광량이 낮은 광원으로 교체할 것 등을 권장하고 있다.

적용대상 조명기구

구분	조명기구 종류
공간조명	기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	「옥외광고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m ²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조명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 심의 본격화

앞으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은 야경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빛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도지사 직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관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 시설은 세 가지로 ▲공공업무시설(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박물관), 운동시설(체육관),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용지와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수변조명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 등의 경관조명이다.

경관위원회는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도 공무원 5명, 경기도의원 2명, 도시계획 및 조명·조경 전문가 26명 등 모두 33명으로 구성된다. 조례에 따르면 공사 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세계도시 베이징을 이끄는 싱크탱크, 베이징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서울보다 27.8배나 넓으며 인구도 2배나 되는 수도 베이징^{*}의 공간 계획 및 정책 연구를 책임지는 베이징 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北京市城市规划设计研究院, 이하 베이징시규획원)^{**}은 1986년에 설립되었다. 베이징시 규획위원회 소속으로,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최고 수준의 계획 및 설계 기관으로 평가받는 베이징시규획원은 100여 개나 되는 계획설계 및 연구 성과로 국가·건설부·베이징시가 수여하는 과학기술진보상과 우수계획설계상을 받기도 했다.



총체규획소 소속
연구자들



공정종합소 소속
연구자들

“베이징시성시규획
설계연구원은
서울보다 27.8배나
넓으며 인구도 2배나
되는 수도 베이징의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공간 계획
및 정책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베이징 도시계획과 관리의 핵심

베이징시규획원은 도시건설 관련 거시정책과 각 항목에 대해 계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업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전체 시의 도시총체계획, 분구계획, 통제성 상세계획과 도시교통, 시 기초시설 등 시스템 계획에 대한 조직 및 편제, 지하 관로 네트워크 계획 종합업무
- 전체 시의 사회경제 발전전략 및 도시건설 중요 정책 연구, 정부 유관 부문과 각 구(区) 및 현(县) 정부 등을 위한 계획연구와 조언 등
- 계획방안의 기술 논증과 종합, 계획방안 기술심사 참여, 계획관리를 위한 기술서비스 제공
- 베이징시 도시계획기술 규정과 관련 계획 정책지표 작성

전문성과 네트워킹의 조직

베이징시규획원은 스웨이랑(施卫良) 원장을 주축으로, 4명의 부원장과 1명의 총공정사(总工程师)가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총체계획소(总体规划所), 상세계획소(详细规划所), 도시설계소(城市设计所), 시정계획소(市政规划所), 교통계획소(交通规划所), 공정종합소(工程综合所), 계획연구실(规划研究室)이 있다. 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부서로는 계획정보중심(规划信息中心), 수석엔지니어링 사무실(总工办公室), 종합사무실(综合办公室)이 있으며, 당과의 업무 공조를 위해 당위원회 사무실을 두고 있다. 더불어 인사처, 행정처, 편집부, 노동조합이 있다.

현재 베이징시규획원의 전체 인원은 270명으로, 전문기술인력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 고급 기술인력이 80여 명, 중급 기술인력이 80여 명이며 정부에 특별한 공헌을 하는 전문가가 4명이 있고, 18인이 국가수당을 받고 있다.

창립 이래로 베이징시규획원은 광범위하게 대외 학술교류와 기술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서울연구원 등의 조직과도 장기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의 계획설계사무소와 협작하여 다양한 계획설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 2015년 기준으로 베이징의 행정구역 면적은 1만 6,808km²이고, 상주인구(6개월 이상 거주 포함)는 2,170만 5,000명이다.

** 중국에서는 규획(规划)과 계획(计划)을 다르게 쓰고 있다. 그 차이점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규획의 범위가 계획보다 넓다. 규획이 거시적 관점과 전면적인 전망에서 전국 또는 일부 지구나 사업 혹은 비교적 큰 업무의 원칙을 다룬다면, 계획은 업무·생산·경영 및 학습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즉 계획의 규모가 더 작고 관련되는 내용도 규획에 비해 좁다. 둘째, 규획의 시간 범위가 계획보다 훨씬 길다. 규획의 시간 범위는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까지 가능하나, 계획의 시간 범위는 짧고 그 시간 내에 특정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셋째, 규획의 내용은 개괄적인 반면 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규획이 목표·규모·전망·이상과 호소력을 담는다면, 계획은 업무·지표·시간을 정한다(출처: <http://www.wtabcd.cn/article/sort01/sort016/info-652.html>). 이 글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상 바람직하나, 우리 표현에 ‘규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베이징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이라는 고유 명사에서만 ‘규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상 핵심구 산업연동발전 안내도

자료: <http://www.bjghy.com.cn/ghy2Develop.aspx?menu=2&sideitem=21>

하 베이징 순이공항 구역 총체규획도

자료: <http://www.bjghy.com.cn/ghy2Develop.aspx?menu=2&sideitem=21&Tid=3>

주요 연구 성과

수도기능 핵심구 발전전략계획 연구(2010~2020)

베이징의 수도기능 핵심구는 중국의 정치·문화 중심 기능을 담는 공간으로, 2010년 7월 국무원이 정식으로 핵심구의 행정구획 조정을 비준하면서 동청구(东城区)와 충원구(崇文区)를 합병하여 새로운 동청구로, 원래의 시청구(西青区)와 쉬안우구(宣武区)를 합병하여 새로운 시청구로 통합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베이징시규획원은 베이징시 규획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핵심구의 목표, 발전전략 및 추진방식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베이징시 12·5 시기 역사문화명성 보호건설계획(北京市“十二五”时期历史文化名城保护建设规划)'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세계도시 계획 및 건설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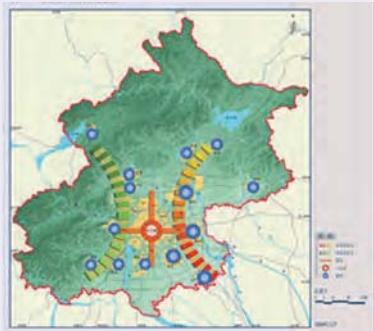
중국이 30년간 개혁개방을 거치는 동안 국가 역량이 크게 높아지면서, 베이징은 중국 수도로서 국제적 차원의 업무 및 경쟁에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고자 '세계도시' 건설을 계획하였다. 먼저 '베이징 도시총체계획(2004~2020)'을 통해 베이징의 장기 발전목표가 세계도시임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세계도시 계획 및 건설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도시총체계획 내에서 세계도시 목표 및 3단계 전략의 배경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도시 개념의 연원과 발전을 회고하고, 세계도시의 이해와 정의에 대한 세계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세계도시의 평가지표 체계를 만들고 베이징의 격차와 우세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베이징 세계도시 건설 전략을 내놓았다.

베이징 중심도시 중심지구 지하공간 개발이용계획 연구

베이징시는 합리적으로 도시 지하공간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 유효한 도시공간 개척, 토지자원 절약, 인민환경 개선, 역사문화명성보호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베이징시규획원은 도시총체계획에 근거하여 중심지구계획, 지하교통체계, 지하기반시설체계, 지하공간의 방공방재, 지하공간의 생태환경보호, 지하공간의 역사문화명성보호 등을 연구하였다.

베이징 순이공항 총체계획 연구

톈주·호우사위(天竺·后沙峪) 지구는 중국 최대 항공운수 네트워크 중 가장 중요한 비행장인 수도공항에 인접해 있다. 경제 일체화 발전 전략에 따라 공항이 외부지구와 분리되고 교통수단의 단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서 다기능·개방식, 외부지구와 밀접한 발전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공항지구는 중요한 경제성장점이 되었다. 수도공항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톈주·호우사위 지구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여 건설투자의 중요 지점이 되면서 큰 규모로 공업구·별장구·주택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베이징시규획원은 현대 국제공항의 다양화 발전 방향에 적응하고 개별 건설구, 건설항목 간 협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베이징 순이공항 총체계획 연구'를 추진하였다. 계획범위는 톈주와 호우사위 2개의 진(镇) 행정구역으로 86.5km²이다. 계획기간은 2015년, 총 목표인구는 15만 명, 건설용지 총면적은 20km²이다.



베이징 도시총체규획(2004~2020)

공간구조 전략

자료: <http://www.bjghy.com.cn/ghy2Develop.aspx?menu=2&sideitem=21&Tid=1>

“현대 도시계획의
보편적인 흐름은
도시계획 수립과 실천
영역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베이징시규획원도 같은
방향선상으로 시민과
학생을 찾아가는
도시계획을 중요시하고
있다.”

생태베이징 인구 수용력 분석 연구

이 연구는 베이징시규획원과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중심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토지, 인구밀도, 녹색공간, 용수 및 수생태 압력, 에너지, 교통방식, 대기오염 등 단일 생태요소의 인구 수용력 제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생태 족적 및 전통성장을 방식을 이용하여 대비분석을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종합비교법·델파이 법과 MALTEC 계획법 등 3종의 방법을 채택하여 상호 간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종합판단과 분석을 진행하여 생태베이징 인구수용력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베이징시 규획위원회 과학기술진보 2등상을 받았으며, 연구 성과는 ‘베이징 도시공간발전전략 연구’와 ‘베이징 도시총체계획(2004~2020)’에 적용되었다.

베이징 도시공간 발전전략연구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중국성시규획연구원, 베이징시규획원, 칭화대학 등 3개 기관이 하나의 연구 조직을 형성하여 진행한 연구로, 베이징 도시총체계획의 선행 연구이다. 베이징의 도시공간 배치는 5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이미 하나의 기본적인 구조와 발전 방향을 형성하였다. 10여 년을 거치면서 경제와 사회, 객관적인 건설 조건의 영향을 받아 베이징은 기본적으로 단일 중심의 집적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중심도시 발전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자 이러한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계획을 단일 중심에서 다중 중심 구조로 변화시키고, 축상·방사·외연 발전 모식을 이끌어 냈다. 또한 시구(市區) 범위를 조정하고 배치 구조를 완성하였으며, 구역 간 협력 발전을 촉진하도록 베이징의 미래도시 공간 배치 구상을 제출하였다.

역사도시와 참여도시를 향하여

베이징시규획원은 ‘세계도시’를 표방하면서 이에 걸맞은 현대적 도시건설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가 갖는 역사성을 크게 중시하고 있다. 그 핵심은 역사자원이 풍부한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다. 최근에는 베이징의 전통 주거지와 그 골목길인 후통도 중요한 도시역사자원으로 인식하여 교통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가치를 현대성뿐만 아니라 역사성 및 일상성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베이징시규획원은 시민과 학생을 찾아가는 도시계획을 중요시하고 있다. 현대 도시계획의 보편적인 흐름은 도시계획 수립과 실천 영역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베이징시규획원도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선상에 있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 구체성에서 참신하다는 느낌이 든다.

인터뷰에 응한 스샤오동(石晓冬) 박사에 따르면, 시민을 위한 체험형 도시계획이라고 할 정도의 실천 프로그램들이 있다. 자전거 도시여행, 도시계획가와 함께 하는 도시재생 답사, 초·중·고생을 위한 도시계획 강좌 진행,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시민참여 확대와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국제적 성격을 띠는 베이징국제설계주간 행사의 주기적인 개최 등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보다 내실을 갖추게 된다면 시민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일상에서 도시계획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자기의 삶과 어떻게 연결 지을지에 대해 깊이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TERVIEW



스샤오동(石晓冬) 박사
(베이징시성시구획설계연구원
부총계획사, 연구실 주임)

◎ 베이징 역사도시 보존, 건축설계 관련 최근의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연구원은 2016년 베이징 도시총체계획 수정 작업에 참여하여 일련의 역사 문화명성보호 연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관련 위원회나 각 구 (區)와 협력하여 다양한 보호계획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도심 보호에 기 초해 베이징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와 외부 성시(省市)에 대해 더 큰 각도에서 문화유산보호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기관과 역사문화가로구역보호의 기초 위에서, 공업유산보호·전통촌 릭보호·문화경관형성 등의 업무를 중시하였습니다. 중요 연구항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 ‘동쪽 34조에서 8조까지의 역사문화가로구역 보호와 발전계획 실시계획’
(东四三条至八条历史文化街区保护与发展规划实施规划)’

원래 있던 보호계획과 계획실시평가의 기초 위에서, 가로구역이 갖는 현황과 특징에 입각하여 그 핵심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로구역이 담당할 역할과 핵심 임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추진을 목표로, 현존 문제에 대해 계획방안과 제도화를 건의하고, 가로구역 전체 풍모보호·인구분산·주민 생활개선·환경품질향상과 문화활력 부흥을 실현하였습니다.

- ‘베이징 후통 교통계획 연구(北京胡同交通规划研究)’

베이징 구도심인 후통의 교통계획 연구를 진행하여 최적의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구도심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도시 도로체계에서 후통이 갖는 위치 연구, 후통 정차구역을 시작으로 하는 전체 환경 개선, 후통 교통조직 연구, 후통 관리 및 계획 건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베이징 동남부 지구 역사문화자원 보수
(北京东南部地区历史文化资源梳理)’

베이징 서부와 북부 지구에서 동일한 과제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 지리의 발전과 변화’라는 이론하에 7곳의 주요 역사문화 흐름을 다듬고, 4곳의 핵심 역사문화 가치를 총결하였습니다. 또 시 구역 역사문화자원 수치를 종합하고, 북부·서부·동남부 3곳의 역사문화 특색을 비교해 이에 기초한 베이징지구 역사문화연구의 규범을 형성하였습니다.

◎ 도시재생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지역공동체와 베이징 시정부의 협력 및 참여에 대한 베이징시구획원의 원칙과 전략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 연구원은 시민 참여를 매우 중시합니다. 계획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연구원의 전략은 계획정보 공개, 계획교육 및 홍보, 협력적 계획 등 세 가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재 수리, 특색 발굴, 기초시설 개조, 환경 개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면서 공동으로 점진적인 보호와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 계획정보 공개

2016년 베이징국제설계주간에 우리 연구원은 ‘도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3.0’ 전람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전람회에서 우리는 ▲시적인 자전거 여행 2.0 – 구도심편 ▲도시 공공공간의 재생설계 연구 - 베이징 구도심 사례 ▲ 우리의 도시 ▲도시계획가와 함께하는 베이징 후통 여행 등 4개 주제를 제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교통·공공공간·도시계몽교육·빅데이터·문화 팀방 등을 포함합니다. 3년의 탐색을 거치며 베이징국제설계주간은 계획자가 도시계획을 실제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협력 플랫폼이 되었으며, 시민들은 베이징국제설계주간을 이용하여 도시계획을 이해하고 계획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획가는 베이징국제설계주간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도시계획 이념에 대한 탐색을 실제 실천하게 됩니다.

● 계획교육 및 홍보

우리 연구원은 적극적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관련 지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 연구원 계획가들이 베이징시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에는 ‘베이징역사문화와 보호’, ‘베이징 생명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2016년 베이징국제설계주간에서 ‘우리의 도시’ 계획과학보급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전시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협력적 계획

협력적 계획은 역사문화명성보호 형성의 개방, 다양한 주체가 계획 작업에 참여하는 시스템에 기초해 정부 부문과 동사무소·주민위원회 및 사구(社区) 주민, 사회인사의 공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 특색 발굴, 기초시설 개조, 환경 개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면서 공동으로 점진적인 보호와 발전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 베이징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베이징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wtabcd.cn/article/sort01/sort016/info-652.html>.

건축과 도시공간

—

Vol. 25

Spring 2017

장소 탐방

Place Review

3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세워진 땅과 형태, 프로그램과 재료 등 건축을 이루는 모든 것을 통해 자유로움과 개방, 다양한 상호작용, 교육과 창조 같은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계층 없이 열려 있는 공간을 돌아다니며 방문객들은 문화를 누리고 또 그 자체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한다.

농어촌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지어진 홍성 꿈드림 지역아동센터는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이 원하는 집의 모습을 건축에 담아냈다. 건축가의 생각과 사용자의 경험이 더해져,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건축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에코에듀센터 전경



충성 꿈 드림 지역아동센터 전경



자유로운 문화
생산지
- 광명업사이클
아트센터
112

작은 집들이 모인
아이들 마을
- 홍성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128

자유로운 문화 생산지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 업사이클 아트 전시,
입주 작가 레지던시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가득 찬 광명업사이클아
트센터는 오늘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자유로움의 종착점이란 있
을 수 없지만, 사회 공동의 의지를 통해 자유의 순간들은 만들어질 수 있
다고 믿는다.

작은 집들이 모인 아이들 마을 - 홍성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인 만큼 미술치료 전문가를 섭외하여 함께 진행
하였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이유는 워크숍이 단순히 아이들에게서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랐
기 때문이다.

자유로운문화생산지

광명업사이클 아트센터

Laurent Pereira

최성희

최-페레이라 건축 공동대표

개요

위치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
건축면적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 1,495m ²
	에코에듀센터 – 480m ²
구조설계 자문	에스트건설
설계	Laurent Pereira, 최성희(최-페레이라 건축)
협력설계	이즈모어앤씨건축사사무소, 유담건축사사무소
건축주	광명시청

* 이 글은 영문 원고의 번역본으로, 저자의 집필 의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문과 원문을 병기하였다.



에코에듀센터 전경

반투명한 플라스틱 외피
때문에 에코에듀센터 안에서
벽을 보면 바깥 풍경이
색색으로 변져 보인다.
밖에서 바라볼 때 낮에는
마치 투명한 거울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분홍색과
노란색을 띤 라이트박스처럼
그 모습이 달라 보인다.



공장과 비슷한 형태로 설계한
에코에듀센터





자원회수시설 홍보동을 리모델링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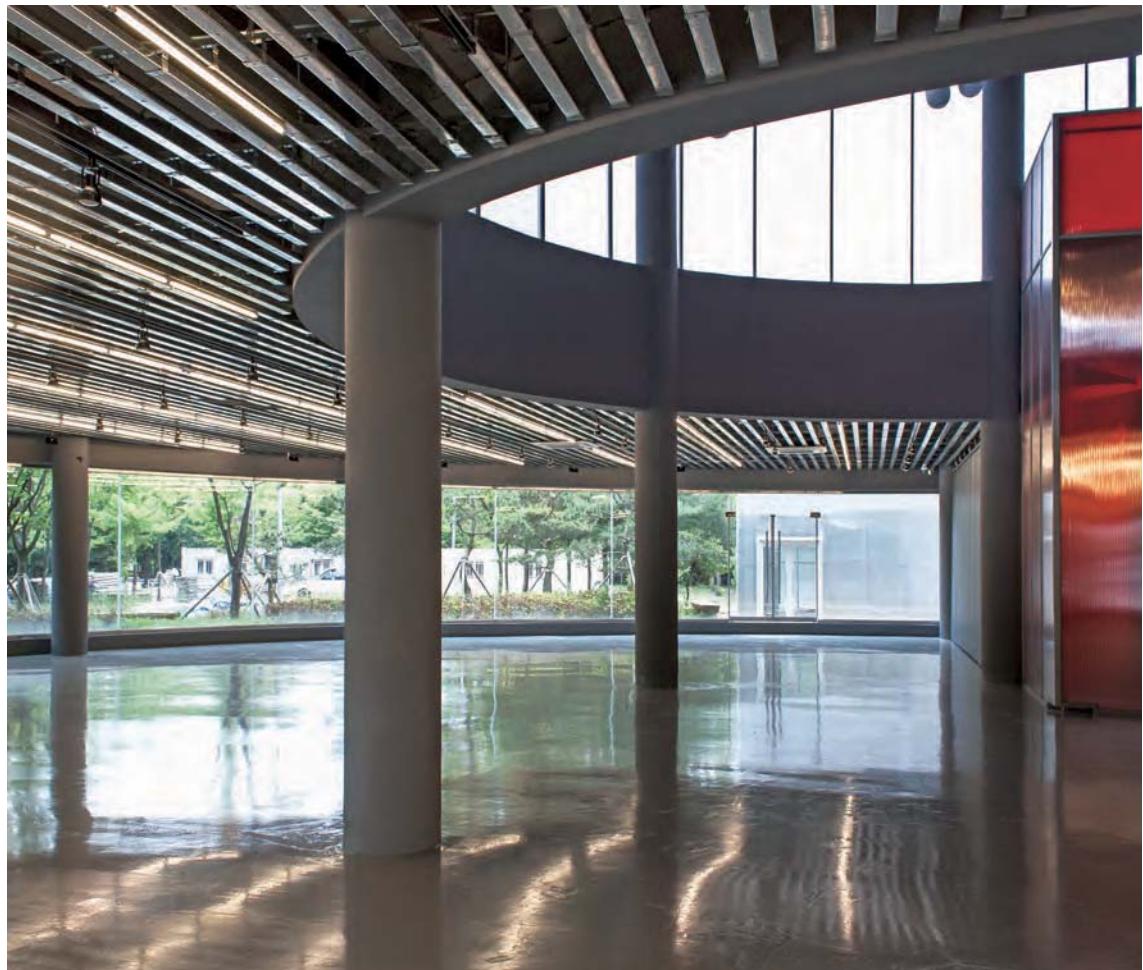


©Thierry Sauvage



©Thierry Sauv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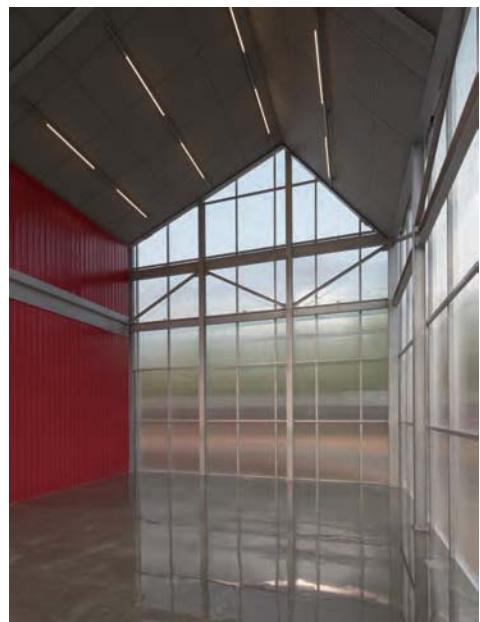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전시 홀



개방성,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강조된 공간



©Thierry Sauvage



©Thierry Sauvage



©Thierry Sauv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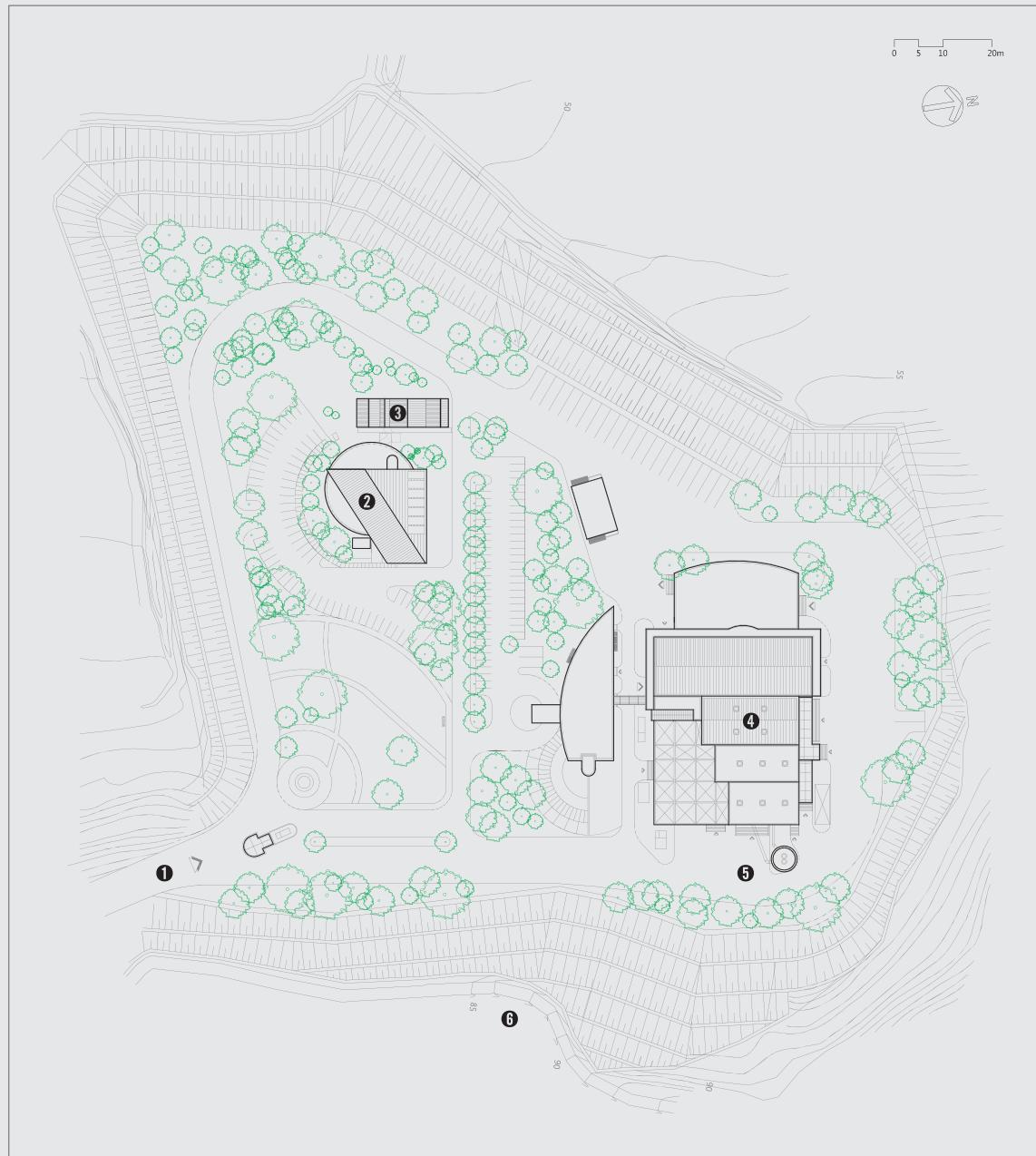
상 중 하
에코에듀센터 계단
바깥 풍경이 비쳐 보이는 에코에듀센터 내부
에코에듀센터 교육실

우리는 ‘개인에게 풍부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는 건축’으로
이 시대에 답하고자 했다. 그것은 곧 획일화·표준화에 대한 저항이자 예술과 오랜 건축 실험의
과정을 연결하는 일이었다. 대량생산과 효율성의 가치만이 강조되고 상업주의가
우리 문화에 만연한 가운데 개인의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건축으로 가능하게 하고 싶었다.



©Thierry Sauvage

마치 거울처럼 보이는
에코에듀센터의 외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배치도

- 1 대지 진입로
- 2 업사이클아트센터
- 3 에코에듀센터
- 4 발전소
- 5 굴뚝
- 6 광산 진입로



©Thierry Sauvage



상 자원회수시설 홍보동을 리모델링한
하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하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전시 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여 지역난방용 에너지를 생산하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대지에 지어졌다. 부지 인근에는 폐광을 관광지화한 광명동굴도 자리하고 있는데, 지역의 버리진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광명동굴 외에 또 다른 공공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기획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통과 협력으로 짓다

공공 프로젝트였지만 여타 비슷한 프로젝트가 거치는 관료적 절차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건축가와 전시관 운영자인 큐레이터, 협력적이었던 지자체장이 긴밀하게 소통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쓰이지 않는 자원회수시설의 홍보동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고, 건축허가부지 안에 교육시설 ‘에코에듀센터’를 신축하였다. 외부 다리를 새로 만들었고 승강기도 설치하여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동 통로들을 통해 넓은 전시 홀과 레스토랑, 입주 작가 레지던시, 강당과 교육실, 목공 작업실, 창고, 그리고 누구나 필요할 때 활동을 위해 별려 사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적지 않은 작업량이었지만 기획에 참여한 주체들 간에 신속하고 집중력 있는 협의 과정 덕분에 단기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트를 완성될 수 있었다. 실제로 기획부터 개관까지 약 1년의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The Gwangmyeong Upcycle art Center is situated in the wide site of a trash burning power plant. It is born out of the new interest for a sustainable society and the local need for new public spaces, alongside with the touristic valorisation of a disused gold and silver mine in the adjacent moun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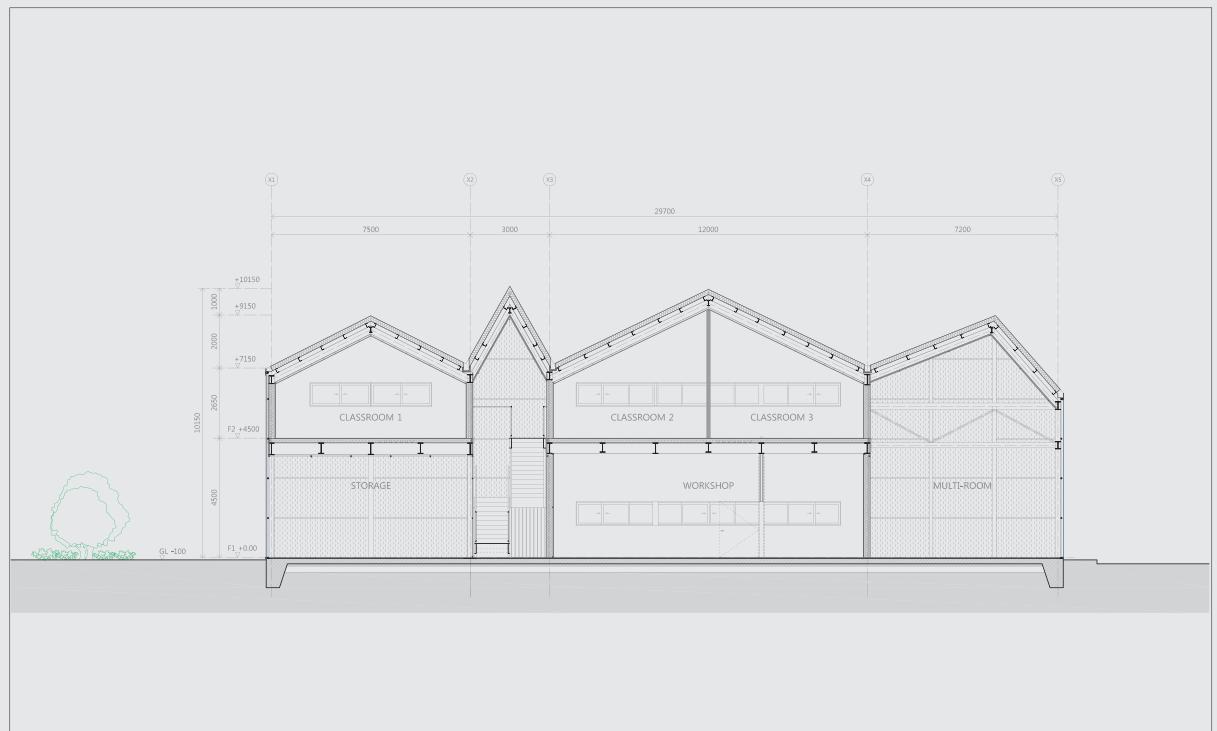
Although a public program on a public land, the center was conceived through bypassing the bureaucratic procedure that usually goes into such project. The architects, curator and sometimes a supportive mayor, were able to design the program, that included the renovation of a disused visitor center into an exhibition center, the carving out of a permit area for a new education building and plan for a new external bridge and elevator that made both premises accessible for the disabled. It combines a large exhibition hall, a restaurant, residency ateliers, lecture halls and rooms, a carpentry workshop, storage and that extra room that would be freely used by whoever has activities there. A fast, sometimes combative ping-pong between the parties allowed for a space and its program to be created in a short time (a year between programing and opening) and cheaply.

©Thierry Sauvage



에코에듀센터 전경

© 최재현-페리아리 건축



에코에듀센터 단면도

'사회적 조형물(social sculpture)'로서 건축

10년 전 우리는 건축이란 곧 ‘지각되는 것’ 또는 ‘지각되는 것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건축 설계를 시작하였다.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현상(現象)에 의미가 더해졌을 때 건축이 된다는 생각은 건축을 시작하는 바탕으로, 매우 개방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건축에서의 기술적 구축성과 기호(taste), 정치성이라는 특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개인의 경험’이다. 개인이 하나의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 관계가 곧 건축적 현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건축은 곧 ‘조형(造形)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건축은 그 형태로써 건축가가 주장하는 바를 드러낸다. 건축가의 디자인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형태를 통한 문화적 성명(statement)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2005년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에게 풍부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는 건축’으로 이 시대에 답하고자 했다. 그것은 곧 획일화·표준화에 대한 저항이자 예술과 오랜 실험의 과정으로서의 건축역사를 연결하는 일이었다.

©초-프라이버리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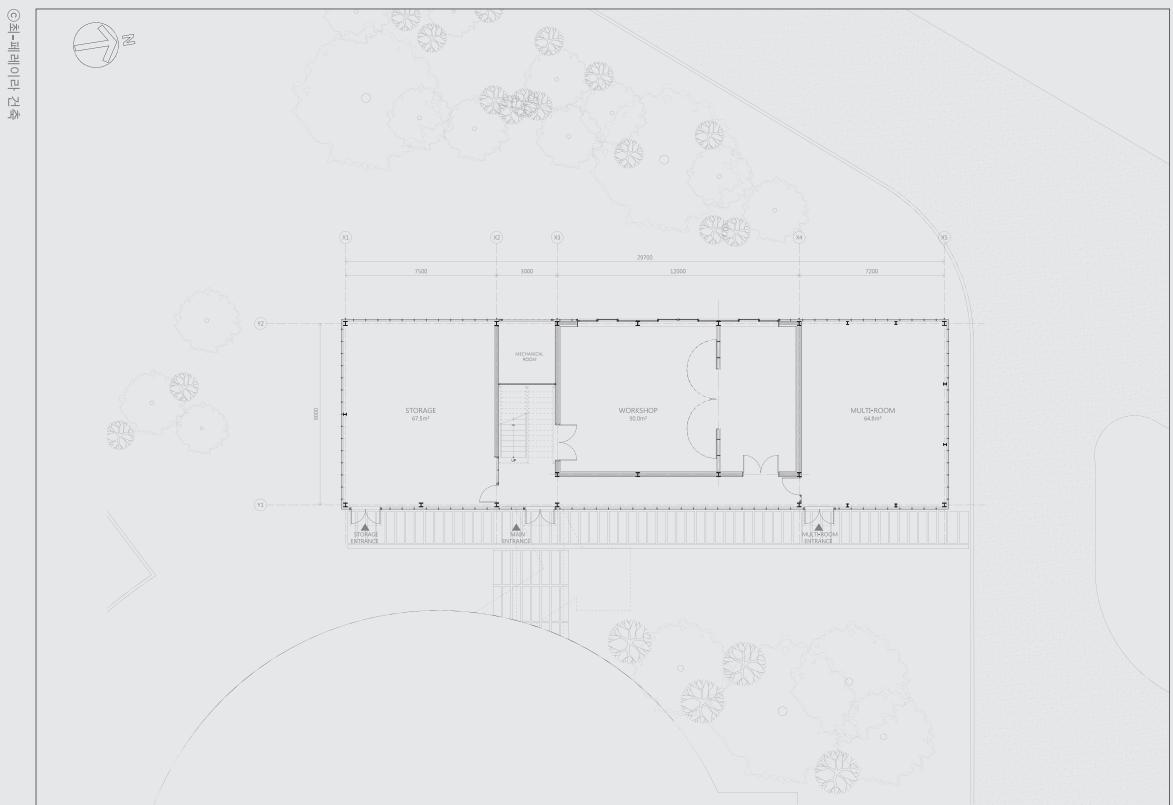


에코에듀센터 2층 평면도

architecture as a social sculpture

10 years ago we started our practice with the idea that architecture is a percept, a bloc of perception. A visual, spatial phenomenon, charged with meaning. it was a very open, abstract ground to start from, but it allowed to not really minding about tectonics, taste or politics. it was also individualistic, in the sense that the core of the architectural phenomenon was the perceptive relation between an individual and the space/ percept. there was no hard frontier between architecture and sculpture.

Architecture has to be formally expressive, as you can't really escape it, your design is a cultural statement through a shape, voluntary or not. Starting a series of projects around 2005, being formally expressive wasn't a whim, it was central to the idea that for individuals, a rich, non-conventional experience is essential to our culture. It was a fight against normalization, a connection to art and architecture historical process of experiments. The formal expression was the answer to our times, a way to allow a rich individual experience against both the productivist moralism and crass commercialism pervasive in our culture, specifically in architecture.



에코에듀센터 1층 평면도



©Thierry Sauvage



상 공장과 비슷한 형태로 설계한
에코에듀센터
하 바깥 풍경이 비쳐 보이는
에코에듀센터 내부

자유로운, 고정되지 않은 공간

건축가다운 창의적 해결 방안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야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답은 ‘공공건축’이었다. 공공건축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성찰과 주장을 반영할 수 있었다. 건축은 때때로 혜영과 혀욕, 과장된 선전(propaganda)을 수반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자유로움과 개방, 다양한 상호작용, 교육과 창조 같은 가치를 건축에 담아내는 것이었다. 건축가로서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가까이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건축은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자 할 때 좋은 제재(題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공간을 서로 다른 용도의 공간 이자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설계하였다. 아트센터에 담기는 예술과 방문자 모두 상품화된 실체로 한정되거나 기능적으로 고정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입구를 만들어 각각의 공간이 ‘계층(hierarchy)화’되지 않도록 하였고, 공간들이 서로 열려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코에듀센터의 건축 요소는 거의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철골 구조와 플라스틱 외피까지 거친 편이다. 공장과 같은 형태로 외형을 설계하였고, 외피 소재로는 플라스틱을 일관되게 사용해 유동적이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각적 정체성을 갖도록 하였다. 반투명한 플라스틱 외피 때문에 에코에듀센터 안에서 벽을 보면 바깥 풍경이 색색으로 번져 보인다. 밖에서 바라볼 때 낮에는 마치 투명한 거울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분홍색과 노란색을 띤 라이트박스처럼 그 모습이 달라 보인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내부에서는 모든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내려다보거나 또는 올려다볼 수 있어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트센터의 공간을 즐기도록 하였다. 업사이클 아트 전시, 입주 작가 레지던시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가득 찬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오늘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자유로움의 종착점이란 있을 수 없지만, 사회 공동의 의지를 통해 자유의 순간들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But the way the world is changing pushed us to adapt creatively. The individual experience wasn't enough. With public buildings we had the opportunity to include a social reflection. Architecture can serve vanity, greed and propaganda but our aim was to allow for freedom, a multiplicity of interactions, education and creation. As an architect there is so much you can do but a few aspect can help for that push, for a public space that is not alienated, but open for potential and free interaction.

We designed the center space as a place for different uses and interactions, as neither the art nor the visitors should be limited as commodified entities, functionally determined. Through multiple entrances we avoided any hierarchy in space, but allow a variety of ways along open, interacting spaces.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is rough, almost undetailed steel skeleton wrapped with a polycarbonate skin. We gave a factory shape and the unified skin gives the building a fluctuating visual identity; the view from inside as a colorful blur of the outside landscape, the change from night and day from quasi mirror to pink/yellow lightbox. Every space looks up or down to another one, people roam around with curiosity. Now the center is working full steam, with upcycled art exhibitions, residencies and educative programs. Freedom is never final, but sometimes moments of it happens through collective will.

©Thierry Sauvage



©Laurent Pereira



상 개방성,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강조된 공간

하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찾은

방문객들

작은집들이 모인아이들마을

홍성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김지혜
이영선

봄도시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357-7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
대지면적	805m ²
건축면적	191.9m ²
연면적	191.9m ²
규모	지상 1층
높이	5m
건폐율	23.84%
용적률	23.84%
구조	철근콘크리트 줄기초, 경량목구조
설계	김지혜 이영선
시공	THE Mhaus
설계기간	2016.5.~2016.7.
시공기간	2016.9.~2016.11.
건축주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중부지부



흥성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전경



세 동으로 나뉘어
마치 세 채의
건물처럼 보이는 모습

도시 농촌 어디서나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어린이들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도시 내, 또 농어촌 마을 내에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단 활동실과
연결되는
다목적 흘



상
하

단차를 이용해 단조로움을 탈피한 내부공간
계단서재



상
하

아이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가운데로 배치된 사무실
식당·집단 활동실2



작은 집들이 모여 만들어진 듯한 공간의 모습

최근 주민참여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주택이 아니라
여러명이 사용하게 되는 건축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공공건축물의 경우
시설의 사용자가 설계 단계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과정은 분명 필요하다.



홀성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전경

어린이들은 보호받으면서 놀 권리가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는 놓어준 아동들이 방과 후에 보호받으면서 놀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아동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와 놓어준 놀이터를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2014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도시 내 공간 부족’에 대해 고민하며, 어린이 공공시설 및 도시 내 보행 환경 연구를 해 오고 있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는 이 사업의 취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우리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측에서 요구한 프로그램은 29명의 어린이들이 지낼 수 있는 60평 내외의 지역아동센터 실내 공간과 외부 놀이시설이었다. 특히 설계 과정에서 아동 워크숍과 성인 워크숍을 각각 2번씩 진행한다음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아동 워크숍과 성인 워크숍

지역아동센터는 도서관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등록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워크숍은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할 대상을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누가 사용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아동 워크숍은 지역아동센터 예정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의 저학년과 고학년 각각 한 학급씩을 대상으로 진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홍성군 광천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일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두 번의 워크숍을 한 달 간격으로 진행하였다. 준비와 진행은 건축가가 하도록 되어 있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인 만큼 미술치료 전문가를 섭외하여 함께 진행하였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이유는 워크숍이 단순히 아이들에게서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개별작업으로 나무집에 품클레이나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함께하는 집을 만들어 보았다. 두 번째 워크숍은 1차 워크숍에서 만든 집들을 모아 함께하는 마을과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작업을 모둠활동으로 진행하였다.

◎
한국
환경
재단



상 총성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전경
하 세 동으로 나뉘어 마치 세 채의
건물처럼 보이는 모습



©孺도시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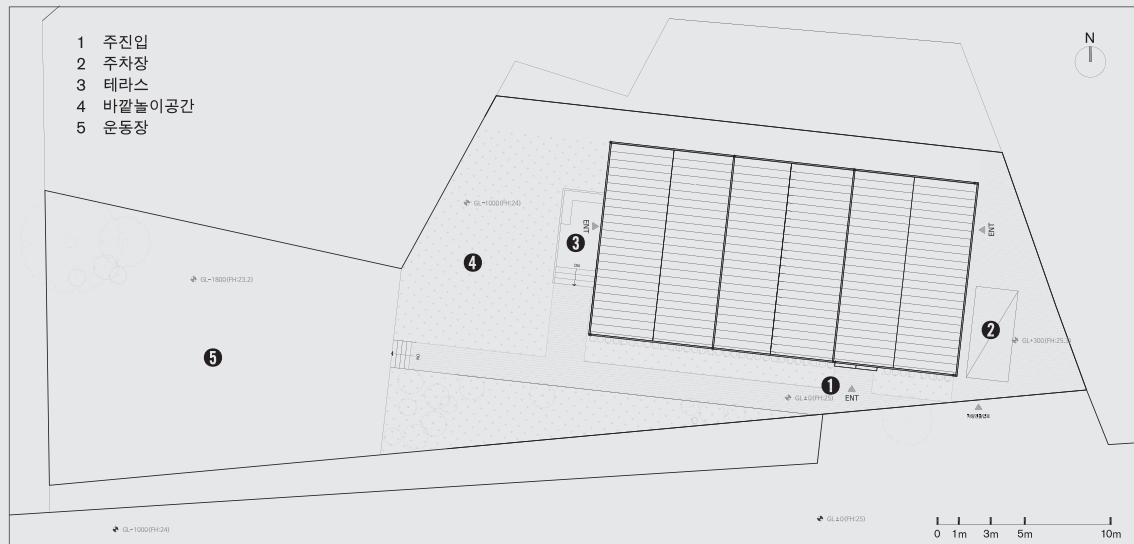


어린이 워크숍에서
아이들이 만든 '함께하는 집'의 모습

또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글로 표현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최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재료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워크숍 활동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작과 정리 시간을 짜임새 있게 꾸려 아이들이 워크숍 활동을 자기만의 경험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들은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낯설고 수줍어하면서 조심스럽게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진행자들에게 친밀감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흥미를 보였으며,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다음 번 워크숍이 언제인지 묻는가하면 “이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미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다니는 아이도 있어 우리가 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역아동센터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외부 활동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하였고, 내부 공간에 관해서는 소파나 다락방 등 아늑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성인 워크숍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광천읍은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높고, 주변 면 단위의 경우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또는 다문화가정 등의 비율도 매우 높다고 하였다. 이렇듯 맞벌이 가정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워크숍 시간을 저녁 6시 30분 이후로 잡았으나 홍보한 것에 비해 참여도가 높지는 않았다. 대신 광천읍과 주변 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과 선생님들이 참석해



배치도

주었다.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특성과 공간 사용 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집단 활동실과 주방에 대한 조언부터 기존 시설에서 아쉬운 점 등을 세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점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별도의 식당 공간에 대한 요구, 창고 설치, 상담실을 작은 음악교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교실과 분리해 달라는 부분 등은 실제로 설계에 반영되었다. 무엇보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아이들을 관찰해 온 선생님들의 운영철학과 운영자로서의 어려움 등 전술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던 것이 이 공간을 설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워크숍이 끝나갈 무렵 한 센터장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속 이 말을 떠올렸다.

2차 성인 워크숍에서는 1차 설계안을 준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1차 워크숍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과 선생님들 20여 분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조언을 해 주었다. 경험에 높아 있는 도움말에 따라 식수대 설치, 다목적 홀과 집단 활동실의 관계, 세면대와 화장실 배치 등을 수정하였다.

아늑한, 작은 집들이 모인 지역아동센터

워크숍과 건축주와의 미팅, 기존 지역아동센터 시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설계에서 중점을 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단체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아동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적 배려를 하고자 하였다. 집단 활동실과 다목적 홀을 각각 하나의 동으로 만들고 동과 동 사이에는 개별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배치하였다.

대상지는 기존에 목초지로 사용하던 부지였으며, 두 개의 필지를 합하여 물고기와 같은 형태이다.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짧아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다지 다양하지 않았다. 오후 놀이시간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서쪽 부지를 놀이공간으로 설정하고, 부지의 동쪽에 건물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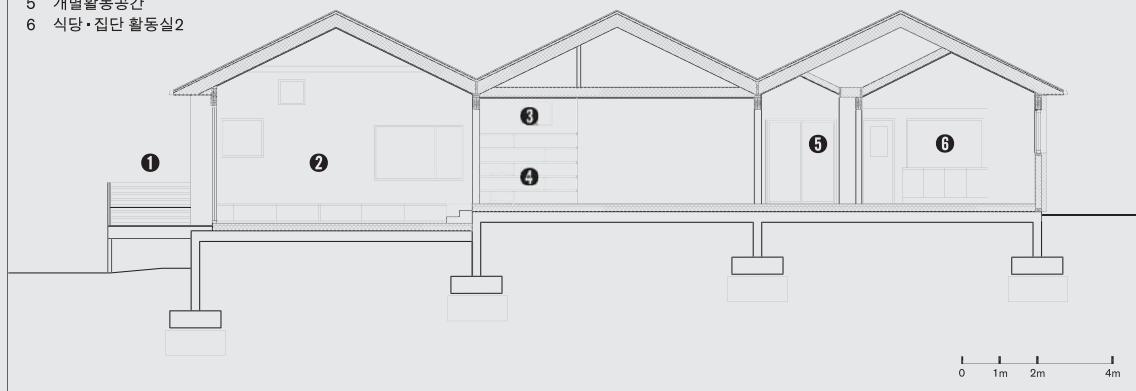
부지 주변은 과수원과 목초지로 둘러싸여 있고, 근처에 아파트 몇 동이 있는 것 말고는 한적한 곳이다. 60여 평을 세 동으로 나누어

◎한국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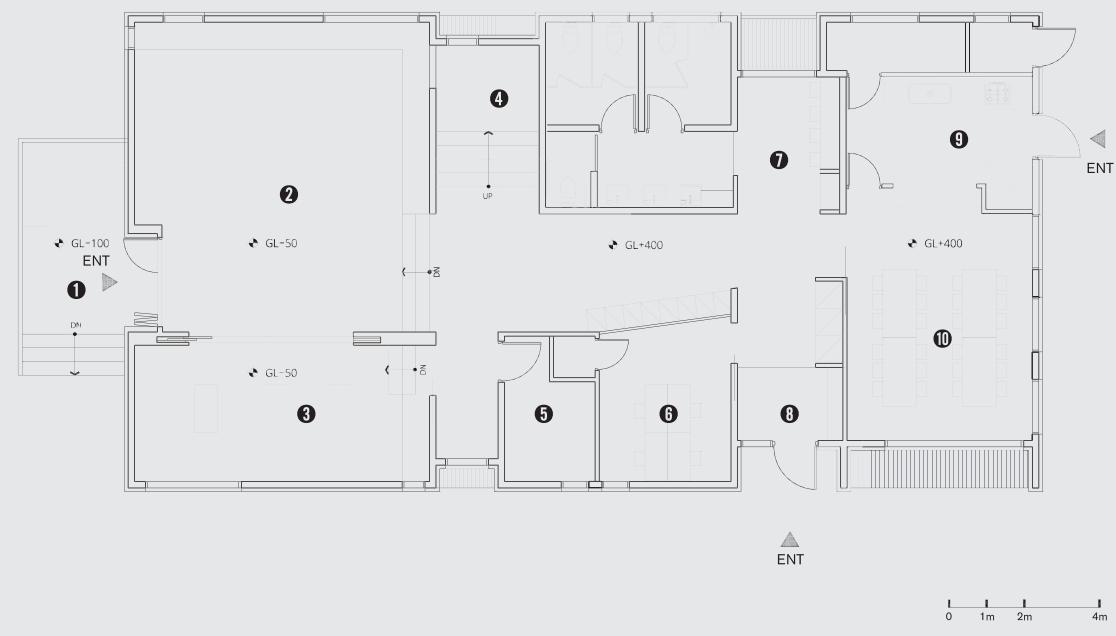
상 집단 활동실과 연결되는
다목적 홀
하 작은 집들이 모여 만들어진 듯한
공간의 모습

- 1 테라스
- 2 다목적 훌
- 3 계단위서재
- 4 계단아래서재
- 5 개별활동공간
- 6 식당·집단 활동실2



단면도

- | | |
|-----------|---------------|
| 1 테라스 | 7 개별활동공간 |
| 2 다목적 훌 | 8 현관 |
| 3 집단 활동실1 | 9 주방 |
| 4 계단서재 | 10 식당·집단 활동실2 |
| 5 상담실 | |
| 6 사무실 | |



평면도

마치 세 채의 건물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이것은 내부 공간을 기능적으로 나눈 것이기도 하다. 동선이 겹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큰 실을 양 끝에 배치하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 선생님들의 도움을 언제든 요청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가운데 두었다. 활동 공간이 각각 작은 집처럼 느껴지도록 하였고, 센터의 느낌보다는 커다란 집 혹은 작은 집들이 모인 것과 같은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각 동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는 여유공간을 두어 개별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각 공간의 층고와 높이를 다양하게 하여 공간적으로 단조롭지 않게 하였고, 조명도 이에 맞추어 다르게 설계하였다.

진행 중에 설계 변경된 것과 아쉬운 점

성인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가장 많이 토론하고 고민한 두 가지는 다목적 홀·사무실·식당 및 집단 활동실의 배치와 다목적 홀의 단차 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입구 쪽에 다목적 홀이 있고 이와 연결되어 활동실이 있는 형태인데, 이 경우 다목적 홀의 활동이 출입하는 사람들에 의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어 다목적 홀과 집단 활동실을 양 끝에 배치하였다. 이런 배치는 익숙하지 않은 형태라 이에 대해 많은 토론을 벌였다. 결국 몇 번의 설계변경 끝에 다목적 홀과 집단 활동실 겸 식당이 현관 홀을 중심으로 양 끝으로 위치하는, 현재와 같은 배치를 확정지었다.

또 시설 내 공간 사이의 단차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서측 높이공간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다목적 홀과 외부높이공간이 대지의 조건상 단차가 1m 이상 생기게 되는데, 이 단차를 줄이고 내부공간을 단조롭지 않으면서 좀 더 아늑하고 밝은 공간을 만들고자 다목적 홀의 바닥을 다른 실보다 50cm가량 낮게 설계하였다. 계단 세 개 정도의 높이였으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단차를 두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조금은 다른 시도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단차를 두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결과적으로 더 흥미로운 내부공간이 연출되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아쉬운 것은 대지를 남측 도로 높이와 맞추기 위해 대지 전체를 평균 1~2m 성토하였는데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할애하는 바람에 외부 높이시설에 많은 비용을 쓸 수 없었던 점이다. 그러나 워크숍에서 센터장들이 얘기하였듯이 어쩌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과 달리 거창한 시설보다 그저 뛰어놀 공간, 함께 공놀이를



상 하 단차를 이용해 단조로움을 탈피한 내부공간
계단서재



◎ 08
설계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상상한 것보다 어린이들 스스로 놀이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참여 설계

최근 주민참여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복지시설 등 다수가 이용할 공공건축물의 경우 시설의 사용자가 설계 단계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과정은 분명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총 4회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주민참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를 설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자칫 설계에 쓰일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만 집중하여 그 대상을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의 경우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우리는 두 번의 아동 워크숍에서 미술치료 전문가를 섭외하여 진행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서 지켜야 할 것과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 워크숍 대상인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이들이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시설을 직접 이용할 이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모든 예상 이용자들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도 없고 실제로 소수의 몇몇 사람들과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상지와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 없이 부분적인 의견만을 수렴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용자들을 오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더 많아져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놓어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어디든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주거지에서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공원 등 어린이들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지역 내에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 아이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가운데로 배치된 사무실
하 식당·집단 활동실2

auri 소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44

포럼 및 세미나

150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auri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도시 미래정책 개발체계 연구	조영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이여경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윤주선
	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김은희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이규철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적용 방안	박성남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방향 연구	김용국
	건축자산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이민경
	신 기후체제 대응 건축부문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 연구	이은석
	차세대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건축 및 도시공간의 대응방안 연구	오성훈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연구	엄운진

기본과제

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도시 미래정책
개발체계 연구

인공지능과 스마트사회 등 제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통념 관행 경험 직관에 의존하던 의견기반 정책(Opinion-Based Policy)이 증거기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데이터라는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활용해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정보 공개와 개방을 확대하여 지난 2013년 6월 정부3.0 추진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로 텍스트마이닝, 소셜네트워크 분석, 계량정보학 등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통합적 미래연구가 늘고 있다. 주요 국가 정부와 산업체에서는 빅데이터를 각종 문제 해결 및 이슈 대응뿐 아니라 미래 전략과 수반되는 전략적 의사 결정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건축·도시 분야 정책은 주로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전문가 의견과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의 이해에 따라 의견과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도시 분야의 사회·경제 환경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도시 정책 개발체계가 필요하다. 건축·도시 정책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며, 정책 수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증거기반의 정책 개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빅데이터 관련 선행 이론을 검토하면서 건축·도시 분야 빅데이터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을 위한 데이터별 특성을 연구하고 각각의 빅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모델을 설계하여 건축·도시 분야 정책개발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요구를 객관적으로 분석·제시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3.0 기반의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영진

이여경

②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정부는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합리화와 인허가 체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14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건축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건축행정과 이로 인한 시간 경제적 손실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선 지자체에서는 건축행정 업무와 민원의 증가로 조직과 인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가 우리나라 건축행정에 대해 “건축품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등 건축행정의 전문성 확보 문제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건축행정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입법행정이었으며, 수요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념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역시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과 현황 진단을 토대로 수요자 입장의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의 불편사항과 서비스 공급자인 정부나 지자체의 여건을 분석하여 현행 건축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내외 정책과 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와 같은 건축행정서비스의 개념 정립, 현황 진단 및 국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궁극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이를 통해 건축행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

③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선도지역 국비지원 사업이 2017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며 선도사업 종료 이후 지속화 방안이 미흡한 지역이 많다. 도시재생 국비지원사업은 지원기간 4~5년 내의 원결적 사업이 아닌, 지원기간 동안 마중물 예산을 토대로 지원 종료 이후 자생적 도시재생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자생력을 키워가기보다 보조금 의존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부채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속화 방안 마련이 어려운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에도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의 자생력 강화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자생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 연구에서는 민관협력에 의한 도시재생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력을 기초로 공동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춰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 방식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제도화되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민관협력 도시재생 체계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 정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사업성 확보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연구는 관련 전문가·자문회의와 실제 대상지의 유휴 공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한다.

이 연구는 국비지원 종료 이후의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자생적 재생 방안 모색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적 부동산 (public real estate: PRE)의 관리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주선

**4 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9만 1,000명(3.1%)이었으나 2015년 662만 4,000명(13.1%)으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0%가 노인 인구로 구성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안전사고의 증가와 그로 인한 비용문제로 직결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한 해 노인 사망자 수 1만 995명 중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6.5%를 차지하고 그로 인한 손실액을 17조 1,11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노인 개개인의 안전성 확보 차원을 넘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 문제와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5년)'을 발표하고 '공공실버주택', '고령층 전세임대 신규공급'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활공간에서 노인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2015년 기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427개소 중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고려한 안전·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이 7%(31개소)에 그치는 점도 현행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국가의 주요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노인복지정책 분석,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현행 제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분석, 정책 및 현행 제도 간 상충 사항 도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이며, 이러한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은희

* 최문갑(2009), 「노인의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사고유형 차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2.

**5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근대건축물은 사용한 지 수십 년이 지나 다양한 수준의 보강과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문제와 철거 후 신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증대 등 이유로 근대건축물에 대한 철거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학교, 공장, 공공시설 등의 근대건축물을 모두 보존하여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선행 단계로서 존폐를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2001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와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우수건축자산」 제도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 기준에 있어서는 경관·역사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 등 보존적 가치를 중심으로 근대건축물을 평가하고 있다.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미래 가치로서 경제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방법론이 없는 상황이다. 보존과 활용의 가치는 어느 한쪽의 가치를 추구하면 다른 한쪽의 가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동시에 충족되기 어렵고, 예비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와 건축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의 상충되는 가치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존과 활용을 위한 근대건축물 가치 기준의 개념을 정립하고, 근대건축물의 가치 기준과 세부 지표의 구체화에 대한 다양한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문화재로서 보존 가치와 건축자산으로서 활용 가치의 기준 및 구체적인 세부 지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근대건축물의 가치 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대건축물의 활용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등록문화재 제도의 보완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규철

⑥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적용 방안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캐나다·호주 등 서구 선진국에서 주거 안정화 프로그램이나 지역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CLT)을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공동체토지신탁은 보통 토지임대 방식을 통해 초기 주거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고, 재판매 시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 있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어 지역 발전에 따른 가치를 공유한다.

최근에 전세 부족난과 월세 급증 및 임대료 급증으로 인해 삶터의 안전성이 악화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균형형 도시재생사업 등 쇠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조금 재정지원 종료 후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동체 발전 가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민들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지역 관리를 위해 공동체토지신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토지신탁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신탁, 지역사회관리를 위한 협동조합 형식의 도시재생 신탁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토지신탁 제도 운영요소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향후 공동체토지신탁 적용과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토지신탁 도입방안 모색을 위해 다음의 연구 질문에 답해 보고자 한다. ▲국내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운영요소는 무엇인가? ▲공동체토지신탁 도입·적용이 가능한 부문과 도입 시 제약요소는 무엇인가? ▲공동체토지신탁을 건축도시공간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공동체토지신탁 제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입·적용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제도의 발전·개선 필요사항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박성남

⑦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방향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열섬현상, 홍수, 미세먼지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다. 도시녹지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도시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오히려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건축물의 녹화가 도시녹지 확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건축물 조경을 녹색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요소로 인식하여 도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78년 「건축법」 안에 '대지의 조경' 조항을 마련하였다. 40년이 지난 오늘날 '대지의 조경' 제도는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요소로 인식되어 점차 완화·폐지되는 추세이다. 건축물 조경 면적 확충과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 구현을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건축물 조경 제도와 조성·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건축물 조경 관련 법령과 조례, 건축물 조경 설계 – 인허가 – 준공 – 유지·관리 과정을 검토·분석한다. 둘째, 해외 건축물 조경 제도와 조성·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건축물 조경 제도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녹지가 부족하며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지역을 선정하여 건축물 조경 제도의 정량적 정성적 변화에 따른 환경적 파급효과를 측정한다. 넷째, 건축물 조경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조경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김용국

⑧ 건축자산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옥처럼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지역의 가치 있는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관리·활용할 수 있으며,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통해 개별 건축자산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간환경까지를 포함한 면(面) 단위 관리까지 가능하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일부 사항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역 내 기반시설의 정비와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자산진흥구역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최소 2~3개의 기존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중복될 여지가 많다. 또한 면 단위로 건축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간 정합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건축자산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 연구에서는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지역·지구·구역 제도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건축자산진흥구역과의 중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과 도시재생·경관 개선·문화융성 등 다양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민경

⑨ 신 기후체제 대응 건축부문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 연구

2016년 4월 22일 우리나라 168개국이 참여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제협약 참여에 따른 국내 후속절차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이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교토협약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적 노력은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거듭할수록 강화되어 왔다.

파리협정은 기존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량에 따른 차별적 실천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정책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온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변화 양상과 평가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역량에 관한 연구가 보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연구대상 중 건축물은 국민 대부분의 삶터이자 기후변화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상인 거주자는 우리 스스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은 건축물과 거주자로 한정하고, 현재 건물이 지닌 적응능력(Capacity)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Impact)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 건축물이 거주자로 하여금 현재 건축물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확인하고 계획적 대처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즉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지표화하고자 한다. 이때 인구사회학적 지표를 활용하여 거주자의 소득·건강 수준에 따라 건물의 회복탄력성이 연동할 것을 가설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거주자의 항상성, 건축물의 취약성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이 연구과제의 주요한 방향이다.

이에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방법론을 정립하고, 관련 연구의 기초데이터로서 건축물과 거주민을 중심으로 한 연차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리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의 변화를 지리정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은석

**⑩ 차세대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건축 및 도시공간의 대응방안 연구**

차세대 교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의 교통체계가 비약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그 정도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건축과 도시공간의 발전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러한 공간적인 변화에 건축과 도시공간의 이용과 관련되어 계획·설계·운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모색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승용차, 물류체계, 신호체계 등의 광범위한 변화로 인해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별 가로의 설계, 개별 건축물의 입면이나 평면, 주차장의 계획과 설계, 이러한 공간적 요소들에 대한 규제 등이 전반적으로 재고될 필요성 있다. 또한 이러한 선제적 검토를 통해 교통수단이나 교통체계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차세대 교통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건축적 질과 도시공간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전개될 차세대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른 건축·도시공간의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교통기술의 발전상을 예측하기보다는 건축·도시공간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통기술 발전 로드맵 등을 검토하면서 건축·도시공간 영역에의 함의가 큰 분야를 도출하고, 그 분야의 향후 변화 및 발전상에 대한 예측을 시행하고자 한다. 도출된 유관 교통기술 분야의 발전상 예측 결과를 토대로 차세대 교통기술이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 미칠 영향력을 추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건축·도시분야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건축·도시공간의 측면에서 교통기술의 적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측면에 대한 환류요소의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기존의 교통기술 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들에 걸쳐 폭넓은 자문을 통해 추정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⑪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연구**

그동안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진행되어 온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회고의 시점이 도래하였다. 그중에서도 공공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자체 정부에 의해서 기획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공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성 과정은 기획부터 발주·계약(설계자 선정)·설계·시공·유지·활용까지 전 단계로 하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초연구로 단기간의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한국 건축의 역사에 대한 콘텐츠화를 공공건축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대한 방향도 검토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공공건축물을 통해서 본 건축 담론을 시기별·용도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 의도는 건축계에서만 다루어졌는지 또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는지, 당시에 논의된 담론은 현재에도 유효한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러한 건축 도시 담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과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등 관련 사업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업운진

오성훈

포럼 및 세미나

auri

2017 건설산업정책 공동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1월 24일 건설회관 종 회의실에서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2017년 건설산업의 10대 정책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 선하고 2017년 건설산업에 대한 관·산·학·연의 관심도를 높이며 상생협력의 건설문화를 증진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기조발제를 맡은 이복남 교수(서울대학교)는 '한국 건설을 법과 제도로부터 해방시켜라'는 주제로 국내 건설이 처한 현실을 지적하고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건설정책, 주택·토지, 건설기술, 도시재생에 대한 부문별 주제발표가 진 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영덕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규제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건설산업 환경과 규제의 특성을 소개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

auri 소식

Vol.25
Spring 2017

과 경제 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하여 건설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일 본부장(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및 주거복지 이슈와 정책 대응방 향'을 주제로,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증대를 위한 대응 방향을 제 시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박환표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건설기술 부문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건설산업의 이슈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건설기술에 대해 소개하였다.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는 네 번째 주제발표에서 '건설산업의 융합정책 방향'을 주제로 건설산업 융합의 현황 및 한계를 설명하고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융합정책 및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성남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원)는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도시재생 부문에 있어서의 건설산업 관련 이슈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김명수 교수(가톨릭대학교)를 좌장으로 조준현 본부장(대한건설협회), 이원규 본부장(대한전문건설협회), 김정욱 박사(한국개발연구원), 김정희 과장(국토교통부)이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백혜인



20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2월 23일 서울 파시스 본사 Xspace Hall에서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존중받는 생로병사'라는 대주제 아래, 지난해 '출산환경을 생각한다'에 이어 올해는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를 통해 육아환경의 물리적 환경과 함께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육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선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소통과 돌봄이 있는 동네'를 주제로, 유명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가 본인의 경험을 담은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서의 공동육아 사례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유다은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는 '육아 파트너십을 위한 도시공간 환경'을 주제로 육아 주체에 따라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여경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디자인 환경'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여경 부연구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관리의 필요성과 관련 지침 실태를 설명하고, 디자인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혜란 소장(우리도시기술사사무소)을 좌장으로 발제자들과 이경선 교수(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조진일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들은 보육환경의 질에 대한 고려와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에는 건설 분야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보육환경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보육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백혜인

news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16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6-1

건축물 범죄 안전 디자인 성능에 관한
연구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범죄안전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21,000원

AURI-기본-2016-2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공공·민간분야 활용방안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6-3
건축을 안전강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방향 연구

22,000원

AURI-기본-2016-4
지역 맞춤형 공공건축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방향

20,000원

AURI-기본-2016-5
쇠퇴지역 공·폐가 재생 및 활용

정책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6-6
유류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17,000원

AURI-기본-2016-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23,000원

AURI-기본-2016-8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건축적 지원방안 연구
-외래진료부를 중심으로

19,000원

AURI-기본-2016-9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9,000원

AURI-기본-2016-1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비
건축·도시분야 대응방향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6-11
도시건축박물관 건축기록물
수집·관리방안 연구

9,000원

AURI-기본-2016-12
국공립어린이집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6-13
경관협정 실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20,000원

AURI-기본-2016-14
역사문화도시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고도(古都)
보존성지구를 중심으로
22,000원

AURI-기본-2016-15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균현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17,000원

AURI-기본-2016-16
시지각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계획
개선방안 연구 -건축을 통한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22,000원

AURI-기본-2016-17
영상정보를 활용한 가로환경
평가 체계 연구 -360°동영상과
VR 기기의 활용을 중심으로
25,000원

AURI-정책-2016-1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건축규제 및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11,000원

AURI-정책-2016-2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방안
11,000원

AURI-정책-2016-3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건축법 및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9,000원

AURI-정책-2016-4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
8,000원

AURI-정책-2016-5
지구단위계획 변경제도 합리화 방안
-경미한 사항 변경을 중심으로
11,000원

AURI-정책-2016-6
도시재생사업 청년층 참여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9,000원

AURI-정책-2016-7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9,000원

AURI-정책-2016-8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연구
9,000원

AURI-정책-2016-9
소규모 주택 활성화를 위한 안심
집짓기 정책 방안
10,000원

AURI-정책-2016-10
행정중심복합도시 보행환경 진단 및
향후 조성방향 제안
13,000원

AURI-협동-2016-1
국토경관 환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2)
19,000원

AURI-한옥-2016-1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진단을 통한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방안 연구
16,000원

AURI-보행-2016-1
보행정책 성과 평가체계 개발 연구
25,000원

AURI-보행-2016-2
가로단위 보행환경 평가체계 개발 연구
26,000원

AURI-보행-2016-3
보행자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11,000원

AURI-건축서비스-2016-1
건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
설계 대가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13,000원

AURI-건축서비스-2016-2
건축을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개선 연구
11,000원

AURI-범죄예방-2016-1
도록복합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20,000원

AURI-마을재생-2016-1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의
경험과 과제
9,000원

AURI-공공건축-2016-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
13,000원

AURI-공공건축-2016-2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15,000원

2015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5-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공용재산취득사업을 중심으로
19,000원

AURI-기본-2015-2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5-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연구
32,000원

AURI-기본-2015-4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5-5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23,000원	AURI-정책-2015-8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4-5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32,000원	AURI-정책-2014-8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5-6 사람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연구 31,000원	AURI-협동-2015-1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1) 26,000원	AURI-기본-2014-6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방안 연구 12,000원	AURI-협동-2014-1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 21,000원
AURI-기본-2015-7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27,000원	AURI-한옥-2015-1 한옥 부분수선에 관한 거주자 면담 및 점검 사례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4-7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마련 정책 연구 14,000원	AURI-한옥-2014-1 현대 한옥기술의 변화와 전망 29,000원
AURI-기본-2015-8 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18,000원	AURI-한옥-2015-2 목재수종 및 제재방법에 따른 단기변화 연구 11,000원	AURI-기본-2014-8 여건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18,000원	AURI-한옥-2014-2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 개발 연구 (3) 19,000원
AURI-기본-2015-9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 18,000원	AURI-한옥-2015-3 한옥 공공건축物을 발주절차 개선방안 10,000원	AURI-기본-2014-9 주거다양성을 위한 단독주택지의 계획적 조성 정책 연구 30,000원	AURI-한옥-2014-3 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 연구 (1) 16,000원
AURI-기본-2015-10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28,000원	AURI-보행-2015-1 2014년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27,000원	AURI-기본-2014-10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사례 및 중장기 운영방안 22,000원	AURI-한옥-2014-4 한옥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기준 및 실행방안 연구 24,000원
AURI-기본-2015-11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17,000원	AURI-건축서비스-2015-1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기기준 마련 연구 13,000원	AURI-정책-2014-1 건축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연구 8,000원	AURI-한옥-2014-5 한옥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 23,000원
AURI-정책-2015-1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12,000원	AURI-건축서비스-2015-2 리모델링 설계 표준업무 설정 및 대기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12,000원	AURI-정책-2014-2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침 마련 연구 13,000원	AURI-한옥-2014-6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인문학적 가치 발굴 연구 (3) 22,000원
AURI-정책-2015-2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9,000원	AURI-기본-2014-1 생활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 22,000원	AURI-정책-2014-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6,000원	AURI-보행-2014-1 보행환경과 행태: 조사분석 보고서 (Ⅱ) 19,000원
AURI-정책-2015-3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10,000원	AURI-기본-2014-1-자료 [별책]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 면접조사 9,000원	AURI-정책-201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10,000원	AURI-보행-2014-2 2013 아마존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27,000원
AURI-정책-2015-4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17,000원	AURI-기본-2014-2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재생정책 연구 21,000원	AURI-정책-2014-5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7,000원	AURI-보행-2014-3 2013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24,000원
AURI-정책-2015-5 활용 가능한 국유건축물 유형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13,000원	AURI-기본-2014-3 옹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23,000원	AURI-정책-2014-6 한옥의 효율적 등록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연구 9,000원	
AURI-정책-2015-6 건축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향 11,000원	AURI-기본-2014-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29,000원	AURI-정책-2014-7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11,000원	
AURI-정책-2015-7 건축을 옥상공간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9,000원			

2014년 연구보고서

AURI-기본-2014-1 생활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 22,000원	AURI-정책-2014-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6,000원	AURI-정책-201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10,000원	AURI-보행-2014-1 보행환경과 행태: 조사분석 보고서 (Ⅱ) 19,000원
AURI-기본-2014-1-자료 [별책] 생활환경개선사업 수행 마을기업 면접조사 9,000원	AURI-정책-2014-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10,000원	AURI-정책-2014-5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7,000원	AURI-보행-2014-2 2013 아마존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27,000원
AURI-기본-2014-2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재생정책 연구 21,000원	AURI-정책-2014-5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7,000원	AURI-정책-2014-6 한옥의 효율적 등록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연구 9,000원	AURI-보행-2014-3 2013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24,000원
AURI-기본-2014-3 옹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23,000원	AURI-정책-2014-6 한옥의 효율적 등록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 개선방안 연구 9,000원	AURI-정책-2014-7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11,000원	
AURI-기본-2014-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29,000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간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재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비매품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매뉴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비매품



사례로 보는 마을재생 시리즈 1
-장소중심 마을재생의
열 가지 키워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비매품



마을재생 리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 및 사업 특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
비매품



2016 건축·도시 정책
동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비매품



도심활성화 마스터플랜
-부산 친구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비매품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 가이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의 가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비매품



한국 시공 핸드북
이강민, 고영호, 김꽃승이
비매품



한국건축기준
안내서
이강민, 이세진
비매품



한국 등 건축자산 조례
제정 안내서
신치후, 김기람
비매품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5
차주영, 이상아, 혼태환
비매품



마을재생 거점모델로서
공유주거 조성·운영 매뉴얼
서정진, 변은주
비매품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매뉴얼
김승남, 조상규, 김신성 외
비매품



한국 고치는 책 Ⅲ
-마당·담장·대문 그리고
외부설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